

밀양인권침해보고회
세 번째 보고서

공권력이 밀양의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2014년 1월 22일 (수) 오전 10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주최 밀양인권침해감시단, 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

목 차

I. 밀양 인권침해상황보고

II. 아무런 답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

III.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계획

IV. 사회적 합의 노력없는 공사강행의 문제점

– 밀양의 눈물, 그리고 우리 –

붙임자료1. 10월 25일 이후 일지 및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자료

붙임자료2. 헬리콥터 비행으로 인한 밀양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 실태



밀양 인권침해상황보고

I. 들어가며

밀양 765kv 인권침해감시단이 3개월 전인 작년 10월 28일에 인권침해중간보고회(2차)를 열었다. 당시 밀양 주민들이 겪은 인권침해를 1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통행금지, 무리한 사법처리, 표적수사, 채증, 공권력의 폭력적 행사, 식별표시 및 복장 문제, 공무집행시 미고지, 집회금지 통고, 고립감을 목적으로 한 방문금지, 외부세력 매도, 생필품 반입금지, 부족절한 응급진료 및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지원 제한, 신체적 자유에 대한 모욕적 침해, 주민들에게 인격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조롱과 폭력적 대우’

모든 유형이 경찰 주도하에 자행된 인권침해다. 금번 3차 보고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3개월 간의 일지를 정리하였다. 지난 중간보고회 이후 주민들의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악화되었다. 고 유한숙 어르신의 죽음에 대한 경찰의 편파적인 언론 플레이와 시민분향소에 대한 물리적 공격과 비인도적인 행정조치들, 공사지역이 마을 인접지로 이동하면서 발생한 새로운 충돌과 무리한 형사 처벌 시도 등이 발생하였다.

II. 인권침해상황

1. 경찰의 권한남용

(1) 과격한 진압, 무분별한 연행

경찰관의 권한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또한 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 제4조 제1항) 그러나 밀양에서 경찰관은 주민과 연대하는 시민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 투쟁에 참여한 주민들의 평균 연령은 70세에 이른다. 경찰과의 충돌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다치고 있다. 지난 인권침해중간보고회(2차)에서도 수없이 지적되었지만, 경찰의 과도한 법집행

은 그 이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경찰은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을 들먹이며 자신의 마을을 지키려 싸우고 있는 주민들과 연대하는 시민들 과격하게 진압하며 연행하고 있다. 10월 공사강행 이후 12월 8일까지 경찰과의 충돌로 인해 10월에 46명, 11월에 18명, 12월에 4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어르신들은 입을 모아 얼마나 더 죽어야 끝이 나냐며 절규하고 있다. 연대하는 시민들은 어르신들을 곁에서 지켜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억울하고 분해하고 있다.

주민들은 경찰과 싸우고자 길거리에 선 것이 아니다. 작년 공사 재개 전까지만 해도 주민들은 경찰에 대한 적개심이 적었다. 그러나 공사 재개 이후 주민들을 향한 경찰의 일방적인 법집행 때문에 주민들이 경찰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평생 농사를 지으며 산골짜기 마을을 지키며 살아온 주민들에게 경찰의 이러한 법집행은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공사 재개 이후 작은 다툼을 큰 싸움으로, 괴로움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은 경찰의 과도한 법집행 때문이라는 주민 주장이다. 이것을 유념해서 들어야 한다.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당장 이러한 무리한 법집행을 멈추어야 한다. 밀양 주민들의 저항은 정부와 한전의 불통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다. 주민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권력자의 지팡이에 지나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 오명을 씻기 힘들 것이다.

(2) 폭행 / 미행 / 감시 / 사찰

경남경찰청 국정감사장(10월 30일)에서 경남경찰청장은 공권력 투입이 과도하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추궁당했다. 그동안 자행된 인권유린, 과잉진압의 과오를 일부 시인하거나 시정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국정감사 중에도 잔인한 진압이 이루어져 주민 여러 명이 다쳤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경찰의 폭행으로 인해 주민들이 다치고 있다. 과잉진압 뿐만 아니라 경찰의 미행, 감시, 사찰로 인한 주민들의 겪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크다.

사례1

10월 30일 경남경찰청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인권유린, 과잉진압을 시정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을 때, 주민들과 연대하는 시민들은 경찰에서 폭행 당하고 있었다.

길을 줄지어 팔짱을 끼고 막고 있는 주민들을 향해 경찰들 돌진해서 가운데를 뚫고 양쪽으로 밀어붙이면서 할아버지 한 분이 넘어졌고 도미노처럼 연달아 주민과 시민들이 넘어졌으나, 경찰은 압박을 풀지 않고 계속 밀어 부쳤다. 그 와중에 주민과 시민들이 쓰러져 경찰들의 발에 찍히고 밟히는 상황에서 비좁은 공간 사이로 한전직원을 태운 경찰버스가 지나갔다. 한전직원이 다 지나갔는데도 경찰의 압박은 한동안 풀리지 않았고

위험한 상황은 계속되었으며, 아래에 쓰러져있던 시민은 당시에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자신의 힘으로는 그 자리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한다.

울산 시민 김00(여) 경찰이 머리를 신발로 찍어 상처 나고 피가 났으며, 순천 시민 심00(여), 손가락 인대가 늘어나고 손목과 온몸이 아픔, 울산 시민 이00(여) 손가락 제쳐졌다. 밀양 시민 김00, 안경알이 한쪽이 빠져서 밟혀 깨졌다. 상동면 고정마을 주민 김00, 허리와 목 부상을 당했다.

사례2

11월 25일 동화전마을 대책위와 주민 2명이 경찰관 3명을 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밀양경찰서의 수사관은 고소장의 사소한 형식을 문제 삼으며 짜증을 냈다고 한다. 주민들이 새로운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수사관은 다시 ‘6하 원칙에 따라 조리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며 주민의 말을 끊어 중단시키고 짜증을 내며 시비조로 말을 걸었다. 이를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수사관 교체신청을 했다.

사례3

11월 6일 122번 공사가 시작 되고 나서 여수주민들과 도곡마을 주민들이 현장에서 경찰과 긴 시간 대치. 저녁시간이 되어 집으로 가기 위해 도곡마을 주민들이 차를 타자 그때부터 경찰차량이 뒤따라왔다. 이를 눈치를 챈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내린 뒤 기다리자 경찰들이 “집에 안가세요?” 라고 계속 보채기 시작했다. 결국 주민들은 경찰이 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가는 걸 보고 집으로 돌아갔다.

사례4

11월 19일 122번 공사현장에서 내려오는 길에 주민들에게 채증과 협박을 하는 과정에서 충돌. 이후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장님 차를 타고 가는데 경찰차량이 따라 붙었다. 골목길에 류00(67세) 어르신이 내려 걸어서 들어가자 (그 골목에는 2가구만 살고 있음) 경찰들이 류씨 할머니라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차에 타고 있던 나머지 주민들이 들었다. 불안한 주민들은 집으로 가지 못하고 마을회관으로 갔으며, 경찰이 계속 따라와 다시 집으로 가지 못하고 농성장으로 돌아왔다.

사례5

11월 6일 전후 시간미상 저녁시간. 여수 주민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길목 앞에 낯선 사내가 서 있다가 집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다. 다른 주민 집 앞에서 경찰이 봉고차를 돌리고 있는 모습을 봤다. 혹시 도둑이 들었나 싶어 김00씨 집으로 바빠 가보니 사복경찰이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여기서 무엇을 하냐, 물으니 사복경찰이 길을 잃어버렸다고 답하고는 차를 타고 나갔다.

“혼자 사는 집구석에 시커먼 옷 입은 남자가 집주변에 서성대니까네 도둑인줄알고 겁이나네 근데 차를 보니

까 농성장에서 보던 경찰차인가라 그래가 뭐하노하고 물으니까네 길을 잃었다안카나 그라고 뛰가뿌데 여기서 길 잃은 사람 침 본다 다 길이 뚫리있는데 잃어묵을게 어딿노”(김00씨 증언)

(3) 통행제한

경찰은 장을 보고 마을로 들어가려는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였다. 주민들이 이에 항의하였고 대치 와중에 어르신 한분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자 여러 명의 변호사가 공사 현장으로 향하였다. 경찰은 마을입구에서부터 이들의 통행을 제한하였다. 헌법상 기본권을 문제 삼으며 이에 항의하는 변호사들에게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경찰의 기계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변호사들조차 발길을 돌려야만 하였다. (통행제한에 관한 헌법소원이 진행 중)

주민들은 자신의 땅이 송전탑 공사 예정지에 있으면 자신의 땅을 자유로이 통행하지 못한다. 경찰의 상시적 통제에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자신 소유의 땅이 아니더라도, 어릴 때부터 익숙한 마을의 공간들에 대한 일상적인 출입제재에 울화를 토로하였다. 일부 마을에서는 마을 입구에서부터 경찰 병력을 배치하여 차량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 자신의 재산과 고향, 삶의 근거지와 관련한 경찰 통제로 인해 주민들의 상실감이 깊어지고 있다.

통행제한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혹은 제6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현재 밀양에서 이루어지는 통행제한은 송전탑 공사부지와 3~4km 떨어진 마을 입구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원거리 통행제한의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나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혹여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한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시작되는 통행제한은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사례1

12월 26일 132번 진입로. 장을 보고 마을로 넘어가려는 주민들 통행을 금지하자 주민들이 경찰에게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과 주민의 마찰. 이후 낭떠러지 쪽으로 대치 중에 넘어지며 실신하셨던 주민 한00(66세)을 이송하기 위해 구급차를 불렀다. 경찰은 구급차를 불렀다고 했으나, 구급차는 40분 넘어 도착했고 차가운 바닥에서 40분간을 쓰러져있었던 한00은 응급실을 도착하고도 오한으로 괴로워 했다. 그리곤 하염없이 “살고 싶지 않다. 나를 죽여 달라”며 우셨다. 밀양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했다.

사례2

4명의 변호사가 11월 16일 89번 송전탑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1.5km나 떨어진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의 바드리 입구를 지나가려고 했다. 그러자 경찰관들이 마을 초입에서 송전탑 공사현장으로 이어지는 통행로 한가운데에 ‘149-2 비상출동’이라고 표시된 대형 경찰버스를 주차하고 틈새길을 막아섰다. 변호사들이 위 통행로를 지나가길 요청했으나, 경찰관들 중 한 명인 박00는 소속이 어디인지, 누구로부터 받은 지시인지 밝히지 않은 채, ‘자신도 위에서 지시받아 전국에서 조립되어 왔다’는 모호한 말을 되풀이하며 청구인들을 계속 막아 청구인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했다.



(4) 불법채증

몰카 형태의 채증 카메라까지 등장하였다. 이 장비는 특수 영상기록 탐조등으로 불리는데, 캠코더를 내장한 고휘도 LED 플래쉬이다. 대낮에 영상 녹화가 가능한 탐조등을 들고 몰래 조작하며 주민들을 채증하는 것이 현재 밀양에서 활동하는 경찰의 수준이다.

경찰이 밀양에 주둔하기 시작한 이후 거의 모든 현장에서 채증을 남발하고 있다. 평화롭게 집회를 하거나 그냥 앉아서 쉬는 동안에도 밥을 먹는 동안에도 경찰과 공무원들에 의한 상시적인 채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법하고 과도한 채증에 대한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오히려 주민들의 분노를 높이고 충돌을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채증활동규칙에 의하면 “채증”이란 각종 집회, 시위 및 치안 현장에서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채증의 법적 근거로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를 들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진다고 하였다. 다만,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이 있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①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② 증거보전의 필요성 ③ 긴급성 ④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된 경우에만 영장 없이 촬영을 하여도 무방하다고 보았다.

그 동안 수차례 언급되었던 바, 밀양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채증은 평화로운 집회나 일상생활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라 볼 수 없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

도 인정하기 힘들다. 이러한 밀양에서의 일상적이며 광범위한 채증을 영장주의 예외로 인정할 수 없다. 무분별한 채증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사례1

10월 29일 경찰이 랜턴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채증하는 것으로 보였다. 대낮에 어깨에 댄 랜턴에서 계속 빛이 나면서 사람을 향해 높이 조절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작동하는 스위치가 있었다. 랜턴은 아니었다. 주민을 감금하고 통행을 금지한 것에 항의하자, 경찰관이 어깨에 끈으로 매고 허리위치정도에 오는 랜턴 모양의 물건을 계속 손으로 올렸다. 그 물건에서 하얀 빛이 나와서 계속 시민들 얼굴 쪽을 비추고 손바닥으로 물건을 올려 적당한 높이를 맞추는 것으로 보였다. 몰카가 거의 확실해 보였다. 불법채증 문제에 대해 계속 항의하니 몰카를 갖고 온 것 같다.

사례2

11월 1일 109번. 한전 직원이 차에 숨어서 채증하는 것을 활동가들이 발견하고 차를 돌려 대서 시야를 막아 놓았다.

(5) 익명 뒤로 숨어버린 공권력

공권력 행사가 익명 뒤에 숨어서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은 각종 공권력 발동에 대한 법적 근거 제시와 소속을 밝히려는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심지어 집단적으로 복면을 착용한 채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촛불집회시위 관련 직권 및 진정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에서 ‘경찰의 식별표시 미부착을 경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훈령인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149조(표지장 및 부속품의 부착 위치) “기동복 상의에는 명찰, 기동복 표지장, 기동복용 계급장을 각각 봉합 부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직접으로 위반하거나 그 취지에 반한 행위이다’라고 권고하였다.

프랑크 라 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보고서(A/HRC/17/27/Add.2, 2011.3.21.)에서 ‘진압 경찰복에 명찰, 식별 번호 또는 기타 신원 확인이 가능한 정보가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않아 과잉 진압 사건에 대한 조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또한, 경찰의 경우에도 배지를 달고 있지 않아 시민들이 폭행 또는 기타 형태의 폭력 혐의로 경찰을 제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도 주목한다.’라고 하였다.

외피에 이름이 표시된 식별표시 착용을 강제함은 물론 경찰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경찰들은 용역과 다를 바가 없다. 식별표시를 가리거나 미부착하는 행위는 진압경찰

이 시위대에 대하여 과잉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시위대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우려가 있다. 이는 안전과 인권을 중시하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는 경찰력 행사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집회시위진압 등 경비업무시에 상대방이 알아볼 수 있는 식별표시를 부착하고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1

10월 29일 사복경찰이 주민들 이름 부르면서 위촉감 준다. 바드리 주민들 이름 부르는 경우 많았다. 정보과로 추정되는 경찰들이다. 주민들 말로는 한전직원들이 개인사정(밥순가락)까지 알고 난 후 형사들도 알고 있는 듯 하다고 한다. 경찰이 사찰에 가까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경찰의 지위 이름 소속도 모른다. 사복 차림이거나 식별 표시 없기 때문이다.

(6) 119 구급대원 출입제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2조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의 방해를 금지하고 있는 바,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해가 현실화된 자에 대하여 의약품 반입 차단 및 의료진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생명권 및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작년 송전탑 공사 재개 이후 경찰의 구급차 혹은 의료진 출입 제한은 반복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경찰이 구급차 등의 출입을 제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러나 밀양에서는 주민이 음독을 했다는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이 구급대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민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였다. 밀양의 경찰들에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최소한의 의식도 없다. 송전탑 공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도 위에 있을 뿐이다.

사례1

12월 13일 오후 2시경, 밀양 송전탑경과지인 단장면 동화전마을 96번 현장 옆 황토방농성장에서 이 마을주민 권00(53세)가 수면제등이 포함된 다량의 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하여 응급 후송되어 밀양병원에서 2차례의 응급 위세척 후 현재 마산삼성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

당시 권00는 남편에게 '수면제 40알을 먹었다'며 전화를 하여 남편 A씨가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급히 산으로 올라가려 했다. 그러나 경찰은 주민증 제시(이분들은 실제 마을 주민들로 경찰은 이 서로 얼굴들을 알고 있었음)를 요구하고 상황 육하원칙을 대라고 하였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무슨 주민등과 육하원칙이 필요하냐'며 등의 다툼으로 시간이 지체되었다. 경찰의 계속된 주민증제시 요구에 집에 다녀오는 등 시간이 지체

되었다. 또한 경찰은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자, 왜 안 올라가는 주민의 항의에 '경찰이 못 올라가게 했다, 약이 아니라 술만 먹었다고 경찰이 말하더라'고 하여 주민의 항의 끝에 산 위로 올라갈 수 있었다.

2. 공권력의 비인도적 행태

경찰은 송전탑 공사에 항의하는 주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 경찰들이 주민들의 아침밥을 전투화로 건어차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경찰은 고 유한숙 어르신의 죽음 앞에서조차 비인도적인 행태를 보였다. 어르신이 돌아가시자 그 의미를 축소하려 사실을 적극적으로 왜곡하고 죽음이 개인의 문제인양 언론 플레이를 하고 시민분향소를 공격하였다.

(1) 주민들의 아침밥을 전투화로 건어찬 경찰

경남 밀양시 상동면 고답마을은 밀양 송전탑 전체 구간을 통틀어 피해가 가장 큰 마을로 손꼽힌다. 경찰은 고답마을에서 내려다보이는 공터에 숙영시설로 쓸 컨테이너를 집어넣기 시작했다. 1월 6일과 7일, 대충돌이 벌어졌다.

7일 아침 7시가 되어 아침식사가 배달되자 모닥불 곁에서 10여명의 주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 때 경찰 버스 6~7대가 주민들 곁으로 진입했고, 순식간에 주민들을 에워싼 경찰은 소화기로 불을 끄고 식사판을 엮어버렸다. 일부 경찰은 바닥에 떨어진 밥그릇을 발로 차 버렸고, 격분한 주민들은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네놈들이 인간이냐?' 면서 울부짖으며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고, 주민들이 구석으로 고착당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를 사이에 10여명이 다치고, 8명이 응급 후송되고, 6명이 연행되었으며, 주민들은 격분하여 쉽 없이 경찰과 몸싸움을 하며 격렬한 입씨름으로 경찰에게 분노를 토해내고 있었다.

법 집행에 앞서 주민들이 사람으로서 두려워 할 권리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송전탑 공사는 분초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다. 경찰의 법집행은 인권보호를 기반으로 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강희락 경찰청장이 201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하여 “집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원인은 각 사안마다 다르나, 집회를 경찰이 강제로 해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발언하였다. 밀양에서는 경찰로 인해 주민들이 폭도가 되어 가고 있다.

(2) 고 유한숙 어르신의 죽음조차 왜곡하는 경찰

12월 4일 오전, 고 유한숙 어르신께서 따님을 통해 ‘대책위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하였고, 오후 1시경 대책위 공동대표인 김준한 신부와 상황실 간사가 찾아간 자리에서 따님을 곁에 두고 다음과 같은 요지의 말씀을

하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결혼도 시켰다. 그런데 11월경에 한전 과장 1명과 또 다른 1명이 찾아와 (우리집이) 송전선로에서 얼마나 떨어져있는지 알게 되었다. 150m인지 200m인지 가까이
에 첼탑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았다. 첼탑이 들어서면 아무 것도 못한다. 살아서 그것을 볼 바에야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송전탑 때문에 농약을 마셨다.’

그러나 밀양경찰서는 12월 6일 보도자료를 내어 고인의 사망에 대해 “음독현장에 같이 있었던 가족을 상대로 음독 경위에 대해 확인하였던 바, 특정 사안으로 음독하였다는 진술은 없었다”고 발표하였다.

당시 경찰관과 함께 있었던 따님의 진술은 경찰의 보도자료와 다르다. “12월 3일 새벽 2~3시경에 경찰관
3~4명이 아버지가 후송된 병원으로 와서, 아버지에게 ‘왜 음독을 하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때 아버지가
눈을 뜨시며 ‘송전탑 때문에 약을 마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내용을 곁에 있던 경찰관 1명이 휴대폰으로 녹
음해갔다”고 한다.

고 유한숙 어르신의 죽음으로 유족, 밀양 송전탑 경과지 4개면 주민들, 밀양 대책위와 연대자들이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을 때조차 경찰은 그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 유한숙 어르신의 죽음조차 왜곡하
는 발표를 하였다. 주민들의 저항에는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진압하고 연행하여 주민을 자극하고 있는
경찰들이, 고 유한숙 어르신의 죽음 앞에서는 책임을 회피하여 제 한 몸 돌보기에 급급하다.

(3) 시민분향소에 대한 공격

밀양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희생은 지난 해 1월 고 이치우 어르신에 이어 또 다시 고 유한숙 어르
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전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고사하고 고인의 죽음을 모독했고,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마련한 분향소는 경찰의 폭력으로 짓밟히는 패륜적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다.
밀양시민분향소와 서울시민분향소 모두 경찰의 공격을 받았고 짓밟혔다.

사례1

인륜도 없고 법도 없는 아비규환의 현장. 12월 9일 고 유한숙 어르신의 밀양 시민분향소 설치 과정에서 발
생한 끔찍한 충돌이 발생했다. 밀양시청 앞으로 시민 분향소 설치를 위해 주민들이 이동하였으나 격렬한 충
돌이 발생하였고, 이어 밀양 시내에 경찰 병력이 차량 및 의경, 사복 형사 등으로 촘촘히 막아섰다. 시민들은
시민체육공원 들머리에 시민분향소를 위한 천막 2동이 설치했다. 그러나 경찰 100여명이 몰려와서 주민들
과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경찰은 3차례에 걸쳐 진입하여 결국 천막 2동을 모두 부수고 찢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아비규환의 현장. 그 과정에서 주민 4명(밀양시청앞 1명, 시민체육공원 입구 3명)이 119구
급차량에 응급후송되었다.

결국 노천에서 분향소가 설치되었고, 노숙할 태세로 추운 날씨 속에 노천 분향소가 유지되고 있다. 유족들이 노천 분향소에서 분향하고 난 뒤, 날씨가 몹시 추운 상태에서 노천에서 분향소가 유지되는 것은 고령인 다수 주민들과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므로 밀양시청과 협의하여 시민분향소 설치가 될 때까지라도 임시로 천막 설치를 해 줄 것을 대책위 관계자와 함께 정식 요청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상부의 지침이므로 어렵다'고 답변. 이후 경찰은 다시 시민체육공원 입구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시도하여 다시 충돌이 발생했다. 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로,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을 일으키지도 않는 분향소 설치를, 그것도 천막 설치까지 막아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법 이전에 인륜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폭거이다.

사례2

12월 12일 서울시청. 송전탑 공사 중단 및 고 유한숙 어르신 추모기간 선언 기자회견 후 분향소 설치했다. 경찰이 갈개를 내리려는 차량을 견인시도했다. 견인에는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분향소 테이블과 촛대 등이 파손되고 화환도 부서졌다. 현재 연대하는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서울 시청 안에 연좌해 있고, 분향소 다시 설치했다.

III. 결론

지난 10월 공사 재개 전, 작년 6월에 밀양을 방문하였을 때, 주민들의 분노는 경찰보다는 한전과 용역들에 향해 있었다. 그러나 1차, 2차, 3차 보고대회를 준비하면서 주민의 분노가 경찰을 향하고 있다. 경찰이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다. 경찰의 직무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있으며, 경찰권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현재 밀양에서 경찰의 법집행은 한전의 송전탑 공사 보호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전의 안전한 송전탑 공사를 위해서라면 경찰권이 주민을 향해 최대한도로 행사되고 있다. 이에는 일말의 타협도 없다.

고령의 주민들을 향한 과격한 진압과 무분별한 연행시도로 인해 80여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고 경찰의 폭행, 미행, 감시, 사찰로 인해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무자비한 법집행이 남긴 경찰권에 대한 깊은 불신은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 있는 경찰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찰 전체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다.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통행제한은 주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나, 변호사들의 통행권까지 제한하는 상황에서 경찰의 그러한 설명은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통행

제한은 국민의 자유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기 때문에 개별적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한다. 밀양에서 행해지고 있는 마을 입구부터의 통행제한은 경찰권의 과도한 남용이다.

사복 경찰의 스마트폰을 넘어 몰카 형태의 채증 카메라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불법채증을 운운하는 것조차 이제 사치로 느껴진다. 대법원조차 채증을 위해선 원칙적으로 영장을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밀양의 경찰들은 채증은 아무런 제한 없이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화롭게 집회를 하거나 그냥 앉아서 쉬는 동안에도 밥을 먹는 동안에도 경찰은 채증을 남발하고 있다.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지만, 밀양 주민들에게는 그러한 자유조차 경찰에 의해서 허가 되어야만 누릴 수 자유가 되어 버렸다. 주민을 도발하는 경찰의 불법채증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밀양의 경찰에게는 이름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시위진압 등 경비업무시 경찰은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식별표시를 부착하고 경비업무를 담당할 것을 권고하였다. 밀양에서 한전의 공사를 지원하는 경찰은 이러한 식별표시가 없음은 물론 인권침해감시단이 문제제기를 하며 소속과 이름을 물어도 경찰은 침묵만을 지킬 뿐이다. 이름 없는 공권력을 어찌 감시 할 것인가. 시민이 경찰의 폭행 또는 기타 형태의 혐의로 경찰을 제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익명 뒤에 숨은 공권력, 통제를 벗어나려는 공권력은, 폭주할 수 밖에 없는 권력이다.

이미 2명의 어른신이 죽었다. 또 다시 주민의 생명이 위독하다는 호소가 들려도 경찰은 침착하게 송전탑 공사를 챙기기에 바쁘다. 구급대원의 출입조차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제한해버리는 경찰은 주민의 생명과 권리보호라는 기본적인 책무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다. 구급대원이 산에 오른다하며 공사가 지체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그러나 경찰은 그조차 제한하고 있다. 밀양 송전탑은 인권을 밟고 건설되고 있다.

사람이 죽어도, 추모하기 위해서 경찰과 싸워야 한다. 시민분향소는 밀양과 서울에서 경찰의 공격을 받고 부서졌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다쳤다. 경찰이 우려한 충돌은 경찰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서울시청 앞 시민분향소는 다시 세워진 이후 아무런 마찰 없이 시민들의 자율적으로 운영하였다. 송전탑 공사를 방해하지도 않고 일반인들의 통행을 방해하지도 않았다. 죽은 자를 추모할 권리조차 박탈하려는 경찰의 공격은 법집행을 떠나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이다. 법 이전에 반인륜적인 폭거이다.

경찰이 점령한 밀양에서, 주민들과 연대하는 시민들은 하루하루 힘든 싸움을 이어 가고 있다. 법을 들고 들어온 경찰은, 법조차 어겨가며 인권을 짓밟고 있다. 송전탑 이전에, 법 이전에 밀양에 사람이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밀양 송전탑 공사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제압하기 위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정부와 한전 그리고 주민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제언〉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송전탑이 아니라 정의의 탑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신훈민

밀양 송전탑 건설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알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에 절차적 민주주의와 투명성, 그리고 객관적 검증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¹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수립된다. 이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과정은 없다. 장기송·배전설비계획의 경우에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하나, 「전기사업법」 제53조에 의해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독립성이 없다. 전기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속된 심의기구에 불과하다. 한편 장기송·배전설비계획의 밑바탕이 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심의하는 <전력정책심의회>도 독립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관련 부처 공무원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권을 가진 민간위원으로 구성될 뿐이고, 위상도 심의기구에 불과하다(「전기사업법」 제28조).

계획단계를 지나 사업추진단계로 오면 더욱 문제이다.

「전원개발촉진법」은 1978년 한전 등 전원개발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던 법으로, 악용의 소지가 많은 법이다.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도로법」, 「하천법」, 「자연공원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20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졸속적인 절차진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뒤늦게 2009년 1월 30일 법이 개정되어, 주민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지만, 이 정도의 내용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의견을 듣는 것에 불과하고, 의견의 반영여부는 사업자에게 맡겨져 있다. 이런 법조항을 악용하여 그동안 한전은 형식적이고 졸속적인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을 강행하기에 바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밀양, 청도 등의 지역에서도 형식적인 주민공청회를 거쳐 일방적인 정부의 실시계획 승인과 토지수용이 이어졌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묵살되었다. 주민설명회는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고, 처음에 주민들은 초고압 송전선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다.

1 하승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 전반에 대하여, ‘송주법, 송전탑 갈등의 대안인가, 국회 토론회’ 2013. 9. 26.

한마디로 전력분야는 민주주의나 투명성 같은 기본적인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분야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같은 법률을 대폭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게 하며, 투명한 과정을 통해 정보가 공개되고 민주적인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같은 법률을 대폭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독립된 위원회가 송전탑 건설 전반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계획수립 등 일련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다.

미국만 하더라도,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및 주정부별 공공사업규제위원회(PUC 또는 PSC)가 신규 송전선로 건설시에 신규송전선로 건설이 아닌 다른 대안들(대안선로 및 비송전선 대안)을 동시에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이런 대안들에 대해 검토를 한다. “비송전선로 대안”에는 지역분산형 발전, 수요관리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주정부 규제기관인 버지니아주 기업규제위원회는 버지니아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준 사법기관으로서 전화통신, 철도, 전력, 가스 등 주요 공공사업관련 소비자보호, 요금조정, 사업허가 등 규제 활동을 한다. 이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모든 버지니아주 당사자 및 시민에게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른 분쟁조정을 보장하며, 분쟁해결에 대한 지원역할을 한다. 이런 위원회의 검증과정을 거쳐, 미국에서는 장거리 765kV 송전선 건설사업인 PATH (Potomac-Appalachian Transmission Highline)² 사업이 2012년에 취소된 사례도 있다.

독일에서 송전탑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입지선정문제는 이미 기존 사업은 법률에서 확정되어 있다.(의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확정됨) 고압선 설치구간이 확정되면, 계획확정절차가 시작된다. 이 경우 사인과의 이익을 조정하는 필요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필요성 심사에는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여러 시민단체 등이 참가하게 된다. 법학교수의 감정서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송전선 설치에 따른 필요성과 그에 따른 피해를 다양한 각도에 제시하고 이를 청문과정을 통해 보고서 형태로 공개한다. 그 후 공용수용절차를 거친다. 이 역시 자세한 공고절차와 시민단체의 의견서 제출, 청문 등을 거치면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다. 따라서 한국처럼 직접 지역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예는 없고, 시민단체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주적으로 의견 조정이 이루어진다. 송전망 설치에 따른 보상의 문제도 단순히 감정평가사가 감정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이미 정형화된 감정평가 외에도 농민들의 경작소득 감소를

2 미국의 지역 전력망사업자인 PJM사는 2005년 서부 오하이오 벨리 석탄발전단지에서 5,000MW 대용량 전력을 765kV 송전선로(총연장 550~900마일), 일명 PATH(Potomac-Appalachian Transmission Highline)를 통해 웨스트버지니아, 워싱턴DC, 뉴저지 등 동부 수요처에 판매하는 계획을 수립했었다.

평가하기 위하여 농업경제학자의 박사논문을 기반으로 하여 자세한 유형별로 보상이 정해져 있다. 이 과정에서 농업인단체가 주가 되어 송전망사업자 전체와 협상을 이를 협약으로 공개하므로 투명한 보상절차가 확보되고 있다.³

이에 반해서, 한국에서 밀양 765kV 송전탑 사업이 진행되는 10년 동안 주민들은 투명인간이었다. 이 사업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밀양 주민들의 목소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어느 누구의 아버지이며, 남편이었던 두 명의 마을 주민을 자결로 잃었다. 70세는 젊다고 할 만큼 연로한 노인들이 가파른 산허리를 타고 오르며 다치면서 절규하였다. 자식뿐인 한전과 시공사 직원들, 토목 작업을 하는 인부들, 용역 직원들에게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면서도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건강권도 환경권도 재산권도 철저히 무시당하였다. 우리 사회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심지어 밀양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생존의 문제를 넘비현상으로 매도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서야 하였다. 밀양 765kV 송전탑 사업은 우리 사회의 전력수급체계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던져 주고 있다. 이제 밀양 주민들은 대량 소비주체인 도시의 편리를 위해 농촌거주민의 삶과 운명을 송두리째 박탈하는 전력수급체계 자체에 맞서 외로운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밀양 송전탑 건설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법률의 개정이나 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송전탑 공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주민들과 연대자들에게는 아직은 먼 이야기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밀양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간 밀양에서 있었던 수많은 집회는 금지통고된 집회였거나 미신고집회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해 집회를 주최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평화로운 집회라 하더라도 주최자는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옥외 기자회견도 미신고집회에 해당한다. 주최자 처벌은 경찰의 의지에 달려 있다. 고령의 주민들이 한전의 공사 차량을 막겠다고 이른 새벽 추위 속에서 도로에 연좌를 한다. 서로서로를 묶고 길을 막는다. 경찰이 어르신들의 사지를 들어서 옮기려 하면 이에 저항하며 몸부림을 치다 경찰을 밀치기도 한다. 이 경우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할 수 있고, 작년 공사 재개 이후 밀양 주민들과 연대자들이 연행되어 처벌을 받고 있다. 집회를 하는 것, 도로에 연좌를 하는 것, 한전의 공사 차량을 막는 것 등등. 그렇다. 모두 불법이다.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송전탑 건설을 방해하고 있는 밀양 주민들과 연대자들을 손가락질 해야 하는가. 불법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하는가. 아니면 현장 경찰에게 엎드려 관용을 호소할 것인가.

3 길준규, 독일에서의 고압송전선로 수용 및 보상에 대한 절차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55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1, pp.181~182

앞서 언급하였듯이, 밀양 송전탑 건설의 근거가 되는 법률인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에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투명성, 그리고 객관적 검증절차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다. 입법부를 통해서, 행정부를 통해서, 사법부를 통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러나 전문가 협의체는 무산되었고, 정부나 한전과의 대화는 실익이 없었고, 법원은 실정법을 따르거나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밀양 주민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공개된 토론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반향 없는 메아리이다. 이런 노력 도중에 어르신들이 송전탑 건설에 항거하며 분신을 했고 농약을 마셨다. 가장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죽음을 고민하고 있다.

우리는 무엇에 기반하여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⁴

법원, 검찰, 경찰은 밀양 주민과 연대자들의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을 불법이라 부른다. 그러나 이를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반적 성격의 불법이라 볼 수 없다. 밀양 송전탑 건설 투쟁은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것을 목표로 하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인 정치행위, 즉 시민불복종이다. 밀양 주민들과 연대자들이 비록 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하고 있다. 법에 대한 충실성은 그 행위의 공공성, 비폭력성 등으로 표현된다. 지금까지 밀양 주민들과 연대자들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밀양 송전탑 건설의 부당성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무산되었다. 합법적인 항거와 시위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경찰의 일방적인 비호 아래 한전에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밀양 주민들과 연대자들의 시민불복종만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시민불복종은 비록 불법적으로 보일지라도 민주주의 체제를 안정시키는 방법이다. 선거 및 사법부와 더불어 시민불복종은 민주주의 제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패이다. 부정의에 항거함으로써 소수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한국 사회가 정의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한다. 시민들이 밀양 주민들과 연대자들과 정당한 시민불복종에 함께 한다면 사회 갈등을 해결하고 안정을 가져 올 수 있다. 이런 과정은 민주 사회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비민주적인 불투명한 절차를 지닌 법률의 개정 혹은 폐기를 위해서 싸우는 것,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책 결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싸우는 것, 이를 탄압하는 공권력에 맞서는 것, 이런 시민들과 연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한국 사회의 기본 원리로 받아들인 시민들로 하여금 신념간의 불일치를 줄이고 안정감을 갖게 해준다. 침묵하는 것이 괴로운 이유는 불법이라는 논리에 굴해서 사회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는 것을 외면했었기 때문이다.

4 존 롤즈(황경식 옮김), 정의론, 이학사, 2013, pp. 438~512

밀양 주민과 연대하여 시민불복종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밀양 송전탑 건설의 부당함을 끊임없이 호소하여야 한다. 민주 사회의 지지자로서 밀양 주민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는 것을 정당하게 알려야 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호소함으로써 그들이 밀양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도록 한다. 밀양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는 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합법을 빙자한 공권력 행사라는 이유만으로는, 무한정한 복종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만약 우리가 침묵한다면, 다른 이들에게 부당함을 호소하지 않는다면, 밀양 주민들의 죽음과 눈물은 다수자의 이익이라는 미명 하에 잊혀질 것이고 차후엔 더 비열하고 억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법원, 검찰, 경찰은 밀양 주민들과 연대자들의 행위가 갖는 시민불복종의 의미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시민불복종이 헌법의 바탕을 이루는 정치적 원칙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참작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에 따라 밀양 주민들과 연대자들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보류해야 한다.

시민들이 언제나 받아들여야만 하는 해석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칙에 대한 해석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그들의 행위에 대한 타당성을 시민 대다수를 설득시켜야 하는 위치에 있을 뿐이다. 최후의 법정은 입법부도 행정부도 사법부도 아닌 전체로서의 유권자이다. 시민불복종을 전개하고 있는 밀양 주민들과 연대자들은 독특한 방식으로 주권자인 국민에 호소하는 것일 뿐이다. 시민들의 정의관에 있어서 충분히 작용하고 합의가 존재하고 시민불복종에 의거하기 위한 조건들이 존중된다면 시민불복종으로 인해 사회 불안이 야기될 위험은 없다.

밀양 주민들과 연대자들의 시민불복종이 사회 갈등을 증폭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 책임은 항거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되게끔 권위와 권력을 남용하는 정부와 한전 그리고 경찰들에게 있다. 명백히 부당한 현실을 유지하기 위해 법률과 공권력을 이용한다면 그 자체가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기 때문이다.

밀양 송전탑 건설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 피해 지역 주민들과 연대자들과 함께 시민불복종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기 위해 정의로운 시민이 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다.

이제 우리는 정의의 탑을 세워야 한다.

아무런 답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은정

한국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있다. 홈페이지도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것도 있으며, 장관급 지위를 대우받는 위원장과 인권위원들도 있으니 확실히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구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또,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⁵이라는 설립 목적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권침해의 현장에서 인권위를 만나기란 쉽지 않다. 그것은 여전히 싸우고 있는 밀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밀양에서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진정한 것은 무엇

765Kv 송전탑이 건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싸움의 현장에서 공권력과 한전에 의한 인권침해는 다양한 방법으로 막대한 물리력을 행사하며 일어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주민들은 인권위에 자신들이 당한 부당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하고, 진정서를 접수한다. 2013년 10월 공사가 재개된 이후 현재까지 밀양 주민들이 인권위에 진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접수일시	진정한 내용
11월 15일	11월 13일, 한전이 동화전마을 96번 현장에 있던 천막을 철거하기 시작. 천막 옆에 있는 주민들이 직접 지은 황토방 안에 있던 주민 및 연대활동가 4인이 이를 막기 위해 황토방을 나온 사이 황토방 자물쇠를 잠금. 이로 인해 주민 및 연대활동가 3인이 이틀간 산 정상인 96번 현장에서 노숙. 경찰은 고립된 주민들에게 구호품(식사, 물, 충전기, 침낭)을 전달하는 것을 제지함. 국가인권위 직원의 조정 끝에 겨우 주민을 통해 전달함. 같은 날 경찰 숙영지를 사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치한 것에 대해 항의하던 주민이 경찰에 의해 넘어져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음. 또, 경찰이 항의하는 주민에게 폭언하는 등의 96번 현장에서 일어난 전반적인 상황
12월 6일	고 유한숙 어르신 사망 이후 경찰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고인의 사망 원인을 ‘음주, 돼지값 하락’ 등 신변을 비관한 복합적 요인으로 발표. 고인이 음독 직후 이유를 묻는 경찰 수사관에게 “765Kv 송전탑 때문에 그랬다. 더 살고싶지 않다.”고 말함. 이를 녹음하는 것을 유가족들이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원인 왜곡 발표한 것

5 국가인권위원회법 1조

12월 9일	고 유한숙 어르신 추모 분향소 관련 통행제한, 소음피해로 인한 민원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시민체육공원 인도에 설치된 분향소 천막을 시설물철거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강제로 뜯어내는 과정에서 총 4명이 실신하여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으며, 시설물 2동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됨. 이로 인해 다수가 고령자인 주민과 연대시민 30여명이 노숙을 해야 했음. 경찰은 이슬을 가리기 위한 비닐설치도 초반에는 제지하기도 하였음.
12월 14일	12월 13일 오전 11시경, 동화전 마을 주민 권00가 96번 현장 황토방에 올라가서 오후 2시경 유서를 써 놓고 수면제 등을 음독한 사실을 안 남편이 마을 주민과 함께 현장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경찰이 주민증 제시를 요구하며 시간을 지체 시키고 소주만 마셨다면 구급대원을 진입 못하게 막음.
12월 27일	부북면 평발마을 주민 한00씨가 운주암 쪽 인도로 지나가는 길에 132번 공사 진입로를 경비하던 경찰이 통행을 막고 밀어붙여 쓰러짐. 119 구급대가 1시간 이상 늦게 출동하여 추운 날씨에 떨면서 기다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인권위에 이와 같이 긴급구제를 신청하거나 진정한 건에 대해 아무런 답신을 받지 못했다. 최근 인권위는 설립 12주년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9월 말 기준 진정건수는 7,534건이며, 위원회 설립 이후 진정건수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보도자료 어디에도 진정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특히 어떠한 행위로 인한 진정 건수가 많았고, 그 이유를 분석하는 등의 실질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로지 진정 건수의 증가가 인권위가 제 역할을 다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포장하고 있을 뿐이다. 위의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책위 또는 주민들이 인권위에 긴급구제, 진정 신청한 것은 5건이다. 이것도 2013년 진정 건수에 포함될 것이고, 첫 번째 진정 이후 2달이 지난 지금까지 인권위는 답신조차 없지만 또 자랑처럼 위와 같은 보도자료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밀양에서 인권위에 진정한 5건으로는 그동안 주민들에게 일상적으로 행해졌던 폭력과 인권침해를 모두 설명할 수 없다. 주민들이 인권위에 바란 것은 무자비한 공권력의 행태를 낱알이 조사하고 국가 인권 기구로서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역할이라도 해주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자신들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한 것이다.

‘중재’ 국가인권위원회

종종 밀양에서 파란색 조끼를 입은 인권위 직원들을 만난다. 그들은 싸움의 현장에서 주로 중재 역할을 맡는다. 주민들보다 경찰들과 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싸우고 있는 주민들을 찾아와서 오히려 경찰들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지난 11월 18일에는 밀양송전탑 96호 공사현장 농성자에 대해 주민들이 지은 황토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는 긴급구제 신청에 대해 황당하기 그지없는 합의서를 만들기도 했다. 합의서는 황토방에 외부단체(외지인)를 제외한 동화전 마을 주민 2명에 한해서 황토방 출입을 차단

하지 않는다, 대책위는 향후 황토방내에서 생활하며 발생하는 모든 안전상의 문제에 대해 책임진다는 내용이였다. 경찰은 이 합의를 근거로 96번 공사현장으로 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민증 제시를 요구하며 신분을 확인하고 있다. 애초에 문제는 경찰의 과도한 통행 제한과 이로 인한 주민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입은 피해였지만 인권위의 어설픈 중재 합의로 인해 더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인권위의 정책권고가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고, 밀양 상황과 같이 시기적절하게 빠른 대응이 요구될 때가 있다. 이 때 문제의 해결이 인권적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조사관의 조사, 합의 원칙이 바로 서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합의서가 나오게 된 것은 인권위가 밀양과 같이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권고를 내리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인권위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적당한 합의와 하나마나한 중재를 일삼는 계륵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렸다. 이러한 인권위를 최소한이라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꾸준한 모니터링과 인권위에 진정이나 긴급구제를 신청한 이후에 인권단체들과 협조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는 대외적인 압박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 도대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최근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후보 추천 위원회 구성), 진정 각하사유 축소, 인권위 독립성 확보, 인권위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8가지의 인권위원 자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아무리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인권위와 같이 소속 구성원들이 얼마나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활동하는지에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한 사연들이 달려있다. 인권위는 현장을 조사하는 담당조사관에 대한 인권교육, 정권의 눈치 보지 않는 독심 있는 의견 표명, 어설픈 중재자가 아닌 상처받은 사람들의 확실한 편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인권위가 이런 식의 행보를 계속한다면 인권위는 정말 답이 없다.

지난 11월 25일, 인권위는 설립 12주년을 맞았다. 트위터에는 ‘#인권위가 창피해’라는 태그를 단 트윗글들이 쏟아졌다. 어느샌가 인권위는 창피한 순간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었다. 말해야 할 때 침묵했으며, 공통 받는 사람들을 직시해야 할 때 외면했고, 국제적인 위상을 드높이기에만 급급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강정에서 평화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밀양에서 평생 일군 땅을 지키기 위해 송전탑 건설을 막고 있는 할매 할배들이 거대한 공권력에 의해 내팽개쳐지고, 쓰러질 때 인권위는 이를 방조하고 무시해왔다. 그 곳에는 인권위가 말하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인권위가 그 설립 목적을 잊어버렸다고 할 수밖에.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계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1. 밀양 법적 대응 경과

밀양에서는 지난 10월 초 송전탑 공사가 재개된 이후 약 200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총 경력 32개 중대, 여경 6개 제대 약 3,000명의 경찰병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무려 87,045,000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수의 주민이 고령의 노인임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경찰력 배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투입된 경찰은 물리적 우세를 앞세워 공사현장에서 3~4km 떨어진 마을입구에서부터 통행제한(금지)을 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서슴지 않는 등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밀양을 현장 방문하는 등 조사를 거쳐 2013년 12월 26일 1)과도한 통행제한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과 2)경찰의 주민 등을 상대로 한 폭언과 폭행에 대해 국가 및 해당 경찰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찰은 불법하게 폭력적으로 주민을 상대하고 있고, 밀양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불법적 헬기 운행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헬기의 불법적 운행

가. 소음피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헬리콥터 비행으로 인한 밀양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실태>보고서⁶에 따르면 마을 주변을 날아다니는 헬리콥터 비행으로 인해 소음, 공포, 불안 등 신체적, 정신심리적 불편을 겪었는지 물어보았을 때, 응답자의 77.0%가 심하게 경험했

6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2014년 1월 3일(금)~5일(일)까지 4개면(단장면, 산외면, 상동면, 부북면)에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우울증, 불안증의 정신증상을 측정하는 정신심리검사 도구를 활용했다. 불안을 측정하는 데에는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인 Beck Anxiety Inventory(BAI)를 이용하였고, 우울을 측정하는 데에는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인 Beck Depression Inventory(BDI)를 이용하였다. 시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독해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문항을 읽어주고 답하게 하였다. 총 321명이 설문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 중 1명은 마을 주민이 아니어서 제외하고 설문 응답이 부실한 3명을 제외하여 총 317명에 대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중 136명(42.9%)는 남성이고 181명(57.1%)는 여성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64.1세였다. 상동면 주민이 13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단장면, 부북면, 산외면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다고 응답하여, 현재 헬기 소음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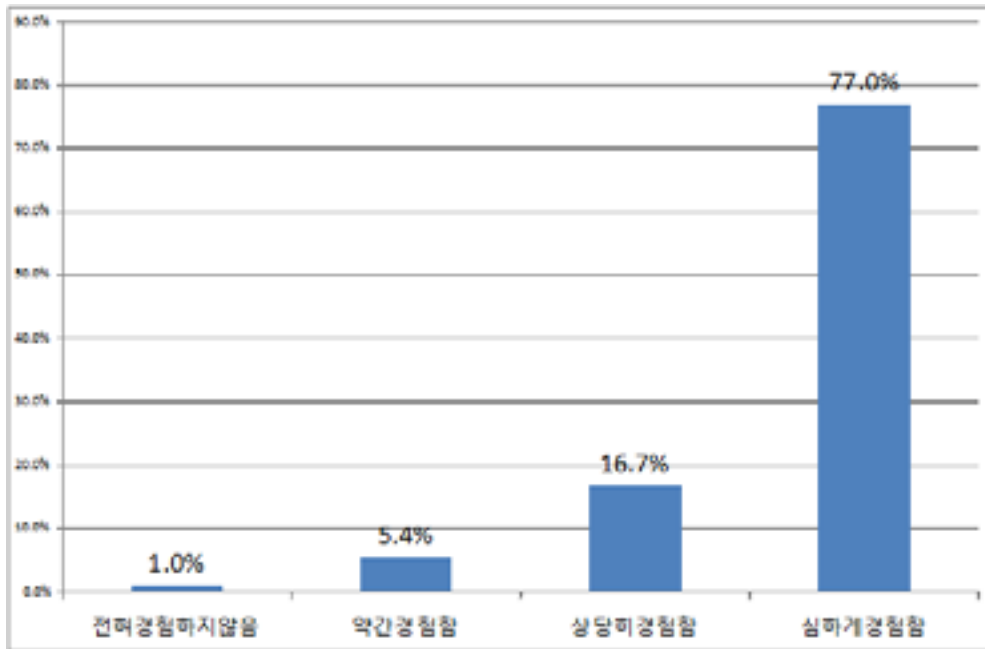


그림 밀양 송전탑 건설 지역주민들의 헬기 소음 경험 수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위 조사과정에서 헬기 소음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것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헬기 소음을 약간 경험한 군, 상당히 경험한 군, 심하게 경험한 군으로 나누어 우울감 증상 유병률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헬기 소음을 심하게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이들이 약간 경험했다고 응답한 이들에 비해 2.1배나 더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는 헬기 소음이 지역 주민의 우울감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유추하게 하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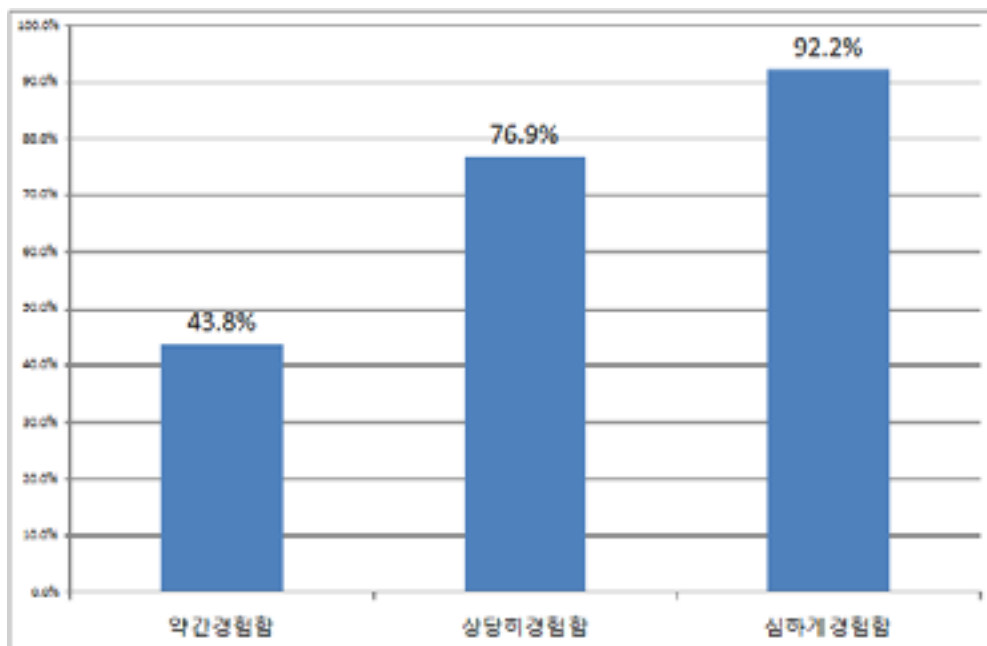


그림 헬기 소음 경험 수준에 따른 우울감 증상 유병률의 차이

그리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헬기 소음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헬기 소음을 약간 경험한 군, 상당히 경험한 군, 심하게 경험한 군으로 나누어 불안감 증상 유병률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헬기 소음을 심하게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이들이 약간 경험했다고 응답한 이들에 비해 3.7배나 더 불안 증상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는 헬기 소음이 지역 주민의 불안감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유추하게 하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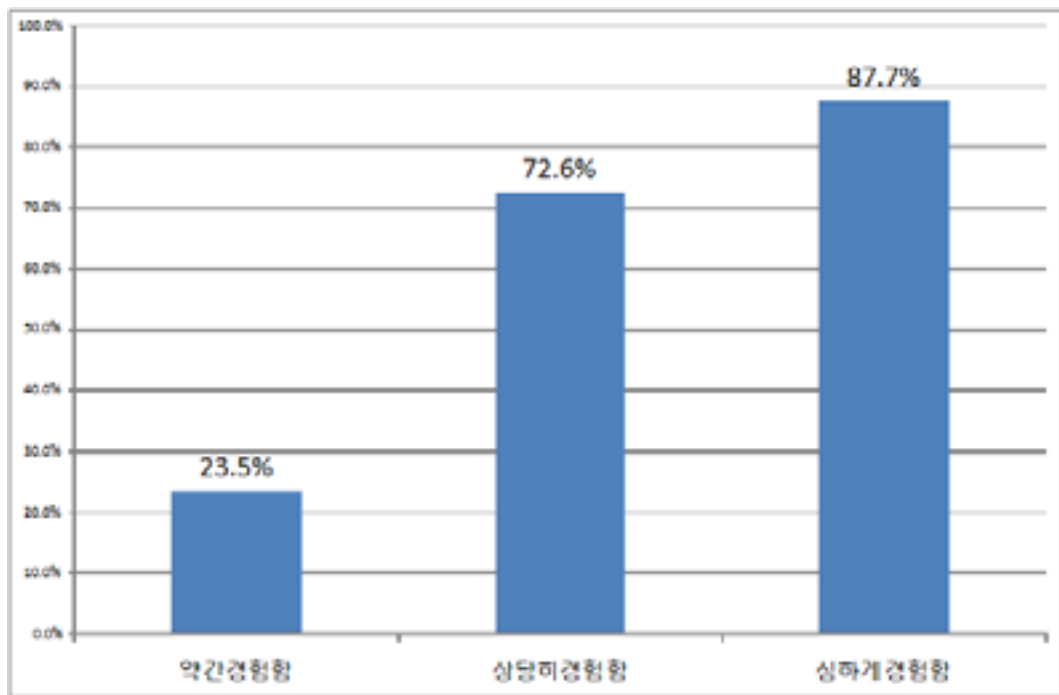


그림 헬기 소음 경험 수준에 따른 불안감 증상 유병률의 차이

이러한 헬기 소음으로 인한 밀양 주민들의 건강권침해에 관해 밀양주민 363명은 2014년 1월 10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이 재정신청의 결과에 따라 밀양주민들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나. 헬기에서의 각목 낙하

2013.12.29 08:30~09:00 경 132번 입구 농성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임도 위쪽에 헬기가 실어가던 물건들 중에서 아래 사진과 같은 길이 약 2m의 각목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에 132번 입구 농성장에 있었던 주민들이 이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이 날 이전에도 각목 등이 떨어지는 일이 수차례 있었다.

한전이 밀양송전탑 건설을 위하여 운용하는 헬기는 하루에도 많게는 80차례 평밭마을을 지나고, 농성막을 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위협을 느낀 주민들이 2013년 12월부터 계속 한전에 민원전화를 했으나, 답변을 회피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하였다.



이에 4개면 주민들이 2013.12.31 10:30~14:00 헬기소음과 헬기에서 각목이 떨어진 상황에 대해 항의방문을 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차량 4대가 대기하고 정문을 한전직원이 포위한 상태에서 항의방문 온 주민들을 한전 및 경찰이 채증하는 등의 주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그리고 대표단을 구성해 민원실에 이야기를 전달하길 요구했으나 거부하였고, 심지어 화장실 출입마저 허락하지 않았다.

처음에 한전(직원 최규택)은 헬기에서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므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였다. 그러나 시행업자인 한백(오진욱 차장)은 “헬기 아래 물건을 실어나를 때 앵글 2개가 이어져 있는 사이에 이와같은 각목을 사용한다”라며 헬기에서 떨어진 물건임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한전은 공식적인 답변을 통해 아래와 같이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주민안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헬기운행 자제 등)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1. 헬기운반 자재 “각목” 낙하

□ 조사 결과

- 각목 낙하 추정 시점인 '13.12.29 오전에는 청도면 요고리 소재 헬기장에서 부북면 도방마을에 위치한 126호에 철탑재를 헬기로 운송한 사실이 있음
- 철탑재 헬기 운송중, 부북면 대항2리 오룡대 근처 임야 계곡부에 철탑재 고정용 각목이 떨어진 것으로 보임
- 각목 낙하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상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향후 조치계획

-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헬기운송시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철사결속→밴딩 결속, 철탑재와 각목 분리 운반) 더욱 강화

한전이 헬기 운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권침해나 낙하물로 인한 생명위험을 막을 수 있는 전향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민변은 헬기운행을 포함한 공사를 중지시키기 위한 가처분신청 등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3.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최근 경찰이 주민들을 상대로 폭력적이며 불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4년 1월 6일은 여러 불법적인 모습이 목격되었다.

이날 충돌은 공사 현장이 아니라 경찰 숙영지를 조성하기 위해 경찰이 컨테이너를 들이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고담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사유지 공터에 컨테이너가 들어왔을 때, 주민들은 컨테이너를 옮기는 트럭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경찰은 이들을 끄집어내면서 2명이 실신하여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하였다.

이날 오후 3시50분경, 최호금 할머니(85세)는 아들 윤종헌이 경찰에게 무릎과 다리 등으로 목, 어깨, 가슴 등을 결박당하고, 머리 정수리에 피가 나는 폭행을 당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이동하는 밀양경찰서 및 김해 중부서 사복 경찰관에게 ‘우리 아들 데려가서 엑스레이 찍어라’고 외치면서 경찰들의 팔을 잡았다. 이 때 경찰 한 명이 할머니를 뿌리쳤는데 이 과정에서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날카로운 것에 베인 것 같은 깊은 상처가 할머니 손등에 생겼다.



경찰은 현재 최호금 할머니의 손등에 난 상처가 칼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나 상처의 형태를 봤을 때 날카로운 것에 베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경찰이 85세의 연로한 노인을 상대로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한 것으로 당연히 불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며, 최호금 할머니는 이러한 불법한 공

권력 행사로 인해 심한 부상을 당한 것이다. 따라서 민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와 해당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최호금 할머니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이후 불법적인 경찰력 행사에 대해 경고하려 한다.

4. 이후 장기적 계획

경찰의 인권침해, 헬기의 불법적 운행 등에 대한 대응과 아울러, 민변은 노후 원전에 대한 가동중지가처분을 2014년 초에 제기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준비 중에 있다. 원전에 대한 가동중지가처분은 2011년에 한번 시도되었다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으나, 현재는 노후 원전이 고장으로 수차례 정지되는 등 그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안전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사례가 있어 다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후 원전이 가동중지 된다면 국민의 안전은 보다 확실히 보장될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송전선로를 건설할 필요성은 현저히 작아지게 될 것이며, 원전 중심의 에너지공급체계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합의 노력없는 공사강행의 문제점 - 밀양의 눈물, 그리고 우리 -

밀양 송전탑 전국대책회의 하승수

지난 10월 1일 이후 경남 밀양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전 직원들과 경찰에 의해 떠밀려 넘어지고 다치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일들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민 1분은 음독자살을 하였고, 1명은 구속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은 연일 소환통보를 하고 있고,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 라는 닷선 소송도 당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밀양에 들어서려고 하는 초고압 송전선 때문입니다. 경남 밀양을 지나가는 76만 5천볼트의 초고압 송전선은 부산과 울산 사이에 있는 고리-신고리 원전단지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경남 밀양을 지나서 창녕에 있는 북경남 변전소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90킬로미터 정도의 이 송전선을 위해 161개의 송전철탑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중에 69개가 밀양에 세워집니다.

송전철탑은 산으로도 지나가지만 마을을 지나가기도 하고 논 한가운데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밀양의 주민들은 2005년 이후 8년이 넘게 반대운동을 해 왔습니다. 이 분들은 보상은 필요 없고, 예전처럼 살게 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분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힘으로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이 이렇게 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것일까요? 꼭 필요한 것일까요? 정부는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정부의 얘기는 하나하나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 밀양 송전탑 공사는 전혀 시급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1일 공사를 재개하면서 ‘지금 짓고 있는 신고리 3호기 원전을 내년 8월에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가 시급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곧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신고리 3호기는 위조부품을 교체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에도 가동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고리 3호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위조부품은 ‘제어케이블’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부품입니다. 인체로 말하면, 신경계통에 해당하는 부품입니다. 원전에서 냉각수가 상실되는 것과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장치에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품입니다. 그런데 이 부품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련된 사람들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부품이 위조되었고, 교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감추고 신고리3호기 건강 실태보고서때문에 밀양 송전탑 공사가 급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부도덕한 일을 한 것입니다.

지금 신고리 3호기의 ‘제어케이블’은 교체를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부품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교체해야 하는 케이블의 길이는 900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케이블을 교체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1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서두른다고 해도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양 송전탑 공사는 전혀 시급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6개월 만이라도 ‘정말 밀양 송전탑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토론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둘째, 밀양 송전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밀양을 지나가려고 하는 76만 5천볼트의 초고압 송전선은 고리-신고리 원전단지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신고리 3,4호가 추가건설되면 밀양 송전탑없이 전기를 송전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엄밀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얘기이기도 합니다. 낡은 원전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리-신고리 원전단지에는 6개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고리1,2,3,4호기와 신고리1,2,호기가 그것입니다. 이 6개의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문제없이 송전되고 있습니다. 3개의 34만 5천볼트 송전선(고리-신울산, 고리-신양산, 고리-울주)이 이미 깔려 있고, 이 송전선들을 통해서 전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신고리 3,4호가 추가되면 기존의 송전선으로는 전기를 송전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리3호기까지는 기존 송전선으로 전기를 송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전측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신고리 3호기가 가동되고 기존의 3개 34만 5천볼트 송전선으로 전기를 송전한다고 할 때에, 송전선의 최대 이용율은 77%(고리-신울산), 87%(고리-신양산), 40%(고리-울주) 수준입니다. 가장 많은 부담이 걸리는 고리-신양산 345kV 송전선조차 87% 수준입니다. 따라서 송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정부는 정상상태에서는 괜찮지만 송전선에 고장이 날 경우에는 정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송전선 고장으로 인해 발전기까지 정지하는 사고들이 간혹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대규모 정전으로 이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2000년 이후에도 송전선 고장으로 인해 발전기가 정지한 사례는 25건 있었지만, 그 중 정전이 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력시스템 규모로 볼 때 발전기 1-2대가 정지한다고 해도 대규모 정전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막연한 위험을 가지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고리 3호기에 이어 4호기까지 가동하게 되면 송전선이 더욱 부족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얘기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고리-신고리 원전단지에는 낡은 원전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고리1호기는 설계수명이 30년이었는데, 그것을 훌쩍 넘어서서

36년째 가동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폐쇄했어야 하는 원전인데도, 무리하게 가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리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건설된 원전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고장을 일으킨 원전이기도 합니다. 만약 고리1호기를 폐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리-신고리 원전단지에서 나오는 송전선에는 그만큼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신고리 4호기까지 가동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송전선으로 송전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중요한 사실도 있습니다. 고리2,3,4호기도 순차적으로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 원전들도 설계수명이 끝나가기 때문입니다. 고리2,3,4호기는 수명을 40년으로 잡는다고 해도 2023-2025년이면 모두 수명이 끝납니다. 물론 고리2,3,4호기의 안전성을 생각하면 더 빨리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지은 원전들의 안전성에는 의문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늦어도 10여년 내에 고리-신고리 원전단지에는 수명이 끝난 4개의 원전과 수명이 끝나지 않은 4개의 원전이 존재하게 됩니다. 수명이 끝난 원전을 수명연장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원전개수는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6개에서 4개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있는 송전선도 남아돌게 됩니다. 당연히 새로운 송전선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밀양 송전탑의 필요성을 따지려면, 이런 부분까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을 회피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와 한전은 고리의 낡은 원전들을 계속 수명연장해서 가동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밀양 송전탑도 강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낡은 원전은 잠재적인 후쿠시마입니다. 후쿠시마에서 사고를 낸 원전들도 수명을 연장한 원전들이었습니다. 낡은 원전은 폐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고리의 낡은 원전들을 폐쇄한다면 지금 있는 송전선으로도 전기를 충분히 보낼 수 있습니다. 밀양을 지나는 새로운 76만 5천볼트 송전선은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많은 사람들이 ‘밀양주민들은 전기 안쓰느냐? 그리고 송전탑 안 세우면 우리가 전기를 못 쓰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의문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선 밀양 주민들도 전기를 씁니다.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전기요금이 1만원, 2만원 대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의 전기를 위해 초고압 송전선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밀양을 지나는 초고압 송전선은 밀양 주민들이 쓰는 전기 때문에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한전의 말로는 대구 등 영남지역에서 모자라는 전기 때문에 밀양을 지나가는 송전선을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구는 전기소비가 많이 증가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대구 부근에 중,소규모의 가스 열병합 발전소를 세우면 해결하고도 남을 수준입니다. 따라서 대구에서 쓰는 전기 때문에 밀양 송전탑을 건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90킬로미터 정도의 초고압 송전선을 건설하는데에는 5천억원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 자체가 낭비입니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보면, 이제는 바닷가에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어서 초고압 송전선으로 전기를 송전

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원전은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너무 엄청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비용, 수명끝난 원전 폐쇄비용 등을 감안하면 경제적이지도 않습니다. 최근에는 국책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조차도 원전은 안전성, 경제성 모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는 것이 상책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는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원전이든 석탄화력발전소든 지금처럼 계속 지으면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삶을 위협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발전소들을 건설하는 것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대규모 발전소들은 냉각수 등의 문제 때문에 바닷가에 지어 왔습니다. 그리고 소비지인 대도시, 대공장까지 초고압 송전선을 건설하여 전기를 송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골 농민들의 땅을 강탈하다시피 해 왔습니다. 보상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전 국회에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이 통과되었지만, 기존 송전선로 주민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게다가 한국토지공법학회에서 나온 용역보고서보다도 보상범위를 훨씬 축소했습니다. 송주법에서는 765kV는 송전선 좌우 끝에서 33미터까지, 345kV는 13미터까지 보상하겠다고 하지만, 초고압 송전선으로 인한 피해는 5백미터, 1킬로미터까지 미친다는 것이 주변 지역 주민들의 증언입니다.

이미 초고압 송전선이 건설된 마을 주민들은 암발생 증가, 소음피해, 환경피해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는 이들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따라서 송주법은 보상을 위한 법이 아니라, 신규송전선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법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골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초고압 송전선 건설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밀양 송전탑 문제는 단지 밀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쓰는 전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대도시, 대공장에서 많이 쓰는 전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받은 고통은 엄청납니다. 작년 1월에는 70대 농민이 분신자살을 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공사를 강행하려는 젊은 용역들의 폭력과 욕설에 시달리다가 '내가 죽어야 문제가 해결되겠다'며 죽음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또 다른 한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없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가폭력 때문입니다.

정부와 한전은 너무 많은 거짓을 말해 왔습니다. 밀양 송전탑은 시급하지도 않고 꼭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고리의 낡은 원전들만 폐쇄해도 새로운 초고압 송전선은 필요없습니다. 이런 진실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이 알려주십시오.

밀양은 단지 에너지, 환경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이고, 인권문제입니다. 국가가 소수 주민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힘으로 짓밟는 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인권같은 단어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는 산골동네에 3천명의 경찰이 투입되었습니다. 주민들은 TV토론을 제안하자고 하고,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정부와 한전은 이를 거부하고 힘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힘없는 국민들을 상대로 저지르는 폭력입니다.

그래서 양심있는 시민들의 관심과 연대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밀양을 외롭지 않게 하면 합니다.

붙임자료1.

10월 25일 이후 일지 및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자료

10월 25일 (금)

0840 109번 도곡입구 못 앞. 경찰과 대치중이던 강00(66세) 팔목부상으로 응급실로 후송됨

1512 도곡리 109번 도곡저수지 앞. 상동면 할매들 도로 점거 중. 밀양서장 나옴

1640 도곡 109번. 조00 경찰과의 충돌로 응급실로 후송

1645 109번 입구. 노00(도곡마을) 할머니 경찰과 충돌과정에서 수술한 다리를 또 다치셔서 후송. 현재 119 기다리는 중

10월 26일 (토)

1630 109 도곡마을. 경찰 교대 시간에 충돌 발생. 어머니들 멍들고 다치심. 현장에 계시던 인의협 분들이 응급처치

10월 27일 (일)

1648 도곡마을. 한전차량 2대 나타남. 주민들이 막자 버스에서 내려 대치. 경찰이 불법채증을 하자 항의하는 사이 어른들과 몸싸움하며 올라감. 한전직원 1명 어르신들이 못 올라가게 하자 어르신 팔을 세게 치고 올라감. 한전직원 올라가자 주민들 경찰에게 격렬 항의. 경찰들 한전 올라갔으니 철수하라며 일제히 철수 함. 주민들 경찰과 선을 분명히 하자고 의견 모으고 철수 함

10월 28일 (월)

0847 레미콘 5대 올라감. 저항 없었음

1020 바드리입구. 레미콘차 5대 올라감

1110 바드리입구. 어린이책시민연대 회원들이 여경들에게 끌려 나와서 여경들에 둘러싸인 채 핵폭발 이후의 아이들 이란 책을 읽고 토론 중

1140 바드리입구. 레미콘차 5대 들어감. 현재 15대

1240 바드리입구. 어린이책시민연대 회원 3명과 활동가 1명 길에 앉아 있다가 끌려 나옴

1300 바드리입구. 레미콘차 5대 더 들어감. 현재까지 총 20대

1440 바드리입구. 레미콘 5대 진입. 충돌 없음. 현재까지 25대 들어감

1640 109번 도곡. 한전 직원들이 길에 앉은 주민들을 밀어 넘어뜨리고 2분만에 진입. 경찰들은 대치 상황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함

10월 29일 (화) 동영상 첨부함

0700 바드리농성장 병력들 계속 보강 중

0701 바드리 농성장 경찰서장 등장

0708 도곡 주민과 한전 직원 대치중, 경찰은 사복형사들 10여명만 한전 직원 뒤에 위치함

0710 한전직원들과 충돌. 환장 발생

김00(74세) 길 한가운데에서 떠밀려 길바닥에 넘어지심 - 허리를 다쳐 방에 누워 계심

서00(남82세) 길 아래 개천에서 한전직원 3명이 밀쳐서 넘어지심

안00(79세) 밀려서 가드레일에 부딪쳐 -머리에 두통 (119차량으로 병원 가심)

0733 바드리 농성장 여경들 마스크하고 농성장 앞 집결

1117 경찰이 랜턴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채증하는 것으로 보임. 대낮에 어깨에 맨 랜턴에서 계속 빛이 나면서 사람을 향해 높이 조절함. 가까이 가서 보니 작동하는 스위치가 있음. 랜턴은 아님. 주민을 감금하고 통행을 금지한 것에 항의하자, 경찰관이 어깨에 끈으로 매고 허리위치정도에 오는 랜턴모양의 물건을 계속 손으로 올림. 그 물건에서 하얀 빛이 나와서 계속 저희 얼굴 쪽으로 비추고 손바닥으로 물건을 올려 적당한 높이를 맞추는 것으로 보임. 몰카가 거의 확실함. 불법채증 문제에 대해 계속 항의하니 몰카를 갖고 온 것 같음



1217 바드리 한 시간째 고착



1510 주민들이 햇빛을 가리기위해 천막을 설치했으나, 경찰이 천막을 들고 산으로 올라감 (주민 구석으로 몰아넣음 / 이00책임자) - 인권위에 제소

1614 사복경찰이 주민들 이름 부르면서 위축감 줌. 바드리 주민들 이름 부르는 경우 많음. 정보과로 추정됨. 주민들 말로는 한전직원들이 개인사정(밥순가락)까지

알고 난 후 형사들도 알고 있는 듯 하다고 함. 경찰이 사찰에 가까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하지만 주민은 경찰의 지위 이름 소속도 모름. 사복 차림이거나 식별 표시 없음

10월 30일 (수)

1) 개괄

경남경찰청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그 시간, 밀양 송전탑 109번 도곡 현장의 진입로인 도곡못 현장에서는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함. 국정감사 현장에서 김00 경남경찰청장은 노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3,000명의 공권력 투입은 과도하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추궁당함. 그동안 자행된 인권유린, 과잉진압의 과오를 일부 시인하거나 시정을 약속했음. 그러나 그 시간에 상동면 도곡리 현장에서는 주민 및 연대시민을 대상으로 잔인한 진압이 다시금 이루어진 것임

울산 시민 김00(여) 경찰이 머리를 신발로 찍어 상처 나고 피가 났으며, 순천 시민 심00(여), 손가락 인대가 늘어나고 손목과 온몸이 아픔, 울산 시민 이00(여) 손가락 제쳐짐, 밀양 시민 김00, 안경알이 한쪽이 빠져서 밟혀 깨짐, 상동면 고정마을 주민 김00, 허리와 목 부상

2) 일지

1620 한전차량이 아래에 나타나면서 주민들 길을 막기 시작함

1700 한전직원들이 차에서 내려 주민들 앞으로 와서 1 분간 대치하다가 주민들이 계속 저항하자 다시 내려감

1710 위에서 경찰이 내려와서 현장책임자인 이00 경정(소속 불상)이 주민들에게 통행을 막고 있다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경고 1분 간격으로 세번 하고, 그리고 바로 부하들에게 주민들을 옮기라고 지시함

1715 길을 줄지어 팔짱을 끼고 막고 있는 주민들을 향해 경찰들 돌진해서 가운데를 뚫고 양쪽으로 밀어붙이면서 할아버지 한 분이 넘어졌고 도미노처럼 연달아 주민과 연대자가 넘어졌으나, 경찰은 압박을 풀지 않고 계속 밀어 부침. 그 와중에 주민과 연대자가 쓰러져 경찰들의 발에 찍히고 밟히는 상황에서 그 비좁은 공간 사이로 한전직원을 태운 경찰버스가 지나감. 한전직원이 다 지나갔는데도 경찰의 압박은 한동안 풀리지 않

있고 위험한 상황은 계속되었으며, 아래에 쓰러져있던 연대 시민은 당시에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함. 자신의 힘으로는 그 자리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함

1725 경찰 물러나고 부상자 4명 병원으로 후송됨

10월 31일 (목)

0836 도곡저수지, 한전과 경찰 대 주민으로 충돌 경찰이 밀어내는 과정에서 강덕순 팔부상으로 응급실로 이송, 바드리 입구로 레미콘 3대 경찰차량 호위받으며 동화전을 지나감

1540 도곡저수지 앞, 나가려는 경찰과 주민 대치. 주민 30여명, 채증 3대, 경찰버스 4대, 경찰일반차량 2대

11월 1일 (금)

0700 109번. 활동가들이(울산) 마을회관에서 농성장으로 나가려는 차에 경찰버스가 회관 앞까지 올라와 고압적인 자세와 채증문제로 잠시 시비가 붙음. (반말, 물리력으로 고착, 체포하겠다고 협박)

0830 한전 직원이 차에 숨어서 채증하는 걸 활동가들이 발견하고 울산 차를 돌려 대서 시야를 막아놓음

1000 경찰 출동해서 길 비키고 울산 팀이 세워놓은 차를 뺄 것을 요구.

1030 도곡 저수지 앞에서 10:30분경 사복경찰 아무개씨가 촬영하고 있는 미디어활동가와 울산활동가에게 "야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 및 채증함.(영상있음) 현장지휘관이 울산활동가가 세워둔 차량을 지목하며, "망치로 깨가지고 차빼버린다" 라고 협박함. (영상 있음) 불법주차 딱지를 끊어 운전자에게 전해줌

11월 4일 (월)

1500 122번 입구 천막 3개를 경찰의 요청에 의해 치던 인부들 만남. 주민들이 항의해 철거함. 의경 60명 정도의 경찰인력이 걸어들어가고 있음

1600 122번으로 올라갔던 주민 김00님 경찰에 의해 막힘 경찰 20명이 현장으로 올라가고 있음. (주민 15명 경찰 60명)

1641 122번 입구 에서 80m 윗쪽에 주민 3분 고립되어 있고 김00(57세) 실신해서 응급차를 불렀음

11월 5일 (화)

1) 일지

0730 122번 입구에서 충돌 있었으나 한전 올라감. 지금 금호 주민 30명, 여수 주민 20명 함께 지키는 중.

2) 보도자료

<밀양 송전탑 30개 마을 중 20개 마을 합의하였다는 한전 발표에 대한 대책위 반박 논평>

공기업은 모사꾼들의 집단인가? 합의 내용 즉각 공개하라!

1. 한국전력은 지난 9월말, 전체 30개 마을 중 15개 마을이 자신들과 마을별 보상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지난 9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15개 마을의 합의가 이미 공사가 완료된 청도면 3개마을과 단장면 바드리 1개 마을을 제외하면, 사실상 날조라는 것을 마을별 주민 인터뷰 자료를 통해 낱낱이 밝힌 바 있다 (당시 발표한 주민 인터뷰 정리 및 녹음 자료는 이메일로 전송할 예정임. 이메일이 들어가지 않는 분은 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2. 한전이 합의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산외면 괴곡마을의 사례는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었고, 금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 실상이 폭로된 바 있다. 괴곡마을은 골안과 양리 두 마을로 이루어져 있으며, 송전탑 피해가 훨씬 큰 골안마을 주민들이 일치단결하여 합의를 반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양리마을 주민대표 몇 명이 주민 서명 연명부를 위조하여 한전과 10억5천만원에 합의하였고, 먼저 입금된 7억5천만원으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단장면 미촌리 지역에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밝혀져 마을 전체가 큰 분란에 휩싸여 있다.

3. 또한 한전이 합의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북면 4개 마을 중 하나로 짐작되는 도방마을의 예를 들어보자. 이 마을 또한 한전이 주장하는 다른 합의마을들처럼 주민들은 대부분 어떤 절차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마을회의가 개최되거나 대표자가 선임된 적도 없다. 다만, 작년 가을경에 한전과 가까운 주민이 가구별로 기르는 소를 마리당 얼마씩 보상해준다니면서 떠돌고 다녔으며, 마을 주민 19명이 부산 기장으로 관광을 가서 장어도 먹고 멀치 1박스를 받아 돌아오기도 했고, 이번에 마을보상을 받아서 땅을 사자는 풍문이 떠돌기도 했다고 한다.

4. 그런데, 다시 한국전력은 마을의 명단과 구체적 합의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다시 5개 마을이 추가로 합의에 동참했으며, 이제 30개마을 중 2/3가 합의에 동참했다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5. 최근 합의가 되었다는 단장면 아불마을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지난 9월 21일경, 마을 이장의 주도로 마을회의가 개최되었는데, 그 회의를 참관한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대체로 주민들은 돈을 받고 철탑을 세우는 것을 내켜하지 않았으나, 마을이장 김아무개씨가 9월말까지 한전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한전에서 9월말까지 합의하는 마을들에 책정한 20억원을 손해본다는 식으로 빨리 합의하자고 유도했으며, 이웃한 용회 마을도 합의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합의 분위기를 유도하여(녹음자료 및 증인 있음), 처음 분위기와 달리 결국 52대 29로 찬성이 더 많은 쪽으로 결정이 나서 9월 30일 이전에 양해각서를 제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한다.

6. 또한 단장면 동화전마을의 합의가 주민들에 의해 번복된 사례나 산외면 박산마을이 두 번이나 합의관련 회의가 개최되었다가 무산된 사례를 통해서 보듯, 밀양 주민들의 보상안 반대 분위기는 지금도 한결 같다.

7. 그러나 한국전력은 이러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외부에 밀양의 분위기가 보상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엉터리 여론을 조성하면서 밀양 주민들의 투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술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8. 한전은 철탑을 세우고 밀양을 떠나면 되지만, 남아있는 밀양 주민들은 평생동안 함께 살아온 이웃들과 서로 원수가 되면서 극심한 분열의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벌써부터 밀양의 많은 마을 들에는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9. 한전은 공기업답게 당당하고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라! 밀양 주민들과 체결한 합의의 실상을 공개하고, 어떤 대표들과 어떤 절차를 거쳐 합의하게 되었는지를 밝히라! 자신들의 주장대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떳떳하게 합의했다면 그 실상을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을 분열과 주민들간의 분란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방책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3년 11월 5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의 헬기, 무허가 상태로 불법 운행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

1. 한전이 10월 2일부터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자재 운송으로 운행한 헬기가 무허가 상태에서 진행된 불법 운행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지난 10월22일, 밀양시에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 관련 허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며, 밀양시는 같은 날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소관 업무로 이관하여 11월 5일 그 결과를 회신 받았다.

3. 이에 따르면, 헬기 운행을 둘러싸고 충돌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금곡 4공구 헬기장은 10월 2일부터 매일 수십차례씩 헬기가 떠서 공사 현장으로 자재를 운반하였지만, 실제 헬기 운항 허가는 10월 27일에서야 10월 27일~12월31일까지의 항공운항 허가를 득했다. 본 대책위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10월 22일 직후에야 부랴 부랴 해당 관청에 항공 운항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4. 당시, 4공구 헬기장에는 주민과 연대 시민들 수백명이 매일처럼 헬기장을 에워싸고 시위를 하였고, 경찰

병력 또한 매일 200~300명씩 교대로 헬기장을 지켜주기 위해 근무했으며, 헬기 운행에 항의하는 격렬한 충돌 과정에서 환경운동가 1인이 구속되고 6명의 연행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헬기 운행을 중단하라며 울부짖다가 주민이 실신하는 사례도 2건이나 발생하였다.

5. 당시 헬기가 주는 위압감은 대단하여 주민들은 헬기가 자재를 나르는 장면을 지켜보며 속수무책으로 좌절감을 곱씹으며 울부짖었고, 헬기 소음 또한 대단하여 대책위의 자체 측정으로는 최저 79.5 db, 최고 93.6 db까지 이르기도 하였다.(법정 기준치 70db)

6. 또한, 126번, 125번 현장으로 집중적으로 자재와 레미콘을 날랐던 청도면 요고리 5공구 헬기장은 10월 9일~12월31일까지의 운항허가를 10월 7일 득하였으나, 실제로는 10월 2일부터 매일 많게는 10여차례씩 자재와 레미콘을 나르면서 현장에서 농성중인 부북면, 상동면 주민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감을 심어 주었다.

7. 82번~85번 현장까지 자재와 레미콘을 운송하는 단장면 밀양댐 3공구 헬기장은 10월 25일~12월31일까지의 운항허가를 10월 21일 득하였으나, 10월 24일 밀양댐 헬기장을 막던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여 단장면 용희마을 김말수 할머니(78)가 여경에게 팔꿈치로 이마를 가격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8. 이와 같이 한전의 불법적인 무허가 헬기 운항으로 수많은 충돌과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경찰은 불법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연인원 수천명의 경찰을 동원한 셈이 된다.

9. 주민들의 작은 저항의 행위 하나에도 불법의 낙인을 붙여서 위압적으로 해산을 종용하거나 연행, 구속으로 이어진 상황에 비추어 보면, 한전과 시행사들의 이러한 불법 행위에는 더 높은 수준의 책임 추궁과 처벌이 따라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10. 밀양시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한 본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을 법정 회신 시한인 14일이 끝나는 직전까지 계속 미루면서 이 문제에 대한 여론 형성을 의도적으로 연기한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1. 본 대책위는 11월 8일(금) 오전 11시, 금곡 4공구 헬기장에서 4개면 주민들과 함께 ‘한전의 불법적인 헬기 운행 규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공사 책임자인 한국전력 사장, 두산건설 사장(3공구), 동양건설 사장(4공구), 한백 사장(5공구)을 항공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12. 또한 본 대책위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소음 측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민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공사용 헬기 소음의 인권적 환경적 측면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할 것이다.

13. 현행 항공법 112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 운송 사업 또는 항공기 사용 사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끝.

2013년 11월 5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11월 6일 (수)

0712 122번 여경 굴다리 위 지나다 발을 헛디더 추락 응급차로 실려감. 길가에 쳐져 있던 그물막 위로 걸어가다 떨어진 것으로 추정. 현재 주민 30여명 있음. 계곡의 높이는 3~5미터로 추정. 여경 의식 있고 동료와 이야기도 했다고 함. 오늘 아침에도 다리 난간 위를 걷던 주민을 경찰이 밀어서 넘어지려하자 주민들 항의하는 등 좁고 위험한 길에서 경찰이 무리하게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음

0810 122번 현장으로 병력 추가됨.

0900 122번 경찰이 해산 경고 중.

1000 소방 측에서 안전장비를 설치하려고 답사 왔으나 설치는 못했음. 경찰 경고방송은 중단되었고 대기 중. 주민들 식사도 못한 채 길에 앉아 계심

1020 122번 경찰서장이 와서 현장의 백00님께 누구라도 다치면 책임을 져야될 것이라며 책임을 묻고 있다 함. 소방서 측도 10여명 현장에 있음

1040 95번에 헬기 자재 이송 중. 96번에 발전기 교체하려는 중. 한전 1명, 경찰 30여명. 주민 손00 1명 있음

1100 96번 야간작업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스틸라이트 설치

11월 7일 (목)

1) 일지

0920 바드리입구. 철탁구조물 2대 들어감

2) 보도자료

〈‘헬기 불법운행 규탄 집회’ 알림〉

1. 내일 예정된 ‘헬기 불법운행 규탄 집회’는 부산지방항공청의 5월 이후 헬기 운항 허가 사항 자료 제출로 10월 이전의 헬기 운항 허가 사항에 대한 의혹이 일부 소명되었다고 판단되어 취소합니다.

2. 다만, 본 대책위가 요구한 ‘공사 관련 헬기 운항 허가 사항 전반’에 대한 질의에 부산지방항공청이 임의로

10월 이후의 허가 사항만을 특정하여 답변한 것에 대해 부산지방항공청의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고 오히려 부산지방항공청이 “밀양송전탑 반대위에서 10월 이후의 운항허가 자료만 요청해 불법운항 논란이 빚어진 것 같다”며 허위 사실로 책임을 전가(11월 7일 KNN 보도)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3. 또한, 한국전력의 해명 보도자료와 부산지방항공청의 해명 자료에 적시된 데이터가 상이한 점은 헬기 불법 운항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의혹이 남아 있음을 밝힙니다.

4. 이를테면, 3공구 헬기장에 대해 한전은 9월 30일부터 허가를 득했다고 하나, 부산 항공청 자료로는 헬리코리아는 7월1일부터, 유비에어는 9월28일부터 허가를 득한 것으로 나와 있으며, 4공구 헬기장에 대해서 한전은 7월1일부터 허가를 득했다고 하나 부산 항공청 자료로는 유비에어가 5월 27일과 9월28일 두 차례에 걸쳐 허가를 득한 것으로 나와 있으며, 5공구 헬기장 또한 한전은 10월9일부터 허가를 득했다고 하나 부산 항공청 자료로는 헬리코리아는 5월27일부터 3차례에 걸쳐, 유비에어는 9월28일부터 이미 허가를 득해놓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5. 따라서 본 대책위는 헬기 불법 운항 관련한 정확한 의혹 규명을 위해 부산지방항공청에 민원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것이며, 헬기 운항시 발생하는 견딜 수 없는 소음과 주민들의 제보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헬기 운항시의 제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규명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

2013년 11월 7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11월 8일 (금)

1) 일지

0840 122번 옥산교 쪽에서 나가려는 경찰버스를 막고 있던 주민에게 지역장이 채증을 바탕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겠다며 해산 경고 중. 기동대 출동 중

0900 122번 여수마을입구(옥산교) 주민들 이곳으로 모두 모여 계심. 50~60 여명. 채증 심하고 차량 압수, 체포, 처벌 등에 대해 계속 경고 중. 경찰 경고방송 중. 헬기가 자재 실어나르고 있고, 경찰체포조, 여경 집결 중

1100 별 다른 충돌 없이 경고 방송 중단. 경찰 차량이 10여 미터 뒤로 후진 주민들 식사함

1130 경찰서 정보 과장이 한전에 가서 이쪽으로 다니지 않도록 이야기한다고 하며 주민들에게 비켜주시라고 설득함

1145 밀양서 정보과장과 지역장이 한전직원이나 경찰버스가 이 길로 다니지 않게 하겠다며 주민들을 설득

함. 주민들이 길을 열어 줘 경찰버스는 모두 나감

1720 122번 굴다리(철도 근처:상동면 안인리 39-2번지)에서 한전 직원 3명을 문정선 의원 일행이 발견. 대차. 현재 주민, 활동가 등 20여명이 막고 있음

2020 122번 안인리 굴다리 상황. 한전직원들 보내줌. 주민 분들 식사 하고 귀가하심

2) 보도자료

〈밀양 주민들에게 경찰이 마구잡이식 소환 요구 이어져〉

1. 상동면 여수마을 122번 현장을 중심으로 주민과 경찰 및 한전 직원들과의 충돌과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데, 밀양 주민들에 대한 경찰 소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2. 10월 1일 공사 재개 이후 총 19명의 주민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단장면 용회마을 주민 박진호(57)씨가 구속되어 있는 가운데, 11월 1일 이후부터 8일 동안에만 주민 10명들이 줄줄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바드리 현장으로 가는 레미콘 차량 이동을 방해하였거나, 도곡 저수지 대치 현장에서 경찰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3. 그러나 이들은 당시 현장에서 함께 했던 수많은 주민들의 극히 일부로, 현장에서 주민들을 지휘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데도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마구잡이 본보기식 조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4. 또한 경찰은 조사에 응한 주민들에게도 ‘누가 시켰느냐, 조끼는 누가 지급하였느냐, 마을별 현장 당번을 누가 짜 주었느냐, 대책위에서 연락이 왔느냐, (특정 주민을 지칭하며) 이 사람이 시켰느냐, 도로 점거 위치를 누가 지정하였느냐는 등 배후를 캐기 위한 조사에 치중하고 있어 수사의 목적이 심히 의심스럽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5. 또한 부북면 위양마을 정임출(72세) 할머니의 경우, 남편의 위암 수술로 10월 1일 공사 재개 이후에는 밀양에 있지도 않았으며, 같은 마을 손희경(78세) 할머니 역시 충돌이 빚어진 현장에는 전혀 가지 않았고,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북면 농성장을 지켰음에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무슨 근거로 이들에 대한 출석 요구서가 발급되었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6. 이와 같이 경찰의 주민 소환은 ‘주민 안전과 불상사 예방’이라는 공권력 투입 목적과 전혀 동떨어진 것으로 밀양 송전탑 현장에서 공권력은 사실상 사실상 주민 압박 및 감시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다시 한번 경찰의 마구잡이 본보기식 수사 행태를 규탄하는 바이다.
끝.

2013년 11월 8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끊임없는 경찰의 폭언, 폭행, 이번엔 현장지휘관(경정)“망치로 깨서 차 빼버린다” 폭언〉

1. 밀양 송전탑 충돌 현장에서 경찰의 폭언, 폭행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2. 지난 10월30일 경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그 시간, 김종양 경남경찰청장이 밀양 송전탑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자행된 인권유린과 과잉 진압, 경찰의 부적절한 행태(밀양경찰서 임동준 경위의 음주 상태에서 주민 연행, 밀양경찰서 이일수 경위의 ‘아가리에 똥물’ 폭언)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사과하던 그 시간에도 상동면 도곡저수지 앞에서는 주민 및 연대 시민을 경찰이 밀고 지나가면서 5명이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는 이수라장이 벌어진 바 있다.
3. 그런데, 그 다음날인 11월 1일에도 상동면 도곡 저수지에서는 경찰에 의한 폭력과 폭언, 그리고 현장지휘관(경정)에 의한 폭언까지 자행되고 말았다.
4. 11월 1일, 울산 민주열사기념사업회 김대식 사무국장(47)과 동행한 울산지역 연대 시민 6명은 아침 6시 도곡마을 회관에서 기상하여 마을회관을 나서는 길에 경찰이 전경버스를 돌리는 데 장애가 된다고 자신들이 타고 온 승합차량을 이동 주차할 것을 요구했다.
5. 경찰의 강압적인 요구에 울산 연대 시민 강아무개씨가 항의하자 사복경찰 1명이 “씨발, 어따 대고 반말지 꺼리를 해 대냐”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연대 시민들이 항의했고, 연대 시민들의 항의 내용 중에 욕설이 포함되자 전경 지휘관이 연행을 명령했고, 이후 전경들은 연대 시민들을 에워싸고 무작위로 폭력을 행사했다.
(사진 있음)
6. 이 중, 김대식 열사회 사무국장에게는 좌우 4명의 전경이 양팔을 잡고 경찰 1명이 목을 잡아당기면서 쥘었고,(사진 있음) 그 상태에서 5분 가량 짓누르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7. 이어, 10시 40분 경, 연대 시민들이 울산으로 복귀하는 길에 주민들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도로에 연좌해

있는 주민 뒤편에 임시 주차했을 당시, 신원불상의 사복경찰이 촬영하고 있는 영상활동가를 향해 “야이, 개새끼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했으며(영상 있음), 이어 현장지휘관인 밀양경찰서장이 “5분 내로 차량을 빼지 않으면 망치로 깨서 차를 빼 버리겠다”며 폭언을 했다.(영상 있음)

8. 좁이어 양 옆에 앉아 있는 주민들에게도 자리와 물품을 옆으로 치우고 욕설과 함께 밀치는 등의 추가 폭력이 있었다. 이에 할머니들과 연대 시민들이 항의하였고, 연대 시민들을 둘러싸고 먹살을 가격하거나 넘어뜨리는 등의 경찰의 일방 폭행이 있었다.

9. 지난 40일간의 공사 재개 기간 동안 밀양 주민들과 연대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경찰의 폭언과 폭행은 대책위의 솔한 지적과 기자회견, 언론보도, 국정감사를 통한 국회의원들의 추궁과 지적에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밀양 주민들은 지금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고 있다.

10. 밀양 주민들은 “대체 우리가 무슨 폭력을 행사했고, 연대하러 온 분들이 뭘 그렇게 잘못하고 있길래 경찰이 이렇게 잔인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경찰은 무슨 짓을 해도 정당한 공무집행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다 불법이고,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 “결국 현장 농성이고 뭐고 집에 앉아서 첩탐 세워지는 거 지켜보기만 하라는 말이나”며 거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11. 경찰은 폭언(아가리에 똥물, 개새끼야~), 폭행, 성추행(배로 여성 활동가 및 주민을 밀어내내기), 음주 연행을 해도 어떤 제재를 받았는지 알려진 바가 없지만, 고령의 주민들과 연대 시민들에 대해서는 수없는 출석 요구와 채증, 연행, 폭행과 폭언 등으로 겁박하는 지금 밀양의 현실이 나무나도 참담하다.

12.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밀양송전탑 현장에서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경찰의 만행에 대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 제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의 소송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 현장 상황 문의 : 피해자 김대식(울산 민주열사기념사업회 사무국장 010 9319 7525)

* 해당 사진과 영상은 이메일로 전송할 것이며, 대책위 블로그 <http://my765kvout.tistory.com/245> 에도 사진과 영상을 올려 두었음.

2013년 11월 8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밀양 주민 1명 농성장에서 돌아온 뒤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짐〉

1. 10월 1일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이후 현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주민이 현재까지 총 49명에 이른 가운데, 상동면 도곡저수지 농성 현장에서 집으로 돌아온 70대 노인이 뇌출혈로 쓰러져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2. 지난 11월 2일 상동면 109번 현장 진입로 입구인 도곡저수지에서 하루 종일 농성하다 집으로 돌아온 주민 김효일(남, 75세)님이 그날 밤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 부산 백병원에 입원중이다.
3.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김효일님은 평소 지병이 없었으나 한전의 공사 재개 이후 농성 현장에 함께 하였으며, 수술 이후 의식은 돌아왔으나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로 알려졌다.
4. 이와 같이 동절기로 접어들어가면서 고령의 주민들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한전은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과 대화에 나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밀양 주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2013년 11월 8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11월 10일 (일)

0400 골안마을에 한전차량 5대, 경찰 2명. 주민 10명과 대치 중. 한전직원이 채증하는 과정에서 충돌 발생
0500 골안마을. 주민의 항의로 한전이 채증했던 사진을 삭제하고, 차량은 두고 걸어서 교대함. 형사들이 왔으나 별다른 충돌 없이 돌아감
0550 고답에서 한전 밥 배달차와 경찰과 대치 중
0650 110번 고답 주민들 한전 직원들을 잡기 위해 길을 막고 있음
0830 110번 고답마을회관 위쪽. 주민 30여명이 한전 차량 2대 막고 있음. 경찰버스 2대와 지휘차량으로 보이는 차 1대 와 있음
1040 110번 도곡저수지 부근은 정리되었으나, 고정삼거리는 대치 중. 의경 100여명, 여경 30여명. 주민 20~30명이 한전 차량 두 대를 막고 있음. 상황 정리를 위해 이야기 중

11월 13일 (수)

1) 일지

0706 109번 고답저수지. 경찰병력 너무 많아 막아내기 힘들

0750 동화마을 입구. 도로에 경찰버스 3~4대, 경찰 것으로 보이는 승용차 있음

0821 바드리 농성장. 철탑상부자재 2대 올라감. 항의하는 주민과 연대단위 항의하자 여경과 경찰 동원해 에워싸 감금하고 트럭 올라감

0911 96번 농성장 경찰 30~40명. 산 입구 쪽 경찰 50~60명. 길을 막고 출입제한 중. 농성장에서 만난 경찰의 말로는 오늘 공사 한다고 함

0926 96번 농성장. 병력증가 중. 한전 10여명. 연대 3명. 주민 1명. 벌목 중

0940 96번 농성장. 사복형사가 주민과 연대에게 내려가지 않으면 강제로 들어낸다고 경고. 헬기 다니고 있음

0950 주민과 연대에게 나가지 않으면 농성장을 철거하겠다고 경고. 절반은 한전 땅이라고 했다 함

0955 109번 도곡저수지. 계속 대치 중

1200 96번 농성장. 황토방 옆에 있던 천막을 철거하는 경찰에게 항의하던 도중. 황토방 문열쇠고리를 바꿔진입이 불가능해짐. 현재 경찰과 대치 중

1400 96번 인권위 방문. 주민 손00씨와 함께 황토방쪽으로 올라감

1904 96번 현장. 팽00 응급차 실려 가셨고, 구토중세 계속. 한전직원이 사유지에 허락 없이 천막 두개 설치. 땅주인이 오셔서 항의. 주민들과 한전직원들이 대치중



1919 현재 양산경찰서 김현진 경정이 현장 지휘 중. 주민들에게 '밀양경찰서에서 책임지고 치라고 했으니, 자신들에게 따지지 말고 주민에게 내일 아침 밀양서에 민사소송을 하든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망발

2) 보도자료

〈밀양 송전탑 국민 87.2% 심각하다, 밀양 송전탑 공론화 위원회 구성 필요하다 66.3% vs 필요 없다 24.2%, 경실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대책위 논평〉

정부와 한전은 언제까지 이렇게 압도적인 국민 여론을 무시하면서 밀어붙일 것인가?

1. 경실련 산하 (사)갈등해소센터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8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2013 한국인의 공공갈등 인식조사’ 결과를 11월 12일 발표하였다. 거기에는 올해 가장 큰 공공갈등으로 꼽히는 밀양 송전탑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도 드러나 있다.

2. 밀양 송전탑 갈등에 대해 응답...자의 87.2%는 ‘심각하다’고 인식했으며,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이 참여해 정책을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응답(66.3%)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거나 정책 결정이 늦어질 수 있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24.2%)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3. 이미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뷰가 지난 10월29일 발표한 밀양 송전탑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전력 주장에 공감한다는 여론(42.3%)보다 밀양주민 주장(46.1%)에 공감한다는 여론이 우위에 서기 시작한 사실도 우리는 확인한 바 있다.

4. 한국전력이 공사를 재개하던 10월 2일 무렵 시행한 여론조사는 찬성 59.6% vs 반대 22.5%로 찬성 비율이 2.5배 높았지만, 한달 보름 사이에 여론이 이렇게 거꾸로 뒤집혀진 것이다. 이는 고령의 노인들이 공권력 앞에 가로막힌 채 절규하고 부상자가 속출하는 장면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생겨난 변화이기도 하지만,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송전선로 갈등의 주요 열개(송전선로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 건강 피해, 핵발전소 증설 정책)가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이후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생겨난 변화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은,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여론의 흐름이 대체로 지역민보다는 국가의 편에 기울어졌던 일반적인 흐름에 비추어보아도 대단히 예외적인 것이다.

5.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밀양 송전탑 문제에 관한 여론의 심판은 이미 끝났다는 사실이다. 신고리3호기의 제어케이블 교체로 인하여 완공이 2년 이상 미루어진 사실을 포함하여 밀양 송전탑 공사는 이번 경실련 여론조사를 통해 보듯이 이제 완전히 명분을 잃었다. 오직 정부와 한전의 막무가내식 일방독주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6. 이제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농성장에서 돌아온 70대 노인이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지는 등 고령의 노인들

에 대한 건강상의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한전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당장 밀양 송전탑 공사를 중단하라! 그리고, 압도적인 여론의 흐름이 지시하는 대로 공론화의 마당으로 나오라!

2013년 11월 13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11월 14일 (목)

0730 96번 밤 사이 주민 등 3인 노숙함. 현재 한전 진입 막고 있음. 어제 낮 인권위 동행 때만 황토방 안의 물건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했을 뿐 그때 이후 물조차 가지고 나오지 못함

0930 96번 동화전. 경찰이 양00, 김00을 현장으로 올려보냄. 왜 주민을 차별하냐고 항의. 경찰은 묵묵부답

1348 96번 사유지 불법 점거한 경찰 천막은 아직 철거하지 않았음

1400 부북 입구 초소. 주민들이 길을 막는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며 부북 입구 초소에 경찰이 찾아옴. 초소에는 주민 3명, 연대 2명 있음. 경찰이 와서 쳐놓은 줄을 다 끊고 목줄까지도 다 끊었음. 경찰 봉고차 1대 온 것으로 추정

1400 96번 경찰이 불법 점거한 사유지의 주인이 방금 도착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도 경찰은 설득 중이라고 하며 철거하지 않고 있음

1440 부북 입구 초소 경찰들이 줄을 다 끊어 놓고 떠남. 주민들 다시 잇고 있음

1752 지금 밀양에 비가 오는데, 96번 동화마을 공사현장 옆의 황토방에는 주민 1명 포함, 3분이 노숙. 황토방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어제 그렇게 항의 했는데 온풍기 들고 실랑이만 하다가 주민이 다치자 경찰이 빠짐. 황토방은 한전이 열쇠를 바꿔 달고, 경찰이 둘러싸고 있어 방을 앞에 두고 세 분은 밖에 있음

11월 15일 (금)

1) 일지

1115 황토방의 자유로운 사용 매 식사때마다 식사와 음료 재공 추위에 대비한 방한복과 침낭제공 세분의 상태를 항시 점검할 수 있는 마을 주민의 자유로운 왕래보장을 요구. 더불어 96호기 진입로에 대한 자유로운 통행. 사유지 경찰 천막 철거 경찰 폭력 중단 96호기 경찰병



력 철수 등도 요구

1126 황토방 옆 아궁이에 앉아있는 여경. 황토방 아궁이 있는 곳에는 여경 2명이 따뜻하게 잘 있었고 주민들은 산속에서 떨고 있음



1503 13일에 올라갔던 주민 2명은 몸상태가 너무 안 좋아 주민 2분과 교대하고 내려왔음.

바람과 비가 새는 엉성한 비닐막에 두사람의 보금자리가 있고 밤새 비를 막고 지냈다고 함.

오후 6시에 긴급구제신청 담당 조서관이 오면 다시 올라갈 예정. 조서관은 긴급구제조서관이 오기전 상황과 악하러 왔고 당사자들과 면담하고 요구사항을 메모하고 경찰과 면담 후 내려감

1524 국감 때 영상에 나왔던 "아가리 똥바가지"가 동화전 농성장에 나타남. 정보과경찰들과 한참 의논하는 모습보고....주민들 항의 "당신이 어떻게 여기올수있냐".. "내 발로 내가 어딜 못가나?" "힘으로 해봐라" 등 막 말...주민들 항의로 쫓아냄

1527 96호 산위에 민변 2명과 울산저널 기자가 현재 농성자들과 같이 있음

1528 96호 진입로 사유지에 설치했던 경찰천막 2동 철수. 보성사 앞에 천막 3동 짓고 옮김

2) 보도자료

〈96번 동화전 농성장 주민노숙 및 인권유린 사태 관련, 국가 인권위에 긴급 구제 신청〉

- 한전은 공권력처럼 행동하고, 경찰은 한전을 비호하고 온갖 인권유린 자행.

1. 11월 13일 부터 현재까지 동화전 마을 96번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는 한전과 경찰에 의한 어이없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2. 한전은 13일 12시경, 96번 현장에 있던 천막 농성장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농성장 곁에 주민들이 직접 지은 황토방 농성장 안에 있던 주민 및 연대활동가 4인이 이를 막기 위해 황토방을 나온 사이, 황토방 자물쇠를 잠궈버리면서 황토방을 봉쇄했다. 이에 따라 주민 및 연대활동가 3인은 이틀간 산 정상인 96번 현장에서 노숙을 해야했다.

3. 경찰은 96번 현장에 고립된 주민들에게 구호품-식사, 물, 충전기, 침낭-을 전달하는 것까지 막아섰으며, 국가인권위 부산사무소 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인권위 직원 동행하에 주민에 한하여 현장으로 전달을 허용해 주었다.

13일 저녁에도 구호품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다시 제지하여 인권위 직원의 조정 끝에 겨우 주민을 통해서만 전달을 허락해주었다.

4. 13일 16시 경에는 경찰이 주민들의 이동을 막기 위해 마을 인근 진입로를 무단 점거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진입로는 농사일을 위해 조성한 사유지로서,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나 통보 절차가 없었지만, 허락을 받았다는 거짓말을 했으며,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조치하라는 막말을 남발했다. 14일 14시에 토지 소유자인 손 아무개씨가 현장에 도착하여 항의를 하였으나, 경찰은 굽히지 않았으며, 항의하는 주민들에게는 ‘토지소유자를 설득중이다’고 말을 바꾸었다.

5. 14일, 18시경, 동화전 마을주민 팽창섭(57세)씨는 경찰에게 부딪혀 넘어진 아내에게 접근하다가, 경찰이 밀치는 바람에 넘어져 머리와 목을 다쳐 현재 밀양병원 603호실에 입원중이다. 경찰은 부상자 구호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넘어진 팽창섭씨가 구토를 시작하고, 부인이 구급차를 부르자 그때서야 “우리는 책임이 없고,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는 상황에서 생긴 일이다”는 식으로 상황을 정리하려고만 하였다.

6. 밀양 대책위는 국가인권위에 96번 현장에서 벌어진 한전과 경찰의 인권유린상황에 대해 15일 11시부로 긴급구제신청을 하였으며, 금일 오후에 인권위 조사관들이 현장에서 조사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2013년 11월 15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11월 16일 (토)

0750 도곡저수지 경찰과 대치중. 122번 여수동입구. 경찰버스 2대 돌려보냄. 길을 막았다며 경찰이다 잡아 간다며 협박

1020 도곡저수지. 다시 경찰과 대치. 3차까지 경고. 내일부터 도곡 아래 삼거리로 강력계형사 12명 데려 오겠다 겁줌

1040 상황 종료

1343 바드리입구 명물식당에 있던 경찰과 주민들 대치 상황. 울산저널 기자부터 주민까지 고착상태 지속되고 있으며, 이유도 알려주지 않음

1230 채증 시작되어 연대자들이 항의하자 고착시작

1347 바드리입구. 현재 고착이나 대치는 풀렸음. 폴리스라인은 아직 제거하지 않고 있음

1412 폴리스라인을 농성장 앞에 치고 있고 계속 채증하고 이러한 상황을 항의하자 어제 아침 대구에서 온 활동가가 경찰과 말싸움하고 하는 일이 있어 안전을 위해 설치했다고 함

1549 109번 도곡저수지. 대치 상황 반복 중, 현재 여경과 할머니 대치 중. 연행 협박.

1644 109번 도곡못 주민들 경찰차 4대를 막고 노래 부르고 있음

1722 109번 도곡못 주민들 길옆으로 고착 당하고 경찰차 내려감. 상황 종료

11월 17일 (일)

0640 122번 6시 40분경 경찰 69명 126번으로 들어감. 109번 도곡못. 1차 충돌. 고착됨

0752 109 도곡못. 김00(67, 고정마을) 쓰러짐. 경찰이 주민을 고착하면서 혈압상승으로 쓰러짐.(기존에 혈압이 있으셨음) 경찰이 울산저널 기자의 폰을 으로 쳐서 떨어뜨려 액정 깨짐. 경찰은 도망감

0815 김00 안정 되지 않아 응급실로 후송. 링거 투여. 당일 퇴원

11월 18일 (월)

0720 109번 경찰과 주민 1차 대치(도곡저수지). 110번 현장으로 가기 위해 고답주민10명 미디어1명 산을 타는 중

0800 122번 한전 공사시작 123번에서 주민들 일부 이동

0815 경찰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123번에서 122번으로 주민 모두 이동 중

0926 122번 상황. 내려오는 주민들과 경찰 채증문제로 충돌 현재 대치상황 (주민 10명)

0930 109번철탑. 고정 주민 108에서 109번 도착 상황보고 내려옴

1000 바드리입구. 폴리스라인 다시 설치

1000 110번 현장에 고답주민 10명 미디어1명 도착

1000 122번 주민들이 모두 철수 하는 상황에서 경찰 채증 및 협박으로 대치. 여경투입

1128 110번 철조방 밖에서 주민 16명과 경찰이 대치중 경찰 인원이 계속 증가 중

11월 19일 (화)

1) 개괄

인권위원회 조사관이 중재하여 합의서 만들. 그러나 경찰서에서 만든 합의서 초안은 인권위원회에서 사용한 것임. 인권위가 경찰의 입장을 그대로 내놓은 꼴임. 경찰이 인권위원회 합의사항을 이유로 협소한 해석으로 공권력을 남용할 우려가 큼. 장하나 의원실을 통해서 인권위 담당자에게 항의하고 다음 주 화요일 국회에

산 심의 때 이 문제를 질의하기로 함

2) 일지

0740 95/96번 동화전으로 병력 이동(용회 주민들이 이동하다 목격). 동화전에서 근무한 의경들 배낭 메고 천막에 집합 중

0744 108번 고답마을 경찰차 7대 올라감. 경찰차 막으면 어제 현장에 올라간 일로 주민들 체포하겠다고 협박

1000 95/96번 동화전 할머니들 경찰 통행제한 항의. 연대오신 노동자들 경찰 앞에서 연좌농성 중. 연대 올라가지 못하고 막혀 있음

1400 95/96번 연대자는 황토방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막혀 있음. 물품 공급자도 주민 외엔 안 된다고 막고 있음

1634 96번 입구 농성장 앞에서 강00(40) 동화전 주민 연행. 사유지에 만들어진 임도 (3가구가 임도사용) 위에서 주민들이 대문을 설치하자 경찰이 철거하려함.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경찰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강00를 연행하라고 말함. 그리고 강00씨를 5~6명의 여경이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과정에서 여경(사진有)이 강00씨를 성추행함. 그러자 강00가 몸부림치고 강력하게 항의함. 그러자 경찰(사진有)이 “여경 중에 맞은 사람 있냐”라고 채차 물었고 황00 경사(여)가 “제가 코를 맞았습니다.”라고 말하자 김해서부경찰서로 연행함. (95 지역장 박00 경정 - 사진有) 코를 맞았다는 여경은 응급차에 실려 가지도 않았으며,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음

1700 경찰이 폭행이 아닌 공부집행방해로 연행된 것이라고 말을 바꿈

2200 00씨 김해중부서로 이송(주민 및 대책위 뵈고 돌아옴)

3) 합의서

합의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위 사건, 밀양송전탑 96호 공사현장 농성자에 대해 주민들이 지은 황토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는 긴급구제 신청 진정내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제규칙 제 2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한다.

1. 피진정인은 황토방에 외부단체(외지인)를 제외한 동화전마을 주민 2명에 한해서 황토방 출입을 차단하지 않는다.
2. 진정인이 소속된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는 향후 황토방내에서 생활하며 발생하는 모든 안전상의 문제(헬기작업 및 밭파 등 공사진행시 안전사고, 황토방 숯.망실, 화재, 고의나 과실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하여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처리할 것을 약속한다.
3.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긴급구제 진정은 해소, 종결하기로 한다.

합 의 서

德江
才通

사건번호 18-관급-00000000

JK

사건명: 밀알 송전탑(密陽 송전탑) 공사현장 농심자 보호조치 관련 긴급구제

정정연: 꽃빛나(발왕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감사)

작성장면: 밀양경찰서장

위 사건, 일양 순정왕 96호 군사원장 농성지에 대해 주민들이 지은 왕토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는 건국구제 실험 진영 내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한다.

1. 피진정인은 황토방에 외부단체(외지인)를 제외한 동화전마을 주민 2명에 한해서 황토방 출입을 차단하지 않는다.
2. 진정인이 소속된 일양송전임업노동조합대책위원회는 향후 황토방 내에서 생활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상의 문제(불법작업 및 밭파 등 공사 진행 시 안전사고, 황토방 송·압실, 화재, 고의나 과실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하여 자기책임과 원칙하에 처리할 것을 약속한다.
3.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긴급구제 신청은 해소, 종결하기로 한다.

2013. 11. 18.

진정인:

24/1/1968 6/12/1968 (1978) 1/1/1979

퇴직자의

필생정철사간(필생의 사간으로 보아 필생정철사간이란)

조사관:

7/15/20

11월 20일 (수)

1) 일지

1839 산 길 올라가는데 110번에서 발파작업을 함. 할매들이 올라가는 것을 알고도 이 밤에 발파작업을 함.

어르신들과 상의해 너무 위협해서 오늘은 하산하는 걸로 하고 이제 막 도곡농성장으로 내려옴

2) 보도자료

〈경찰, 밀양에서 주민들 미행, 감시, 사찰... 도를 넘었다〉

1. 귀 언론 정론 직필의 일관된 신념과 실천에 감사합니다.

2. 밀양에서 경찰들의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19일(화) 오후 4시 30분경 단장면 96번 송전탑 공사현장 앞에서 벌어진 동화전 마을 주민 강00씨 연행 사건에도 경찰의 주민 성추행이 있었음을 당사자와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00씨는 사유지로 만들어진 임도 위에서 주민들과 경찰의 대치 상황 속에서 [여경이 본인의 음부를 만지자 몸부림치는 도중에 갑자기 지휘관이 "코맞은 사람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여경한명이 "저요"라며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맞았다고 나온 여경은 자신의 음부를 만졌던 여경이었다고 말합니다.

주민들은 ‘경찰이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강제로 연행하면서 성추행을 무마하기 위해 무리한 폭행사건을 조작한다’며 강하게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은 공사 강행이후 계속된 것이며, 무리한 사법처리와 표적 수사 등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3. 이런 와중에 주민들이 제보한 아래의 사실들은 경찰의 공권력이 주민들을 어떠한 자세로 대하는지 단적으로 드러나기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래 사례들은 경찰들의 미행과 감시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는 주민들의 증언입니다. 경찰의 소환장 남발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주민들은 미행과 감시로 인해 집에도 편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4. 심지어 경찰은 자신들의 의무인 식별표시를 하지도 않으며, 주민들에게 “땀땀하면 왜 가리고 있냐, 얼굴을 보고 이야기 하자”라며 비아냥 거리며 모욕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7일 포평마을에서는 한전 직원이 주민의 모자를 고의로 치면서 얼굴을 드러나게 하고 “사진찍어”라고 하는 등의 물의를 일으켜 사과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5.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미행, 감시, 사찰 사례〉

○11월 6일 122번 공사가 시작 되고나서 여수주민들과 도곡마을 주민들이 현장에서 경찰과 긴 시간 대치를 했다. 저녁시간이 되어 집으로 가기위해 도곡마을 주민들이 차를 타자 그때부터 경찰차량이 뒤따라왔다. 이를 눈치를 챈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내린 뒤 기다리자 경찰들이 “집에 안가세요?” 라고 계속 보채기 시작했

다. 결국 주민들은 경찰이 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가는 걸 보고 집으로 돌아갔다.

○11월 19일 122번 공사현장에서 내려오는 길에 주민들에게 채증과 협박을 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다. 이후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장님 차를 타고 가는데 경찰차량이 따라 붙었다. 골목길에 류00(67세) 어르신이 내려 걸어서 들어가자 (그 골목에는 2가구만 살고 있음) 경찰들이 류씨 할머니라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차에 타고 있던 나머지 주민들이 들었다. 불안한 주민들은 집으로 가지 못하고 마을회관으로 갔으며, 경찰이 계속 따라와 다시 집으로 가지 못하고 농성장으로 돌아왔다.

○11월 6일 전후 시간미상 저녁시간

여수 주민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길목 앞에 낫선 사내가 서 있다가 집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다른 주민 집 앞에서 경찰이 봉고차를 돌리고 있는 모습을 봤다. 혹시 도둑이 들었나 싶어 김00씨 집으로 바빠 가보니 사복경찰이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여기서 무엇을 하나, 물으니 사복경찰이 길을 잃어버렸다고 답하고는 차를 타고 나갔다.

“혼자 사는 집구석에 시커먼 옷 입은 남자가 집주변에 서성대니까네 도둑인줄 알고 겁이나네 근데 차를 보니 까 농성장에서 보던 경찰차인가라 그래가 뭐하노하고 물으니까네 길을 잃었다안카나 그라고 뛰가뿌데 여기서 길 잃은 사람 침 본다 다 길이 뚫리었는데 잃어먹을게 어딴노” 김00씨 증언.

2013년 11월 28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11월 21일 (목)

1200 96번 동화전. 황토방에 점심 전달하려고 주민 1명, 연대 1명 진입 시도. 인권위합의를 내세우며 주민 2명으로 제한, 신분증 검사하려고 하는 경찰과 주민 간 20여분 간 충돌.

결국 주민 2명이 산으로 올라가심

1810 96번 동화전 현장에서 혈압 및 두통호소로 권00(53)씨 밀양병원으로 후송. (현장에서 경찰들이 협박 및 반말 항의하다 탈진)

11월 28일 (목)

<미합의 마을 주민에게도 개별보상 지급하겠다, 개별 보상금 수령하지 않으면 마을자산으로 귀속시키겠다는 오늘자 한전 발표에 대한 반대 대책위 입장>

1. '이제 한전이 돈으로 우리 마을을 끝장내겠다는 것인가?' 한전의 발표가 마을에 알려지자 다시 한 번 밀양 주민들은 격렬한 분노로 술렁이고 있다.

2. 애초부터 밀양 주민들은 '보상은 필요없다, 그 돈 받으려고 지난 8년간 투쟁한 것 아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힘을 실어주었던 한전의 개별보상안에 대해서도 총 2,962명의 경과지 실 거주자, 토지 소유자, 상속대상자인 자녀들이 반대 서명에 참여하였다.

3. 주민들은 보상을 원치 않는다는 것, 밀양 문제를 보상으로 풀 수 없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진실이다.

4. 결국 한국전력은 이미 공사가 완료된 청도면 지역을 포함하여 대표성이 극히 의심스러운 자칭 주민대표들을 중심으로 송전선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주민들을 엮어세워서 다수의 근접 피해 주민들을 압박하는 비열한 술책을 써 왔다.

5. 그리고, 이제는 아예 '12월31일까지 현금 개별 보상을 거부하면 마을 자산으로 귀속시키겠다'는 저질스럽기 이를데 없는 협박을 하고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민들에게도 현금보상의 마수를 던져서 마을을 다시 극심한 분열로 빠뜨리고 있다.

6. 개별 현금 보상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공사가 완료된 청도면 지역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시키게 된다면 이미 완공된 부산 정관, 양산, 창녕 주민들에게도 현금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 간접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현금으로 개별보상하게 하는 이번 처사로 인하여 향후 다른 국책사업에서도 동일한 요구가 빚발치게 될 것이다. 한전은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다.

7. 이 뒷감당을 한국전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전은 돈 몇백만원으로 주민을 괴로운 선택의 늪으로 빠뜨리고 마을을 분열의 수렁으로 밀어넣는 악마의 술책을 즉각 중단하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생겨날 엄청난 후과를 한전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가?

2013년 11월 28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11월 30일 (토)

1) 개괄

전국 각지에서 밀양으로 희망버스 출발

2) 일지

1627 단장면 올라가는 길 50~60명과 경찰 120명 정도와 대치. 가는 길을 막는 것에 항의하는 중

1630 여수동 천일암 입구 진입 막는 경찰에 항의 중

1631 경찰이 비탈길에서 시민을 밟. 떨어질 뻔함

1639 여수마을 입구로 진입한 대오는 현장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항의 집회 중

1647 비탈진 산길에서 법 위반 사실 고지 없이 시민 억류. 법 말할 필요 없다는 지휘관 육성녹음

1700 동화전 96번 송전탑 앞에서 대치 중

1749 동화전 마을에서 4명 고착

12월 1일 (일)

1) 개괄

밀양에서 희망버스 출발함.

2) 일지

1707 도곡저수지. 김00(86세) 응급실 후송. 시부모님의 산소에 묘를 파가라는 한전입간판이 서 있는 분. 오늘 더 흥분하신데다 고착 상태에서 기절하심. 주민들이 손대지 말고, 이야기해서 모셔오겠다 했으나, 여경 8명이 끌어냄. 영남병원 응급실로 후송, 링거 투여하여 안정 중

12월 2일 (월)

1) 개괄

유한숙 어르신 이 자택에서 음독하심

2) 보도자료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 사무국장 입건 조사하였다는 뉴시스, 연합뉴스, 매경 보도에 대한 대책위 입장〉

1. 금일 16시경부터 반대대책위 사무국장을 집시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정황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의 입장을 밝힙니다.

2. 현재 반대 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은 지난 8월 12일 한전의 관제데모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성 시위를 비롯하여 단장면 동화전마을 김정희씨가 긴급체포된 이후 밀양경찰서 앞에서 8월27일 진행한 항의 기자회견, 10월 17일 신고리3호기 제어케이블 불합격 사실이 알려지면서 명분이 사라진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바드리 입구 기자회견, 18일 상경하여 정부종합청사 및 한전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10월 21일 바드리 입구에서 진행된 경찰의 주민 기획체포 정황 폭로 기자회견 등에 대해서 ‘순수한 기자회견이 아니라 미신고 집회’라는 명분을 들어 집시법 위반으로 입건하여 조사하였습니다.

3. 집회 시작 48시간 이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현행 집시법의 기준을 따르지 못하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장 상황에 맞게 기자회견 형식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소음, 통행 방해, 폭력 등 공공적 피해를 미치지 않은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은 기본 상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밀양송전탑 반대 대책위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장 상황에 따라 집회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한 사안에 대해 자의적으로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집시법위반으로 조사를 한 것 결국 대책위의 활동을 탄압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4. 더 나아가 경찰은 현재 반대 대책위 후원계좌에 대한 기부금품법 위반을 이유로 계좌의 거래 내역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부금품법에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금할 시에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1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안행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밀양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2012년 8월, 경상남도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처로 신청하였으나, ‘영리 또는 정치 종교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으로 보기 곤란하며, 일반적인 공익의 개념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등록을 반려당한 바 있습니다.

5. 밀양 대책위는 지난 2년동안 120여차례 진행된 촛불집회에서 그 사이 후원한 분들의 성함과 사연, 후원금액을 빠짐없이 밝혀왔고, 후원금의 사용내역과 잔액을 소상하게 주민들에게 밝혀서 한점 의혹 없이 깨끗하게 사용해 왔습니다.

6. 현행 기부금품법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입법취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부 문화에 대한 정치적 규제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표적인 악법의 하나입니다. 기부금품법은 신고를 통한 등록제지만, 밀양 대책위의 등록 신청을 반려하는 사유에서 보듯 사실상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허가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부금품법은 작년 5월 제주 강정마을 주민회에 대한 기소 사례와 금번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 조사에서 보듯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미 기부금 모집을 정의한 기부금품법 제4조 2항과 처벌조항인 16조 1항 1호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았으며,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사무국장에 대한 집시법 위반 입건과 후원계좌에 대한 압수 수색을 통한 대책위 탄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3년 12월 2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12월 3일 (화)

0713 골안마을. 상동주민 10여명과 공사인부, 지금까지 대치 중

1055 108번 공사 시작 됨. 109번 고답마을 주민 12명. 골안동사 앞에서 한전공사인부와 대치. 7시부터 1시간 정도 대치 후 경찰 투입 되어 주민 고착하고 한전 교대 마침

12월 4일 (수)

〈동화전 마을 폭력 경찰 고소 사건 수사관 교체 신청〉

1. 11월19일 밀양 송전탑 96번 진입로인 동화전 마을에서 발생한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와 관련하여, 동화전마을대책위와 주민 2명이 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11월 25일 현장지휘관 박아무개 경정을 비롯한 경찰관 3명을 고소한 바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어제(3일)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던 주민에게 담당수사관이 편파적인 수사를 자행하였다. 이에 고소인인 주민 1명이 수사관 교체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3. 원래 이 주민에 대하여는 12월 3일 오전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담당 수사관은 고소장의 사소한 형식을 문제 삼으며 짜증을 내기 시작하였다. 실제 피해를 입은 개인 이름으로 고소하든지, 마을대책위원회 이름으로 고소하려면 대책위의 조직도와 대책위원들이 연명한 위임장을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4. 하지만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곳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마을대책위가 그 이름으로 고소할 경우, 사건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당사자 주민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었다. 그런데 그런 관행을 무시하고 조직도를 밝히라는 것은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5. 하지만 주민은 수사관의 의사를 존중하여, 오후에 피해 주민 개인의 이름으로 새로운 고소장을 밀양경찰서에 제출하고 조사를 다시 받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수사관은 다시 '6하원칙에 따라 조리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며 주민의 말을 끊어 중단시키고 짜증을 내며 시비조로 말을 걸기 시작하였다. 애초부터 이 수사관은 경찰을 피고소인으로 한 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이 주민은 더 이상 이 수사관으로부터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수사관 교체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6. 이 사건은 원래 경남경찰청으로 접수한 사건이었는데, 경남청에서는 주민들을 괴롭히며 탄압하던 밀양경찰서로 이관시켜 버렸다. 그러더니 결국 '가재는 게 편'이라는 점을 입증하듯, 경찰의 범행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수사관의 교체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밀양 대책위는 밀양경찰서가 사건을 더 진행하지 말고 속히 검찰로 송치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문의 : 조사 당시 입회한 민변 배영근 변호사 010-9983-1827)

2013년 12월 4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12월 5일 (목)

0700 골안마을. 주민 7명, 연대 6명, 여경 30여명, 경찰 100여명이 1시간 넘게 대치

0820 주민과 연대 모두 사지 들려 나오고 고착 당한 후 한전 걸어서 교대 함

12월 6일 (금)

1) 일지

0820 골안마을. 주민에 막혀 철수하는 듯했던 경찰과 한전, 셋길로 돌아 산으로 올라가려고 시도. 어르신들이 추격하여 후미에 있던 한전직원들을 붙잡았음. 현재 계속 여경이 투입되고 있음

1630 골안마을. 경찰과 다시 대치. 주민 20여명, 연대 7명. 경찰 40여명. 여경 추가 배치

1715 주민 끌어내고 경찰 식사 들어감

2) 보도자료

<밀양 상동면 고정마을 유한숙 어르신께서 끝내 운명하셨습니다>

1. 지난 12월 2일 밤, 자택에서 음독하셨던 밀양 송전탑 경과지 상동면 고정마을 유한숙 어르신께서 12월 6일 새벽 3시50분경, 가족과 이웃 주민들의 소생을 위한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2. 어르신의 소생을 위해 함께 기도했던 밀양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과 대책위는 고인의 명복을 삼가 비읍니다.

3. 어르신께서 함께 하시던 상동면 고정마을 이장님과 주민들은 어제 밤, 고인께서 계시던 부산대병원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4. 지난 12월 4일 오전, 고인께서 따님을 통해 ‘대책위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하였고, 오후 1시경 대책위 공동대표인 김준한 신부와 상황실 간사가 찾아간 자리에서 따님을 곁에 두고 다음과 같은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결혼도 시켰다. 그런데 11월경에 한진 과장 1명과 또다른 1명이 찾아와 (우리집이) 송전선로에서 얼마나 떨어져있는지 알게 되었다. 150m인지 200m인지 가까이 첩탐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았다. 첩탐이 들어서면 아무 것도 못한다. 살아서 그것을 볼 바에야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송전탑 때문에 농약을 마셨다.’

5. 밀양 대책위와 밀양 송전탑 경과지 4개면 주민들은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을 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인사를 올리며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삼가 비읍니다.

2013년 12월 6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고 유한숙 님 사망 관련 경찰 보도자료에 대한 유족의 반박〉

1. 밀양경찰서는 금일 보도자료를 내어 고인의 사망에 대해 “음독현장에 같이 있었던 가족을 상대로 음독 경위에 대해 확인하였던 바, 특정 사안으로 음독하였다는 진술은 없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 그러나, 유족인 따님의 진술은 이렇습니다. “12월 3일 새벽 2~3시경에 경찰관 3~4명이 아버지가 후송된 병원으로 와서, 아버지에게 ‘왜 음독을 하게 되었는데’를 물었다. 그때 아버지가 눈을 뜨시며 ‘송전탑 때문에 약을 마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내용을 곁에 있던 경찰관 1명이 휴대폰으로 녹음해갔다”고 합니다.

2013년 12월 6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12월 8일 (일)

1) 개괄

10월 공사강행 이후 환자상황. 총인원 77명(부상자 4명, 연대자 9명, 10월 46명, 11월 18명, 12월 4명) 어르신들은 입을 모아 얼마나 더 죽어야 끝이 나냐며 절규하고 있음. 어르신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억울하고 분함

2) 일지

1839 밀양 시민분향소에 이슬을 피하기위해 비닐을 치는 것에도 경찰들이 하천법 위반을 운운하며 제지함. 지금 주민 항의 중

12월 9일 (월)

1) 개괄

간밤에는 주민 및 연대시민 30여명이 현장에서 노숙하면서 밀양시민분향소를 지켜냄. 날이 밝자 경찰버스 6대가 증강 배치되어 병력들이 분향소 동서남북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음. 어제에 이어 침탈 우려가 높은 상황임. 충돌 예상됨

대책위는 업무 개시시간인 아침 9시부터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을 접수할 예정임. 주요 내용은 "고인의 추모를 위한 분향소이며, 통행제한, 소음피해로 인한 민원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시민체육공원 인도에 설치된 분향소 천막을 시설물철거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강제로 뜯어내는 과정에서 총 4명이 실신하여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으며, 시설물 2동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다수가 고령자인 주민과 연대시민 30여명이 노숙을 해야 했다. 경찰은 이슬을 가리기 위한 비닐설치도 처음에는 제지하고 나서기도 했다. 정당한 추모의 권리조차 법적 근거 없이 폭력적으로 진압함으로써 유족의 명예와 주민 및 연대시민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인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긴급 구제 신청하고자 한다."

영남종합병원 내 농협장례식장 빈소는 어제부로 종료하고, 금일 오전 유족 3인(상주, 큰 따님, 둘째 아드님) 시민분향소로 결합하여 조문객을 받고 있음. 천막 불법 폭력 철거 및 노숙 상황에 대한 국가인권위 긴급구제신청은 금일 09:07부로 접수되어 금일 오후 4시경 조사관 방문 예정. 현재, 빗방울이 흩뿌리고 있으며, 현장 방문한 국가인권위 부산사무소 조사관 통하여 밀양경찰서에 '빗물이 고여 흐를 우려가 있으니 바닥에 빠

레트 설치와 비가림막 비닐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밀양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이 '추가 물품 반입은 불가하다'는 입장 통보받음. 경찰은 현장 입구로 들어오려는 차량을 검문검색하고 있으며, 현장에 쌀, 라면, 굴박스를 싣고 들어오려는 청주성가소비녀회 수녀님 차량까지 검문하여 '천막이 들어있는지 검색하겠다'고 하였으며 차량 진입을 허용하지 않아 직접 굴박스 등을 들고 현장으로 들어와야 했음. 대책위에서 밀양경찰서에 시민 분향소 위치에 12월25일까지 집회신고 접수하였으며, 수요일 추모문화제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임. 고 유한숙 어르신 양돈 농장에 500여두의 돼지를 건사하는 일로 유족들이 교대로 일을 하고 분향소에 나와야 하는 형편으로 일손이 필요한 듯 하여 뜻있는 시민들의 일손 도움을 요청함

2) 일지

1455경 주민 1명이 빠레트가 실려 있는 차량을 근처에 대자 차량을 에워싸고 고착하고 있음
1530 빠레트가 실려있는 주민차량으로 경찰에 에워싸고 빠레트를 아무런 이유없이 들고 가버림. 이후 천막이 들어있는 또다른 차량에도 경찰에 에워싸자 항의하던 송영숙 (58) 주민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
1600 추위서 피워놓은 난로에 사용될 땀감을 가져다 놓는 일마저 막힘
1730 파레트 찾아가래서 찾아왔는데, 들여놓지 못하게 하고, 경고장 내민다고 으름장을 놓고, 하천법, 도로교통법 위반 운운하며 막음. 경찰과 시청직원들이 트럭을 에워싸고 있음
1830 국가인권위와 경찰지휘관이 중재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빠레트를 깔게 해줄테니 비가 그쳐 습기가 사라지면 빠레트를 다시 회수하겠습니다. 각서를 쓰라고 요구했으나, 통행로 확보해주고 천막은 설치하지 않되 빠레트는 설치하기로 협의함

3) 보도자료

〈고 유한숙 어르신 시민분향소 설치 관련 충돌 및 향후 계획〉

1. 인륜도 없고 법도 없는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습니다. 금일 고 유한숙 어르신의 시민 분향소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끔찍한 충돌 과정의 전말을 알려 드립니다.
2. 금일 영남종합병원 내 농협장례식장에서 설치된 빈소에서 고인의 사망 원인 왜곡과 관련한 유족들의 기자회견이 종료된 12시경 밀양시청 앞으로 시민 분향소 설치를 위해 주민들이 이동하였으나 격렬한 충돌이 발생하였고, 이어 밀양역 및 한국전력 밀양지사 앞, 밀양관아, 영남루 입구 등에도 경찰 병력이 차량 및 의경, 사복 형사 등으로 촘촘히 막아서자 영남루 맞은편 시민체육공원 들머리에 시민 분향소를 위한 천막 2동이 설치되었습니다.

3. 그러나, 영남루 쪽에 있던 경찰 100여명이 몰려와서 주민들과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경찰은 3차례에 걸쳐 진입하여 결국 천막 2동을 모두 부수고 찢어냈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아비규환의 현상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 4명(밀양시청앞 1명, 시민체육공원 입구 3명)이 119구급차량에 응급후송 되기도 하였습니다.

4. 결국 노천에서 분향소가 설치되었고, 현재까지 노숙할 태세로 추운 날씨 속에 노천 분향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15시경, 유족들이 노천 분향소에서 분향하고 난 뒤, 날씨가 몹시 추운 상태에서 노천에서 분향소가 유지되는 것은 고령인 다수 주민들과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므로 밀양시청과 협의하여 시민분향소 설치가 될 때까지라도 임시로 천막 설치를 해 줄 것을 대책위 관계자와 함께 정식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상부의 지침이므로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다시 시민체육공원 입구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시도하여 다시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격분한 주민들 일부는 도로를 점거하려 도로에 뛰어들기도 하였습니다.

5. 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로,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을 일으키지도 않는 분향소 설치를, 그것도 천막 설치까지 막아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법 이전에 인륜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폭거입니다.

6. 본 대책위는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을 접수할 것이며, 인륜을 저버리면서까지 분향소 설치를 막아서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노천 상태로라도 분향소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2013년 12월 9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12월 10일 (화)

1000 밀양시 재난관리과에 시민분향소를 위해 일시 점용승인 요청 공문 보냄

1020 삼문동 주민 20명 시민분향소로 항의방문 옴

1023 107번에 헬기로 포크레인 운송됨

2321 시민분향소. 공무원 10명이 교대 근무 중이며, 경찰서장이 20시경에 분향소를 들렀으며, 현재 경찰병력을 증강하여 지키고 있음

12월 11일 (수)

1) 일지

0740 골안마을입구에서 경찰 한전과 주민 대치 중. (주민&연대 10여명, 한전 30명 경찰 1개 중대)

2) 보도자료

〈고 유한숙 어르신 시민분향소 소식〉

1. 어제는 별다른 충돌 없이 시민분향소가 유지되었습니다. 분향소에는 현재 소식을 듣고 달려온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으며, 지나가는 밀양 시민들 중에서도 조문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빈소가 정리된 월요일부터 유족들이 나와서 조문객을 맞고 있습니다.

2. 간밤에는 밀양에서도 찬바람이 불고 매우 쌀쌀한 날씨였음에도 주민 20여명과 연대 시민 10여명이 노숙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앞으로 더 추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여전히 밀양시와 경찰은 분향소 주변을 뺑 돌리싸고 마치 주민들이 무슨 일이라도 할 것처럼 감시만하고 있을 뿐, 노인들이 사흘째 노숙농성을 하는 참혹한 상황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3. 금일 분향소 주변에서 예정된 추모제 역시 집회신고를 반려당했습니다. 대책위에서 밀양시에 하천부지 일시 점용승인 신청을 접수하였으나, 밀양시가 그 이전에 먼저 분향소에 대해 철거 계고장을 보냈으므로 기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경찰의 집회신고 반려 명목 또한 밀양시에 먼저 하천부지 일시 점용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그걸 얻지 못했으므로 반려한다는 입장입니다.

4. 추모제는 ‘관혼상제’에 해당하는 의례로써, 엄밀히 따지면 집회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경찰과 발생할 수 있을 충돌과 법적 다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저희가 제출한 집회신고조차 반려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어이없으리만치 강압적으로 몰아세우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과정에서 더욱 깊은 상실감과 분노를 쌓아가게 된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5. 금일 예정된 1회 추모제는 애초에 집회신고를 접수해놓은 분향소 건너편 영남루 입구 계단에서 저녁 7시부터 진행됩니다. 오늘 행사에는 부울경 지역 연대시민들, 서울대책회의 소속 시민들과 주민들 200여명이 이상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추모제는 고인에 대한 묵념, 주민분들의 유한숙 어르신에 대한 기억 나눔, 연대 발언, 살풀이 등으로 진행됩니다.

2013년 12월 11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12월 12일 (목)

1100 서울시청. 송전탑공사중단 및 유한숙 어르신 추모기간 선언 기자회견 후 분향소 설치. 경찰이 깔개를 내리려는 차량을 견인시도했으나 견인에는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분향소 테이블과 촛대 등이 파손되고 화환도 부서짐. 현재 연대하는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연좌해 있고, 분향소 다시 설치함



1300 서울시청. 광장의 분향소를 부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전국대책위 활동가들이 시청본관로비 연좌

1400 서울시청. 경찰이 손피켓을 다 부수고 일부 활동가를 사지를 들어 끌어냈으나 다시 로비에 연좌 중

1540 108번 골안마을. 연대 6명, 주민 3명 경찰차량 막으려 했으나 들려나오고 상황 종료

12월 13일 (금)

1) 개괄

금일 오전 96번 황토방에 권00(56)가 도착하자 경찰이 채증했고 이에 강력하게 항의하다 황토방으로 들어간 권00는 수면제와 처방전약 등을 50~60알 먹었으며 문을 잠근 채 쓰러짐. 이후 남편과 주민들이 황토방으로 상태확인을 위해 올라가겠다고 했지만 주민증을 제시하라고 하며 통행을 막았고 구급차마저 통행 못하게 하여 뒤늦게 내려옴

밀양병원에서 권00 씨는 나하나 죽어서 송전탑을 막으면 죽겠다며 위세척을 거부하다 주변의 설득으로 위세척을 시작했고 곧 창원삼성병원으로 옮길 예정. 계속해서 오열하며 경찰이 한전은 마음대로 산을 오르게 하면서 우리주민은 못 가게 하느냐 죽겠다고 말함. '내 죽으면 철폐 안 하겠지' 만 반복하고 있음

2) 일지

1420 동화전 96번 황토방. 현장에 주민 1명이 홀로 올라가서서 수면제를 복용함. 홀로 있는 상태에 정확사정을 파악하려고 주민들이 올라가길 원했으나 경찰에게 막힘. 협의서를 운운하며 민증을 요구. 현재 대책위와 국가인권위소장이 함께 동행하여 현장으로 출발. 119구급차에도 신고를 접수. 수면제를 복용한 주민은 현재 의식은 있는 상태

1544 96번 황토방. 권00씨는 약기운이 퍼져 의식이 잃어가고 있다고 함. 119구급대의 들것에 실려 중간지점까지 내려온 상태. 입구에서는 경찰이 병력이 증강되고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중

1550 119구급대의 들것에 실려 산 아래로 내려옴

3) 보도자료

〈단장면 동화전마을 권아무개님 자살시도 관련 현재상황 종합〉

1. 금일 오후 2시경, 밀양 송전탑경과지인 단장면 동화전마을 96번 현장 옆 황토방농성장에서 이 마을주민 권아무개씨(53세)가 수면제등이 포함된 다량의 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하여 응급 후송되어 밀양병원에서 2차례의 응급 위세척후 현재 마산삼성병원에서 응급치료 중 입니다. 담당 의사소견으로는 음독한 약의 성분을 분석해봐야 알겠으며, 목숨과 상관 없는 약이 상당수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본인이 위세척을 거부하고 있고,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 위세척의 의미가 없고, 투석을 할 상황은 아니라고 하며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2. 권아무개씨는 오늘 오전 11시경에 혼자 황토방농성장으로 올라갔으며, 산으로 올라가는...입구에 있는 경찰 저지선에서 '주민등록증요구'등을 당하였고 옥신각신하는 중에 산 위에 다시 올라가니 경찰이 채증을 하면서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3. 권씨는 오후 2시 13분께 남편에게 '수면제 40알을 먹었다'며 전화를 하여 남편 A씨가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급히 산으로 올라가려 하였으나 경찰은 주민증 제시(이분들은 실제 마을 주민들로 경찰은 이 서로 얼굴들을 알고 있었음)를 요구하고 상황 육하원칙을 대라고 하여 '사람이 죽어가는데 무슨 주민증과 육하원칙이 필요하냐'며 등의 다툼으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다녀오는 사이여 다리가 풀려버린 상태였고,대신 마을주민 하아무개씨를 대신 올려보내려 하였으나, 이분에게도 주민증제시를 요구하여 집에 다녀오는 등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4. 또한 경찰은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자, 왜 안 올라가는주민 의항의에 '경찰이 못 올라가게 했다, 약이아니라 술만 먹었다고 경찰이 말하더라'고 하여 주민의 항의끝에 산 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5. 벌써 두 분이 세상을 떠나셨고, 또 한사람이 자살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전은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꿈쩍하고 잔인합니다. 밀양병원에서 위세척을 거부하는 권씨 곁에서 억지로 위세척을 시키면서 달려온 주민들은 차마 말할 수 없는 기분이 되어 있습니다.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12월 14일 (토)

1) 일지

0700 골안마을 입구. 경찰과 충돌. 경찰 고착 후 경찰들이 산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주민과 연대자들이 경찰들이 산으로 올라가려는 걸 막아섰고, 경찰간부 몇 명이 부하들에게 "다 올라가" 라고 말한 뒤에 주민, 연대자들과 대치. 그 과정에서 연대자 남00 경찰간부를 필사적으로 막아섰고 그 간부가 헤드락을 하고 벽으로 남00이 내팽겨치고 무릎으로 밟고 현장연행하라고 함. 이유는 공무집행방해라 함. 남00씨(17) 연행하려는 것을 연대자 주민들이 필사적으로 막았고 현재 박00씨(20) 밀양병원으로 이송 중. 박00씨는 의식은 있는 상태이지만 두통과 허리통증을 호소. (경찰이 밀치는 과정에서 넘어지며 다짐)

2) 보도자료

〈권아무개님의 남편이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내용〉

아래 내용은 권아무개님의 남편이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내용입니다

1. 저는 12월 13일 발생한 동화전마을 음독자살기도의 당사자인 권00의 남편입니다. 당시 사람의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위중한 상황에서 보여준 경찰의 행태는 실로 어이없다할 정도로 반생명적이며 반인권적이어서 국가인권위에서 엄중하게 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바로잡아주실 것을 부탁하는 마음으로 진정을 드립니다.

2. 사건의 경과

제 아내 권00은 13일 오전 11시경, 동화전 96번 공사현장 옆에 있는 황토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황토방은 국가인권위 긴급 구제에 의해 주민 2명에 한해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었으며, 평소 경찰은 매일처럼 농성장에 나와 주민들의 밥을 해 주는 제 아내 얼굴을 몰랐을리 없었지만, '주민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아내는 그것 때문에 매우 화가 나서 경찰과 다투었고, 흥분된 마음으로 산에 올라갔습니다.

20여분만에 산에 올라가 황토방에 도착하였는데, 다시 그때는 경찰이 채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 아내는 이미 경찰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채증을 새롭게 할 이유도 없고, 불필요하게 아내를 자극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는 밀양경찰서에 마을 주민인 강00씨의 음부를 폭행하고 경찰이 사유재산을 침해하였다는 경찰 고소에 고소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밀양경찰서 수사관이 제 아내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하는데, 제 아내에게 '

마을 대책위 조직도를 가져오라, 육하원칙에 맞게 답하라'는 식으로 신경질적으로 조사하는데 분개하여 수사관교체를 요구하여 관철시키기도 하는 등 사사건건 주민들을 탄압하고 꼬투리를 잡는 경찰에 대해 극도의 분노를 갖고 있었고, 그 사정을 모르리 없는 경찰은 다시 채증과 주민증 제시로 아내를 자극한 것입니다.

거기서 아내는 유서를 써 놓고 평소 처방받아온 약 50~60알 정도를 소주와 함께 마셨습니다. 그 시간이 오후 2시경인 것 같고, 제게 2시 13분경 전화를 해서 '수면제를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고 곧장 올라갔고, 동네 동생인 하00씨에게도 연락하여 함께 올라가는 도중에 하00 씨가 대책위에 연락하여 대책위에서 119에 신고하고, 마침 대책위 상황실에 다른 일로 오기로 되어 있던 인권위 부산사무소장 이광영 소장과 2명의 조사관, 그리고 대책위 사무국장이 함께 현장으로 급히 달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3. 경찰의 조치-1, 주민증 제시로 시간지체, 자극, 허위사실 발설

제가 전화를 받고 하00씨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는 입구 농성장에서 경찰과 맞부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경찰은 제게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였습니다. '내가 남편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놀라서 다리가 풀려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행한 하00씨에게도 먼저 올라가라고 부탁했는데, 경찰이 또다시 주민증을 요구하여 차량까지 다녀오는 등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흥분되어 있는 가족에게 주민증 제시를 요구하고, 실랑이 와중에 경찰은 '육하원칙대로 해야지'하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제 아내가 술만 마셨고, 약은 먹지 않았단, 걱정하지 말라고 허위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제게 전화가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한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제게 전화까지 했는데, 경찰의 말이 미덥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약봉투도 유서도 발견되었는데, 경찰이 왜 당시에 제게 이런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4. 경찰의 조치-2, 119구급대원 올려보내주지 않음, 시간 지체

대책위에서 119신고를 한 뒤, 오후 2시 50분경에 119구급대원이 산 아래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진입로 입구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때도 경찰은 산소호흡기를 든 구급대원 2명만 보내주고, 들것을 들고 있는 2명은 '술만 마셨고, 약은 먹지 않았단'는 이유로 올려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황토방 안에는 약봉지가 흩어져 있었고, 번개탄도 있었다고 하며, 유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제일 먼저 황토방 문을 따고 들어간 경찰이 이를 못 보았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왜 들것을 든 119구급대원도 올려보내지 않고 헬기로 구급신청도 하지 않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올라간 하00

1030 고답마을. 크레인 아래 연대자 모두 연행. 주민들 모두 고착됨. 크레인 아래 있던 연대자 4명 연행. (정00, 박00:김해중부서, 심00, 여학생 1명:김해서부서, 김00:병원 응급 후송됨)

1324 고답마을. 컨테이너에 전기를 연결하려는 인부들을 막기 위해 어르신 두 분이 전봇대에 줄을 묶어 목에 감음

1350 고답마을 네 방향으로 어르신들 감금. 경찰 비호 하에 인부들이 컨테이너에 전기 연결

1350 충돌 발생하여 고정마을 김00(66세) 쓰러짐. 고착 당시 몸싸움으로 혈압상승. 가슴통증 호소하여 병원 후송

1703 박00(77세, 도곡마을) 경찰이 밀어 할머니가 벽에 머리 부딪혀 병원 후송됨. 치매 약간 있으시고, 가족도 없이 혼자 사시는 분이라고 함. 옆에서 보신 주민분 말씀으로는 가만히 있는 할머니를 밀쳐서 할머니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힌 것이라고 함

18:20 밀양병원 응급실로 갔던 박00 할머니 머리에 혹이 있어 CT 촬영하기로 함. 보호자(아들) 도착함. 입원하여 진찰 후 경과 지켜 보기로 함

1월 9일 (목)

밀양송전탑 114번 부지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주민들과 경찰의 대치과정에서 연행되었던(1월 7일 연행) 정00과 누00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함

1월 10일 (금)

〈밀양 송전탑 연대활동가 2인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밀양 송전탑 연대 활동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대준 활동가에 대해서는 구속, 조은별 활동가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정대준 활동가의 경우, 이번에 연행된 1월 7일 고답마을 상황이 아닌 지난 12월 11일 산외면 골안마을에서 한전 인부와 벌어진 폭행을 주요한 구속 사유로 참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그러나, 그 사건은 이미 오마이뉴스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울산 환경연합 오아무개 처장이 인부에게 뺨을 맞는 등 주민들과 연대활동가들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었고, 정대준 활동가 역시 인부에게 패대기쳐지는 폭행을 먼저 당한 상태에서 벌어진 몸싸움이었습니다.
4. 결국, 정대준 활동가에게 쏟아진 3,571명의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사례까지 엮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주민들과 이를 도우려는 연대활동가들의 연대의 의지를 꺾으려는 공권력의 시도를 모르지 않을 법원이 무력하게 이를 추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5.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본 대책위는 정대준활동가의 조기 석방을 위하여 향후의 법정

씨와 그 다음 따라 올라간 대책위 사무국장, 인권위 조사관들에 의하면 오후 3시경에는 밀양경찰서장도 향토방 현장에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산으로 올라간 대책위 사무국장과 하00씨 등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반강제로 119들것에 아내를 싣고 산길을 타고 내려와서 2시경에 음독한 제 아내가 오후 4시경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마산삼성병원에서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위세척은 2시간 지나면 별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5. 결론

위와 같이 경찰은 현장 입구에서 평소 경찰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주민증 제시를 요구하여 사람을 자극하고, 불필요하고 불법적인 채증을 하여 사람을 또 한번 자극하여 격앙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급히 달려가는 저와 주민들에게 주민증 제시와 육하원칙 운운하면서 또한 시간을 지체하고 격분하게 하였습니다. 허위사실로 119구급대의 진입조차 제지하였습니다. 현장에는 경찰서장이 와 있었고, 이런 상황을 경찰서장이 지휘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실을 조사하여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 12월 14일

〈밀양 송전탑 세 번째 자살 기도 사태를 지나며, 밀양 주민들이 사회 각계에 드리는 호소문〉

1.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오고 가슴이 용두질칩니다. 세 번째,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술만 마셨고, 약은 먹지 않았다는 경찰의 이야기를 믿고 안심했다가, 그때 구급대를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산으로 올려보내지 않았다면, 밀양병원에서 억지로라도 위세척을 시키지 않았더라면, 권아무개님이 어찌되었을까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합니다.

2. 지난 주 화요일 고 유한숙 어르신이 음독하시고, 어르신이 운명하신 이후, 시민분향소를 차리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천막이 찢기고 다 부서지고, 옷통을 벗어 항의하는 할머니가 발길질을 당하고, 찬바람 속에서 떨리는 비닐 아래서 노숙이 시작되었고, 7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의 사과 한 마디 없었습니다. 경찰과 밀양시청 공무원들은 비가 내려 습기가 올라오는 분향소에 반입하려는 빠레트조차 반입하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3. 밀양 주민들은 벌써 76일째, 전쟁보다 더한 나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 56명이 병원으로 실려 갔고, 그 중에 한 분은 뇌출혈로 투병중이시고, 다른 한분은 돌아가셨고, 권아무개님은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경찰은 모든 현장에서 꼼찍하고 잔인하리만치 어르신들을 제압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두 번째의 죽음 이후 일주일만에 벌어진 자살 기도에도 주민들은 패닉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4. 열흘만에 중단되었던 지난 5월 공사 직후인 2013년 6월, 보건의료단체연합 소속 의료인들이 밀양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밀양 송전탑 주민들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고위험군이 무려 69.6%나 나왔습니다. 9.11테러를 겪은 미국시민들의 4배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하였습니다. 매우 심한 우울증 17.7%, 매우 심한 불안증 30.4%, 매우 심한 공포증 29.1%였습니다.

5. 지금은 5월 공사때의 열흘이 아니라, 76일째입니다. 그 사이에 두 분이 목숨을 끊거나, 끊으려 하였습니다. 지금 밀양 주민들의 심리 상태는 최악의 수준입니다. 5월 공사때는 경찰과의 갈등은 미미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찰이 사사건건 모든 일상을 통제하고, 여기저기서 경찰의 엄호아래 송전탑 공사가 속속들이 진행되고, 헬기가 정신없이 머리위를 날다니며, 하루가 멀다하고 주민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6. 우리는 두렵습니다. 두렵고, 또 두렵습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먼저, 정부와 한전 관계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이제 제발 그만해 주십시오. 다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국가의 존재이유까지 묻지는 않겠습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주민들끼리 서로 원수처럼 싸우게 만들고 있는 악마의 책략과 같은 개별보상금 지급 행위를 당장 그만두어 주십시오. 이대로 공사를 더 진행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들과의 대화의 장으로 나와 주십시오.

7. 정치권에게 호소합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는 시작 당시 명분으로 삼았던 신고리3호기 2014년 8월 준공이 2년이상 뒤로 밀리면서 이미 명분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서 지금 주민들은 죽음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의 폭압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조정하고 타협점을 찾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지금 밀양의 현실만 놓고 본다면, 이것은 정치의 실종을 넘어 정치의 파탄입니다. 밀양 현장에 내려와서 상황을 파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부와 한전에게 공사 중단을 요청하고 대화의 마당을 열어주십시오.

8. 언론에게 호소합니다. 밀양 송전탑 현장에서 취재기자를 만나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대책위가 배포하는 보도자료와 경찰자료만을 바탕으로 표피적인 사건들의 추이만을 전달하고 있을 뿐입니다. 공중파 방송과 보수언론에게 밀양 송전탑은 지금 완벽하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그 절망과 터질 것 같은 분노의 목소리를 담아주십시오. 그리고 사태가 왜 이 지경이 되어가는지 심층을 분석해 주십시오. 사람 목숨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습니다. 보수언론, 공중파

방송의 끔찍한 외면과 매도 속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9. 종교인들에게 호소합니다. 밀양 현장으로 달려와서 주민들을 위로하고 다독여 주십시오. 지금 주민들은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예민함으로, 한전의 개별보상금 지급 음모 속에서 서로 다투고, 설세없이 자행되는 공사와 공권력의 철벽같은 몽매한 폭력 속에서, 어디 기댈 데가 없어 하루하루 낙심하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10. 특별히 인간의 심리와 치료를 다루는 의료인들에게 호소합니다. 지금 밀양 현장의 주민들의 심리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하여 주십시오. 놀라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집단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심리 전문가, 마음치료 전문가들이 밀양에는 절실합니다. 밀양으로 달려와 주십시오.

11.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밀양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편안하게 노후를 맞이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9년동안의 갈등, 13차례의 공사중단과 재개, 그리고 이번 10월 이후 76일간의 엄청난 탄압 속에서 주민들은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제발, 밀양 주민들의 고통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부와 한전을 향해 ‘이제 그만!’을 외쳐 주십시오.

2013년 12월 14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12월 16일 (월)

1700 밀양 시민분향소 계고장을 들고 경찰과 시청직원, 채증 카메라. 분향소에 왔다고 함

1730 내일 2시까지 철거하라는 행정대집행 계고서와 현재분향소가 있는 하천부지 일시점용승인을 불가한다는 회신을 주고 시청직원은 돌아감

12월 17일 (화)

1) 개괄

오늘 아침 7시 골안마을 상황. 주민과 연대 24명이 한전직원과 경찰을 막았고, 7시경에 대치 시작하여 여러 차례 충돌이 있었음. 8시경 4 차례에 걸쳐 한전 진입을 막았고, 9시 30분경 교대하고 내려오는 한전 직원들을 막겠다며 할매들이 기다렸으나, 이들이 할매들을 피해 산을 타고 내려가 더 이상의 충돌은 없었음. 늘 그렇듯이 여경들이 달려들어 할매들을 끌어냈고, 한전직원인지 사복경찰인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연대은 활동가들을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렸음. 매일 매일 밀양의 한 산골마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 추운 새벽이 지나고 할매들과 활동가들은 마을 회관에 모여 밥을 먹고 쿡을 고르며 또 살아가고 있음

2) 일지

0700 골안마을 상황. 주민과 연대 24명이 한전과 경찰을 막고 있음. 7시경 대치 시작하여 현재 2차 충돌 중.

한전 직원이 폭력 행사

0800 대치상황은 끝났고, 한전과 경찰 산으로 올라감. 한전직원인지 사복경찰인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연대온 활동가 둘을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림

3) 보도자료

〈밀양 송전탑 주민들의 송주법 국회 법사위 상정 및 대화제안에 대한 입장〉

1. 밀양 송전탑 문제의 ‘뜨거운 감자’였던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지원법’(송주법)이 내일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2. 송주법은 일명 ‘밀양법’이라 불리면서 보수언론과 한전에 의해 송전선로 갈등의 해결사 노릇을 하게 될 것으로 선전되었지만, 밀양 주민들은 일찍부터 반대 의사를 천명해 왔습니다.

3. 송주법은 송전선로 갈등을 ‘얼마 되지 않는 쥐꼬리 보상’으로 틀어막고 송전선로를 더 쉽고 원활하게 깔려고 만들어진 법입니다. 우선, 송주법은 보상의 기초가 되는 주민들의 재산 피해와 건강 피해에 대한 실태 조사 없이 보상의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4. 765kV 송전선로의... 경우 ‘직접보상은 송전선로 좌우 3m에서 33m로 확대, 간접보상 1km이내 마을지 원금, 주택 매수 송전선로 좌우 180m 이내 주택’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상의 일부 확대가 최소 1km 이내, 최대 2km까지 미치게 되는 765kV 송전선 주민 피해를 얼마나 경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민들은 입을 모아 ‘의미가 없다, 간접보상금 두고 주민들끼리 싸우게 만들 뿐이다’면서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5. 또한 송주법은 송전선로 설치로 인한 소음, 전자파, 100미터가 넘는 위압적 철탑이 심리에 미치는 경관 피해와 관련되는 건강권 문제가 완전히 누락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해 지원을 둘러싼 주민참여기구 문제 또한 누락되어 간접보상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주민간의 갈등이 구조화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6. 밀양 대책위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박영선 의원을 방문하여 4인의 법사위원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영선 위원장은 먼저, 한국전력 측과 밀양 대책위가 흥금을 터 놓고 대화하기를 권고하

였으며, 저희는 대화에 응할 분명한 의사가 있음을 밝힙니다.

7. 밀양 주민들은 오는 18일, 송주법이 입법 유예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송주법으로 인하여 송전선로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주민들의 요구를 법으로 틀어막는 무기로 변질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한국전력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제안한 대화에 성심껏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3년 12월 17일

12월 18일 (수)

0630 고답주민 25명 골안마을로 이동하여 연대

0700 골안마을 주민 10명, 연대 3명

0730 상황종료. 병력 대거 투입되어, 경찰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한전에게 계속 길을 터줌

0800 주민들 흩어져 있으면서 경찰에게 항의

0830 교대하고 내려오는 한전 직원들 막다가 주민들 넘어지고 한전 뛰어넘고 하면서 주민들 작은 부상. 경찰들이 이쪽저쪽 움직이면서 한전을 경호하기를 반복함

0930 상황종료

12월 20일 (금)

〈故 유한숙 어르신 전국 집중추모의 날 기자회견문〉

정부와 한전은 고인에게 사죄하고 죽음의 밀양송전탑 공사 중단하라!

오늘 우리는 비통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이곳에 섰습니다. 지난 12월 6일 밀양송전탑 문제로 밀양시 상동면 고정마을故 유한숙 어르신을 떠나보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과연 명분 없는 송전탑 공사를 강행한 것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대규모의 경찰병력을 동원해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제압한 것 말고 무엇을 했습니까.

故 유한숙 어르신은 평생 땅을 일구고 돼지를 키우며 살아오신 평범한 밀양주민이었습니다. “철탑이 들어서면 아무것도 못한다. 살아서 그것을 볼 바에야 죽는 게 낫겠다”는 고인의 말씀은 밀양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이 죽음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정책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희생은 지난 해 1월 故 이치우 어르신에 이어 또 다시 故 유한숙 어르신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전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고사하고 고인의 죽음을 모독했고,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마련한 분향소는 경찰의 폭력으로 짓밟히는 패륜적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밀양과 서울 그리고 전국 곳곳에 분향소를 차리고 애도의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시민들이 분향소를 찾아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故 유한숙 어르신의 유족들을 포함한 밀양주민들이 상경하였습니다. 우리는 집중적인 추모행사로 상처 난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모아 함께 싸울 것을 다짐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전과 정부가 고인의 죽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전과 정부가 고인의 죽음에 침묵하고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고인께서 살아서는 못 보겠단 하신 그 송전탑을 기어이 세우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전탑 공사가 지금처럼 강행되는 한 유족들과 밀양 주민들의 아픔은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한전에 촉구합니다. 고인과 유가족에게 그 죽음의 책임을 통감하고, 또 그 죽음을 모독하려는 죄를 통감하고, 머리 숙여 사죄하십시오. 그것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밀양송전탑 공사 강행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또한 지역의 희생을 강요한 잘못된 에너지정책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故 유한숙 어르신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유족들의 상심에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 번 기원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하겠습니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밀양송전탑 공사를 중단시키고 잘못된 국가 에너지정책을 바꾸기 위한 이 싸움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밀양을 방문 할 것입니다. 추운 겨울과 연말 따뜻한 마음들이 계속 밀양을 향할 것입니다. 2차 밀양희망버스에 시동을 걸고 전국적인 연대를 준비 하겠습니다. 밀양뿐만 아니라,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 용산참사 유족들, 삼성전자서비스 유족들과 연대 할 것입니다. 일터와 삶의 터에서 쫓겨나고 내몰려,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이 땅의 모든 민중들과 함께 싸우고 함께 이길 것입니다.

정부와 한전은 밀양송전탑 공사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한전은 유족들께 사죄하라!

경찰과 공권력을 밀양에서 즉각 철수하라!

정부와 한전은 탈핵중심 에너지정책 수립하라!

2013년 12월 20일

밀양765KV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

12월 22일 (일)

0720 경찰과 대치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연대자 10여명을 길가로 고착시킨 후 한전을 올려보내줌

0750 현재까지 경찰이 연대자 10여명을 고착한 채 풀어주지 않고 있다고 함. 한전이 지나간 이후에도 30분 간 연대자들을 고착시킨 후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나이 어린학생에게 욕설을 함

08:05 골안마을. 고착당했던 연대자들 풀려남. 경찰과 한전인부 모두 올라감

12월 24일 (화)

<정부와 한전의 묵묵부답, 불통, 밀양 주민들은 가슴이 타 들어간다>

1. 12월 23일, 국회의원 78명이 밀양 송전탑 공사중단 및 대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에는 문재인 전 대선후보를 비롯하여 조경태 우원식 양승조 신경민 최고위원, 박지원 전 원내대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거의 참여하였고, 심상정 김제남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의원 전원과 송호창 무소속 의원 등 정파를 초월하여 78명의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주었다. 단일 사안으로 이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할 만하다.

2. 그리고, 국회 법사위원장 박영선 의원이 송주법 법사위 통과와 중요한 전제로 밀양 주민들과 한국전력의 직접 대화를 권고하였으나, 1차 실무 회의 이후 주민 대표들...과의 직접 대화에 대해서는 아직껏 한국전력 측이 뚜렷한 답을 주지 않아 논의가 공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3. 정부와 한국전력은 묵묵부답과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 주민들은 가슴이 타 들어간다. 밀양 송전탑 공사의 명분은 제어케이블 재시험탈락으로 신고리3호기 적기 준공이 불가능해짐으로써 벌써 바닥에 떨어졌다. 그 사이, 두 번째의 사망사고가 일어났고, 세 번째의 자살 기도가 있었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지금과 같은 태

도로 일체 입을 닫고, 밀어붙이기로 일관한다면, 그리고 ‘개별보상금’을 무기로 반대 주민들을 금전으로 갈 등케하고 고립시키는 비열한 작태가 이어진다면 반드시 또다른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4. 정부와 한전은 정말 무서운게 없는가? 주민들은 ‘공산주의도 이것보다 더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78명 국회의원의 진심어린 권고에도, 국회 상임위원장의 대화권고에도, 74세 노인이 음독 자결을 해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한다. 다른 한편으로 ‘돈’을 매개로 주민들을 야금 야금 분열시킨다. 이 참혹하고도 비열한 작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5.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78명 국회의원들의 권고를 좇아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 폭정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들의 책임이다! 그러나, 사람이 죽고 나면 책임을 지려 해도 질 수조차 없다! 시간이 많지 않다!

2013년 12월 24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12월 26일 (목)

1042 132번 진입로. 장을 보고 마을로 넘어가려는 주민들 통행을 금지하자 주민들이 경찰에게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과 주민의 마찰. 이후 낭떠러지 쪽으로 대치 중에 넘어지며 실신하셨던 주민 한00(66세)을 이송하기위해 구급차를 불렀음. 경찰은 구급차를 불렀다고 했으나, 구급차는 40분 넘어 도착했고 차가운 바닥에서 40분간을 쓰러져있었던 한00은 응급실을 도착하고도 오한으로 괴로워 하셨음. 그리곤 하염없이 살고 싶지 않다. 나를 죽여 달라며 우셨음. 현재는 밀양병원에 입원 중

12월 28일 (토)

0845~0940 1시간여 동안 동화전 마을에 총 10여번 헬기가 뜬. 소음에 고통스러워 한전으로(055-350-2281) 전화해 민원을 제기하자 여직원(이름미상) “한솔병원에 입원해라” 라는 답변을 받음
0850 한전이 여수동길을 지나가면서 주민과 충돌, 경찰의 고착으로 10여분 만에 상황종료.
(10월 말경에 한전과 경찰 그리고 주민간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수마을을 통해 공사하러 가지 않겠다고)

12월 31일 (화)

1) 개괄

4개면 주민들이 헬기소음과 헬기에서 각목이 떨어진 상황에 대해 항의방문을 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차량 4대가 대기하고 정문을 한전직원이 포위함. 뿐만 아니라 한전 및 경찰이 채증하는 등의 주민들을 분노하게 했으며, 대표단을 구성해 민원실에서 이야기를 전달하길 요구했으나 거부하는 등, 화장실 출입마저 불가함. 이후 한전직원 최규택씨는 헬기에서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므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부인함(영상 有). 시행업자인 한백 오00는 ‘헬기 아래 물건을 실어나를 때 앵글 2개가 이어져 있는 사이에 이와 같은 각목을 사용한다’며 인정을 함(영상 有). 이후 5명(이00 이00 팽00 김00 송00)의 대표가 한전 민원실에서 면담을 함. 각목과 관련하여 조사 후 빠른 시일 내에 이00에게 통보하겠다고 함

2) 일지

08:30~09:00 132번 입구 농성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임도 위쪽에 떨어짐. 헬기 아래 실어가던 물건들에서 각목(약2m)이 떨어짐. 당시에 132번입구 농성장에 있었던 이00, 이00, 한00가 봄. 이번 상황은 처음이 아니며, 며칠 전 각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본 사례가 있었음. 하루에도 많게는 80차레 평발마을을 지나고, 농성막을 지나는 상황에서 위협을 느낀 주민들이 계속 민원전화를 했으나, 답변을 회피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 극도로 높아진 상태임

1030 헬기소음과 헬기에서 떨어진 각목(2m)으로 인해 위협을 느낀 주민들(20여명)이 한전으로 항의 방문하러 감. 그러나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음

1221 한전밀양지사 앞 주민민원 관련하여, 경찰차량 4대가 대기 중. 한전담당자가 나왔으나, 길가에 나가 이야기하자는 등 주민들을 오히려 분노를 쌓았음. 주민들이 대표를 선정 할테니 대표만 민원실에 들어가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한전 측은 거절했으며, 12시20분경인 현재까지 대기 중. 어르신들이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도 막아 항의 중

1월 3일 (금)

〈밀양 송전탑 대책위와 한국전력의 실무회담 정리〉

밀양 대책위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의 대화 권고 및 국회의원 78인의 공사중단 및 대화 촉구 결의안에 근거하여 금일 11시부터 2시간에 걸쳐 진행된 한국전력과 밀양 대책위 간 2차 실무 대화 결과를 공유합니다.

1차 실무회담에서 전달하고 입장을 교환한 한전 측에서는 구분우 전무(전력계통본부장), 백재현 밀양특별 대책본부장, 문창배 송변전팀장이 참여했고, 대책위 측에서는 김준한 신부(공동대표)와 이계삼 사무국장이 참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화는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으며, 한국전력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힘

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국회의원 78인의 요청에도 ‘이 대화도 자의에 의한 것이지, 타인의 요청으로 대화에 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한국전력 전무의 발언을 지켜보면서 심히 안타깝고 괴로웠음을 밝힙니다.

〈주민 측 제안 의제〉

1. 유한숙 어르신 사망 관련 사죄 및 공사 중단

한전 답변 : 11월13일, 대구대 교수 및 한전 차장 1인이 고인을 방문하여 직접 만난 것은 사실. 보상 안내하고, 보상 관련 대화를 주로 나누었으며, 고인은 공사 반대 활동의 어려움도 토로하였다 함.

한전은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공신력 있는 기관(경찰, 밀양시)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음. 장례를 치른 후에 유족과 대화할 수 있음. 주민 대표가 참여한 대화는 원치 않음. 현재로서 고인의 사망 관련하여 공사 중단은 어려움.

2. 개별보상 관련 독소조항 철폐 및 해제

대책위 요청사항 : 개별보상 약정서 상의 독소조항(공사방해금지 및 향후 발생할 손해에 대한 한전의 책임 면제) 철폐와 12월31일까지 개별보상금 미수령시 공동자금 귀속 조치 해제

한전 측 답변 : 현행법 준용하여 적법하게 밀양주민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집행된 사항이며, 밀양특별지원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한 것일 뿐. 독소조항 해제 및 철폐 요구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따르겠음.

3. 부분지중화 4. 경과지변경 5. 집단 이주

대책위 요청사항 : 한국전력은 노선 선정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과지 변경 가능한 구간은 변경하고, 불가능한 구간에 대해서는 부분 지중화 or 집단 이주 (1km 이내) 해 달라.

한전 답변 : 오랫동안 충분히 이야기했으며,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임. 모두 불가함.

〈한전 측 제안 의제〉

1. 겨울철 주민 안전 대책 수립

대책위 답변 : 대책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공사 중단이 최선의 안전 대책임

2. 주민 갈등 치유 대책 수립

대책위 답변 : 개별보상 중단 및 독소조항 철폐가 최선의 주민갈등 치유책임.

3. 주민들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전달 기회를 갖자.

대책위 답변 : 전자파는 양측 결론이 양분될 수밖에 없으며, 주민들도 전자파 문제는 충분히 알고 있음. 경과 지 선정 의혹 관련한 정보 전달은 필요함.

〈실무회담 종료하면서 향후 대화 일정 관련하여 대책위가 요청한 사항〉

1. 1월~2월 중순까지 흑한기 45일간 공사를 중단하라.

2. 공사 중단한 45일간 8개 의제(주민측 5개, 한전측 3개)에 대해 주민과 대화기구 구성하여 직접 대화하고, 밀양 송전선로 갈등의 사회적 공론화 차원에서 양측 전문가들이 4개 의제(타당성, 재산권, 건강권, 대안)에 관한 공개적 대화를 병행하자.

밀양 대책위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의 대화 권고 및 국회의원 78인의 공사중단 및 대화 촉구 결의안에 근거하여 금일 11시부터 2시간에 걸쳐 진행된 한국전력과 밀양 대책위 간 2차 실무 대화 결과를 공유합니다.

1차 실무회담에서 전달하고 입장을 교환한 한전 측에서는 구분우 전무(전력계통본부장), 백재현 밀양특별 대책본부장, 문창배 송변전팀장이 참여했고, 대책위 측에서는 김준한 신부(공동대표)와 이계삼 사무국장이 참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화는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으며, 한국전력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국회의원 78인의 요청에도 ‘이 대화도 자의에 의한 것이지, 타인의 요청으로 대화에 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한국전력 전무의 발언을 지켜보면서 심히 안타깝고 괴로움을 밝힙니다.

〈한전 측 답변〉

1. 공사 중단은 불가. 공사 중단이 대화의 전제가 되면 대화가 안된다. 겨울철에도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공기를 맞추기 위함이다.

2. 의제가 많으면 대화가 안 된다. 우리는 부분지중화/경과지변경/전자파를 의제로 대화하기를 원한다.

〈결론〉

1. 현 상태로 직접 대화는 불가하다.

2. 양측이 유일하게 접점을 찾은 ‘경과지 관련 변경 설명회’를 주민대표가 참석하여 1월 11일(토) 오전 10시 30분, 남밀양성당에서 갖기로 하고, 실무회담 종료.

〈대책위 입장〉

1. 한전은 대화의 의지가 있는가? 국회의원 78인의 공사중단 및 대화 권고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음. 구본우 전무는 ‘지금까지의 대화도 타인의 권유로 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법사위원장의 대화 권고도 송주법 통과 이후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이 분명함.
2. 신고리3호기 제어케이블 교체가 난항을 겪고 있다. 2015년 7월까지 완공은 불가능할 것이다. 겨울철이라 공사 진행도 어렵다. 마을 근처로 공사가 확대될 시 충돌이 명약관화하며 이미 2인의 사망사고와 1인의 자살기도가 있었다. 사고방지 차원에서라도 주민과 합의 후 공사 강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이 상태로 계속 대화의 공전과 공권력과 헬기를 동원한 전방위적 공사 강행, 주민 분열이 이어진다면 파국은 필연적이다. 정치권, 시민사회, 종교계의 중재를 긴급하게 요청한다.

2014년 1월 3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1월 6일 (월)

1) 개괄

오늘 하루 동안 2명의 주민이 연행되고, 9명의 주민이 병원에 실려 갔음. 아침 7시경, 300여명의 경찰이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따라 산에 올랐다가 현장으로 가지 못하고 내려왔던 주민들은 경찰의 숙소를 쓰이는 컨테이너 설치를 막기 위해 낮부터 경찰들과 크고 작은 충돌과 함께 대치했으며, 지금까지도 주민들은 도곡마을 입구 현장에서 떠나지 못하고 모닥불을 피우고 길에서 밤을 보내시고 있음

114번 도곡저수지 아래에서 충돌로 인한 환자상황

신00 탈진으로 치료

성00 현장에서 의식을 잃어 병원 이송. 의식 돌아왔고 안정 중. 복통이 있어 초음파 검사

윤00은 경찰이 어르신을 눕혀서 다리로 목, 어깨, 가슴을 눌러서 정수리를 다치시고 손가락을 접질려 사진 촬영 중

최00 할머니는 윤00 어르신의 어머니로 아들이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경찰을 잡고 우리 아들 데려가서 엑스레이 사진 찍어주고 와라라고 말하면서 소매를 잡았는데 경찰이 할머니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 날카로운 무엇에 베인 것처럼 손등을 다쳐 병원에 와 응급치료 대기 중

김00은 팔과 목의 통증을 호소 중. 팔을 경찰이 하도 잡아당겨서 그런 듯. 주사 맞고 약 처방

박00은 혈압약을 드시는 분인데 링겔은 본인이 현장에 가야한다며 한사코 거부하고 신경안정제 투여 중

2) 일지

0705 113, 114번 현장에 경찰 수백명 투입됨. 어제 경찰 2명이 114번 답사한 것으로 생각됨. 고정마을 주민 10여명 현장으로 따라 올라감. 115번에는 고답 주민 20여명 계심

0730 108번. 골안마을. 주민과 연대자 등 10여명이 경찰 200여명과 대치했으나 한전 인부와 직원들은 다른 길을 통해 현장으로 올라감

0830 114번. 현장으로 올라간 주민들은 경찰에 막혀 공사현장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 한전인부들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기톱 벌목소리만 들림

0836 114번. 경찰병력이 증강되고 있음

1200 고답마을 앞 공터. 주민 35명 정도, 경찰은 버스 10대. 도곡저수지 아래쪽에서 경찰이 컨테이너 이동 중, 주민 2분 충돌 과정에서 쓰러짐. 혈압 높으나, 병원 이송 거부하며 컨테이너 잡고 쓰러진 채 누워 있음. 현재는 충돌 없이 대치 중.

1220 고답마을 앞 공터. 쓰러졌던 주민 중 1분 의식 없어 병원 후송

1326 고답마을 앞 공터. 식사 중인 주민을 끌어내고 경찰 진입. 경찰버스 아래 주민 한명 들어감.

1340 고답마을 앞 공터. 경찰버스 아래 들어갔던 주민 경찰에 끌려 나옴. 병원에 도착한 주민은 의식 돌아왔고 안정 중. 복통이 있어 초음파 검사

1636 고답마을 앞 공터. 경찰이 수백명 증가되고 대치

1700 고답마을 앞 공터. 주민들 고착됨. 경찰이 주민 김00(72)의 팔에도 최 00 할머니 손의 상처와 같은 상처 남

1712 고답마을 입구에 주민들이 설치한 비닐하우스 골격 뜯어내고 고착. 고착과정에서 주민한분 혈압이 높아져서 쓰러짐

1718 고답마을 앞 공터. 주민 윤00(56), 정00(73) 김해서부서 연행

1755 고답마을 앞 공터. 경찰차 올라가는 도중 고착 충돌. 무자비하게 주민을 밀치고 발로 밟고 채증함

1817 고답마을 앞 공터. 김00. 밀양병원 511호실 입원, 허리부상. 김00(76) 오른쪽 어깨부상으로 응급실에서 진료

18:40 고답마을 앞 공터. 연행되었던 주민 2분, 김해서부서 도착. 조사. 변호사 임회함

23:00 주민 정00 조사 후 석방. 윤00 몸이 몹시 불편하여 병원 입원. 내일(7일) 조사하기로 함

3) 보도자료

<1월 6일, 고답마을 대충돌 관련 대책위 긴급 성명 및 동영상>

1. 정말로 길고 힘든 하루였습니다. 하루 사이에 7명이 병원으로 실려갔고, 2명이 현장에서 연행되었고, 열 명이 넘는 주민들이 쓰러졌습니다. 감금 고착 폭행 실신 연행이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2. 상동면 고답마을은 113~115번 송전탑이 마을 바로 뒷산에서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지나갑니다. 밀양 송전탑 전체 구간에서도 피해가 가장 큰 마을의 하나로 꼽히는 곳입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10월 공사를 재개했지만, 마을을 가로지르는 구간, 피해가 가장 큰 구간, 그래서 격렬한 충돌이 예상되는 구간은 제대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구간으로 공사가 서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3. 오늘 충돌은 공사 현장이 아니라 경찰 숙영지를 조성하기 위해 경찰이 컨테이너를 들이는 과정에서 출발했습니다. 고답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사유지 공터에 컨테이너가 들어왔을 때, 주민들은 컨테이너를 옮기는 트럭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경찰은 이들을 꼬집어내면서 2명이 실신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점심 식사를 하는 와중이었습니다. 도시락과 밥그릇은 짓밟혔습니다.

4. 경찰은 이 과정에서 무지막지한 완력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끌어냈고, 그 중에서 할머니 한 분을 패대기치는 장면이 미디어팀 카메라에 잡히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이 할머니 패대기치는 장면〉

<http://tvpot.daum.net/mypot/View.do?ownerid=8B9at5-i9sA0&clipid=55654116>

5. 50대 남성 주민 1명은 흥분을 참지 못하고, 몇 번이나 분신하겠다고며 휘발유를 갖고 들어오다 주민과 대책위 관계자, 연대시민들에게 빼앗기고 제지당했습니다.

6. 경찰은 버스 10여대에 500명이 넘는 병력으로 주민들을 에워쌌습니다. 오후 3시50분경, 85세 최호금 할머니는 아들 윤종헌 님이 경찰에게 무릎과 다리 등으로 목, 어깨, 가슴 등을 결박당하고, 머리 정수리에 피가 나는 폭행에 항의하기 위해 이동하는 밀양경찰서 및 김해 중부서 사복 경찰관에게 ‘우리 아들 데려가서 엑스레이 찍어라’고 외쳤습니다. 할머니가 팔을 잡았을 때 한 명이 할머니를 뿌리쳤고, 그 후에 날카로운 것에 베인 것 같은 깊은 상처가 할머니 손등에 났습니다.

〈최호금 할머니 무언가에 베인 상황〉

<http://tvpot.daum.net/mypot/View.do?ownerid=8B9at5-i9sA0&clipid=55654173>

7. 최할머니는 지난 해 7월, 109번 농성장에 가셨다가 탈진해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었고, 지난 10월에도 도곡저수지에서 여경과 대치하시다가 병원에 후송되신 분입니다. 이 할머니가 오늘은 또 이렇게 경찰에 의해 뭔가 베인 것 같은 잔혹한 상해를 당했습니다.

8. 오후 4시경, 주민들은 공터 입구에다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뽑아온 폴대로 농성장 설치를 시작하였고, 경찰은 200여명의 병력으로 이들을 에워싸서 주민들을 고작시키고 사지를 결박하여 들어냈습니다. 주민들은 격렬히 저항했고, 결국 좁은 논바닥에 마치 그물로 물고기를 물 듯 엄청난 먼지 구덩이에 갇히고 말았고, 그 속에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더 지체되었다면 질식해서 더 많은 사람이 쓰러질 것 같은 충돌이었습니다. 아비규환,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72세 김정자 할머니의 손에도 경찰에 의해 최호금 할머니와 똑같은 상처가 났습니다. 또다른 70대 할머니도 혈압이 높아서 쓰러지고 허리를 다쳐 쓰러졌습니다. 폭행은 주민들이 말할 수 없이 잔혹하게 당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했다고 주민 2명을 연행해서 김해서부경찰서로 이송하였습니다.

〈관련 영상〉

<http://tvpot.daum.net/mypot/View.do?ownerid=8B9at5-i9sA0&clipid=55654189>

9. 무슨 법적 근거로 주민들을 이렇게 잔혹하게 폭행하느냐고 항의하는 대책위관계자에게 밀양경찰서 경비과장은 ‘범죄행위 예방 차원’이었다고 강변했습니다.

10. 밀양송전탑 주민들의 길고도 고통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주민 20여명은 지금도 불을 피우고 노숙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11. 밀양 송전탑 싸움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바로 곁으로 서서히 공사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합니다.

12. 우리는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오늘과 같은 충돌이 더 이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최호금 할머니 손등 상해를 포함하여 주민들에게 잔혹한 폭력을 행사한 경찰을 추적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오늘 작전을 지휘한 관계자를 파면해야 합니다. 정치인, 종교인, 시민사회단체의 지도자들이 하루 빨리 정부와 한국전력에게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4년 1월 7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1월 7일 (화)

1) 개괄

금일 아침 6시부터 경찰 병력이 증강되기 시작함. 간밤에 주민들은 고답로 도로 중앙과 충돌이 발생한 사유지 공터 앞 논바닥 두 곳에 모닥불을 피우고 20여명이 노숙을 함

아침 7시가 되어 아침식사가 배달되자 주민들은 도로 중앙 모닥불 곁에서 10여명의 주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음

그때 경찰 버스 6~7대가 주민들 곁으로 진입했고, 순식간에 주민들을 에워싼 경찰은 소화기로 불을 끄고 식사판을 엮어버림. 일부 경찰은 바닥에 떨어진 밥그릇을 발로 차 버렸고, 격분한 주민들은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네놈들이 인간이냐?'면서 울부짖으며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고, 주민들이 구석으로 고착당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성난 주민들은 드시던 밥그릇을 경찰에게 뿌리기도 하였음

오전 9시경부터 병력이 증강배치되어 주민들과 연대 활동가들을 갈라놓기 시작함. 연대활동가 4인은 어제 경찰 숙영지용으로 내려놓았던 컨테이너를 싣고 온 크레인 트럭 아래에 들어가 엔진 등에 굶은 밧줄로 몸을 묶고 밤새 노숙한 상태임

사복 경찰들은 전지 가위를 나누어주며 밧줄을 끊을 태세였고, 대책위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이 경찰에게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진압을 자제하라'며 목에 건 밧줄을 풀도록 호소하기도 함

9시 30분경 크레인 운전자가 2~3차례 시동을 걸자 배기가스가 트럭 아래에 몸을 묶고 있던 연대 활동가들에게 질식할 것 같은 매연을 내뿜다가 대책위 관계자의 항의로 중단하던 도중 경찰이 전지 가위 등으로 밧줄을 끊고 진압을 시도함

항의하던 대책위 관계자와 주민들은 고착당한 상태에서 연대활동가 정00(남,53), 심00(여,40대), 김00(여,20대) 그리고 이들을 촬영하던 박00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이 연행되었고, 실신하여 쓰러진 김00(여,40대)는 밀양병원으로 응급후송 됨

지금 밀양 고답마을은 무법천지임. 경찰은 초법적으로 군림하고 있으며, 이들 사이에 10여명이 다치고, 8명이 응급 후송되고, 6명이 연행되었으며, 주민들은 격분하여 쉽 없이 경찰과 몸싸움과 격렬한 입씨름으로 경찰에게 분노를 토해내고 있음

언론인들의 정밀한 현장 취재와 정치권의 개입을 요청함

2) 일지

0608 고답마을 입구 경찰 올라오고 있음

0712 고답마을 입구에서 식사 중이던 주민 10여명을 경찰이 끌어내고 고착하고 있음

0750 현재 경찰은 길에서 노숙하고 아침식사 하는 주민들의 식사를 엮고, 모닥불을 소화기로 끄고 주민들을 고착

공방에서도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2014년 1월 10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1월 15일 (수)

0858 도곡 112번으로 대형크레인 진입. 경찰차량 수십대 동원

1300 도곡. 경찰병력 증강 중. 김습조 님 경찰 대치하다 넘어져 허리 통증. 응급차 후송

1439 고곡현장에서 응급실로 가신 김석조님. 흉추 골절 의심되어 밀양병원에 입원 수속 중

1월 16일 (목)

0706 112번. 도곡삼거리. 주민 여섯분이 계시는 곳에 경찰병력 100여명이 (경찰차량 7대대기) 내림

0720 112번. 도곡삼거리. 주민 10여명. 한전직원이 출근하는 차량을 막아서자 경찰이 주민들 고착시킨 후
한전차량보호, 현재 한전출근 완료

1월 17일 (금)

0600 주민40~50명 고정삼거리에서 한전과 경찰맞음

0800 경찰버스15대 통과시키고 한전차량 막고 있음

0941 고정삼거리. 경찰의 고착으로 한전차량 모두 올라가고 정리가 되었음. 어르신들은 마을회관에서 아침
식사하고 계심

헬리콥터 비행으로 인한 밀양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 실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1. 조사의 배경 및 취지

항공기 소음 등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가 있다.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항공기 소음은 불안장애, 우울증, 불면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소음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언어력, 수리력, 지각력, 추리력 등의 과제수행능력이 떨어지고, 소음 노출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불안, 분노, 우울, 인지장애가 높아진다. 최근 밀양 송전탑 공사 때문에 인근 지역에 헬리콥터 비행이 잦아데 이로 인한 소음 등으로 불편감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았다. 이에 헬리콥터 비행이 지역주민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을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2. 조사 방법

2014년 1월 3일(금)~5일(일)까지 4개면(단장면, 산외면, 상동면, 부북면)에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우울증, 불안증의 정신증상을 측정하는 정신심리검사 도구를 활용했다. 불안을 측정하는 데에는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인 Beck Anxiety Inventory(BAI)를 이용하였고, 우울을 측정하는 데에는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인 Beck Depression Inventory(BDI)를 이용하였다. 시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독해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문항을 읽어주고 답하게 하였다. 총 321명이 설문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 중 1명은 마을 주민이 아니어서 제외하고 설문 응답이 부실한 3명을 제외하여 총 317명에 대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3. 조사 결과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317명의 주민들이 조사 분석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이 중 136명(42.9%)는 남성이고 181명(57.1%)는 여성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64.1세였다. 상동면 주민이 13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단장면, 부북면, 산외면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구분	응답자수	백분율(%)
성별		
남성	136	42.9
여성	181	57.1
마을		
단장면	75	23.7
산외면	42	13.3
상동면	134	42.3
부북면	66	20.8
※ 평균 연령 : 64.1 ± 15.2세 (최소 : 43세, 최대 : 87세)		

나. 학대 및 폭력 경험에 대한 조사

송전탑 건설 지지 과정에서 한전, 시공사, 용역 직원, 경찰 등에게 유무형의 학대나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의 71.9%가 한전, 시공사, 용역 직원, 경찰 등이 “위협적이고 무례한 행동을 취하여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자의 63.4%는 한전, 시공사, 용역 직원 등이 “모욕적인 말, 욕설 등을 하여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자의 56.8%가 각종 고소, 고발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17.4%가 “뺨을 맞거나 발로 차이거나 주먹으로 맞았다”고 응답했다. 이를 2013년 6월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흥기로 위협받거나 상해를 입은 경험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의 학대 및 폭력 경험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로 볼 때, 2013년 5월 공사 재개 당시와 비교하여 한전, 시공사, 용역 직원, 경찰 등에 의한 각종 학대와 폭력이 더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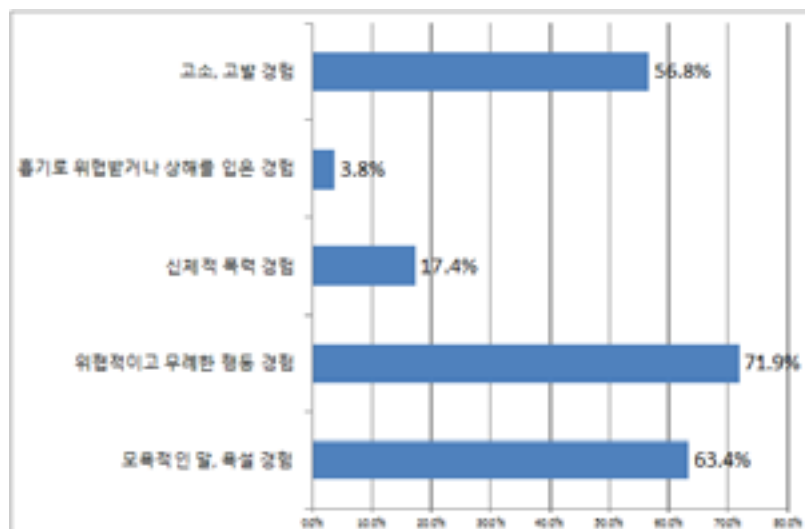


그림 학대 및 폭력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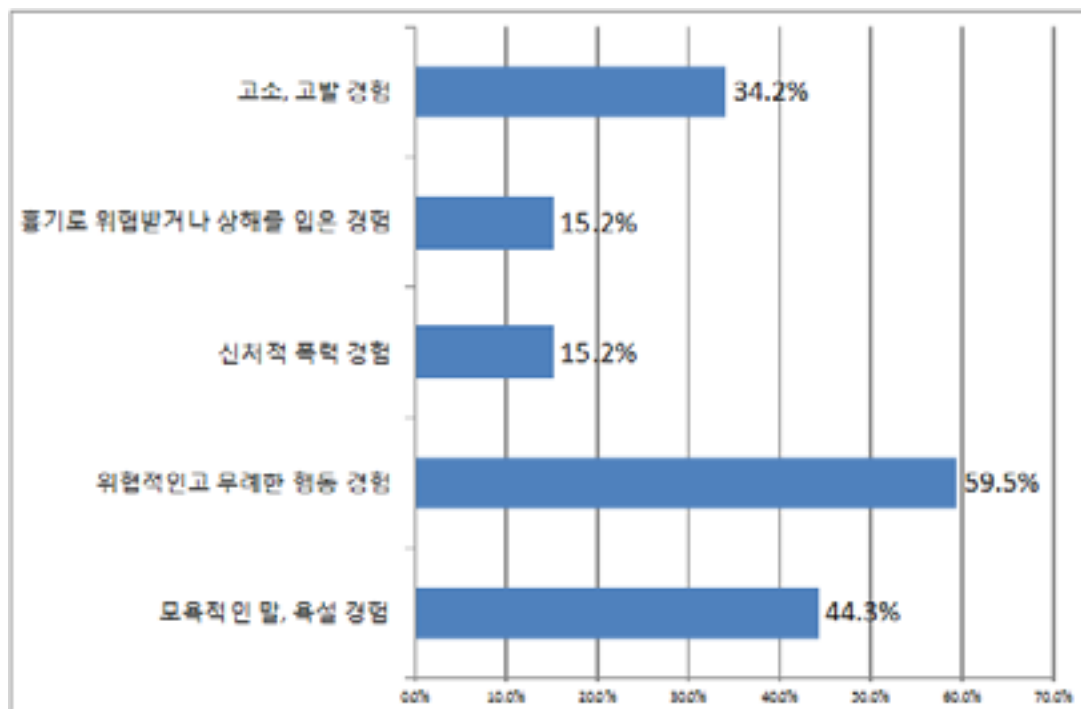


그림 학대 및 폭력 경험(2013. 6월 조사 결과)

다. 헬기 소음 등에 의한 피해 조사

마을 주변을 날아다니는 헬리콥터 비행으로 인해 소음, 공포, 불안 등 신체적, 정신심리적 불편을 겪었는지 물어보았을 때, 응답자의 77.0%가 심하게 경험했다고 응답하여, 현재 헬기 소음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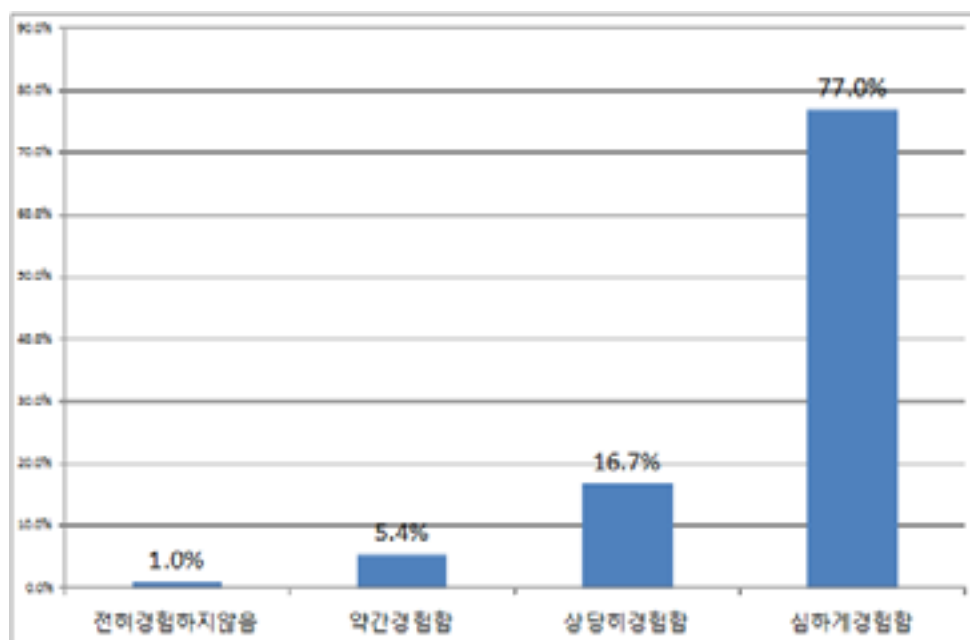


그림 밀양 송전탑 건설 지역주민들의 헬기 소음 경험 수준

라. 정신 증상 조사 결과

정신진단검사를 활용하여 우울, 불안 증상을 조사하였을 때, 일반인 평균보다 높은 우울 증상을 보인 이들은 87.3%, 일반인 평균보다 높은 불안 증상을 보인 이들은 81.9%였다. 이 역시 지난 2013년 6월 조사 결과에 비해 2배 정도 증상 유병률이 높아진 결과이다(2013년 6월 조사 결과 일반인 평균보다 높은 우울 증상을 보인 이들은 40.5%, 일반인 평균보다 높은 불안 증상을 보인 이들은 48.1%였다). 2013년 6월에 비해 우울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특히 더 늘었다. 이는 초기 불안감이 주종이던 감정 상태가 우울감으로 전화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결과이다. 불안감에 비해 우울감은 만성화되고 고착되어 정신심리적 질병으로 전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보다 심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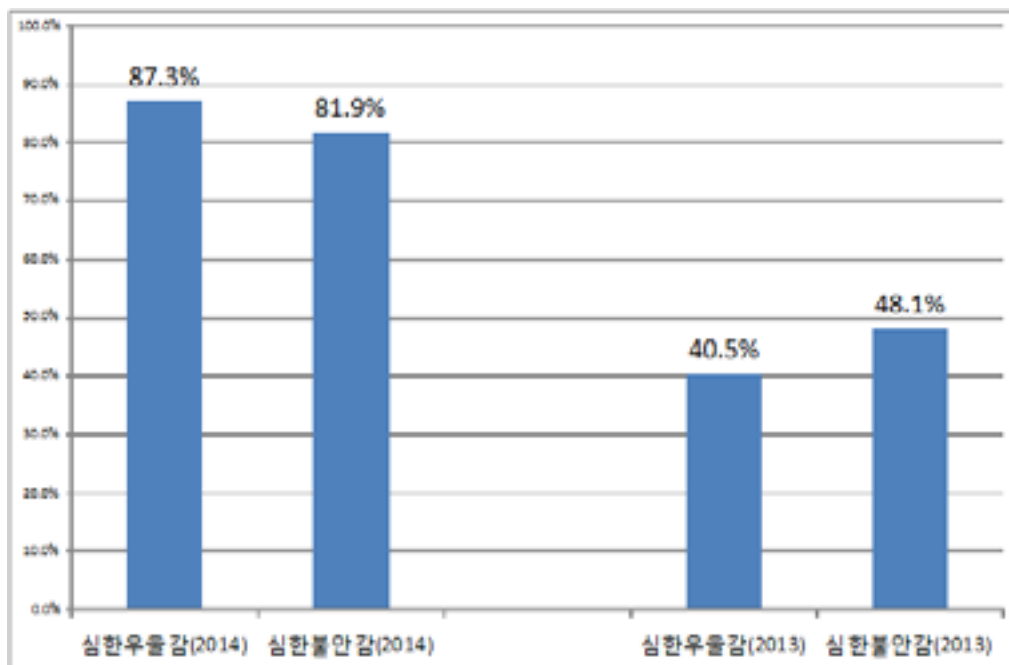


그림 우울감 및 불안감 증상 유병률 비교

우울 증상 중 특히 심한 증상들을 살펴보면, “나는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짜증난다”고 응답한 이들이 59.0%에 달했고, “나는 너무나도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응답한 이들은 57.7%에 달했으며, “나는 앞날이 아주 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느낀다”고 응답한 이들도 56.2%에 달했다.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고 응답한 이들도 10.7%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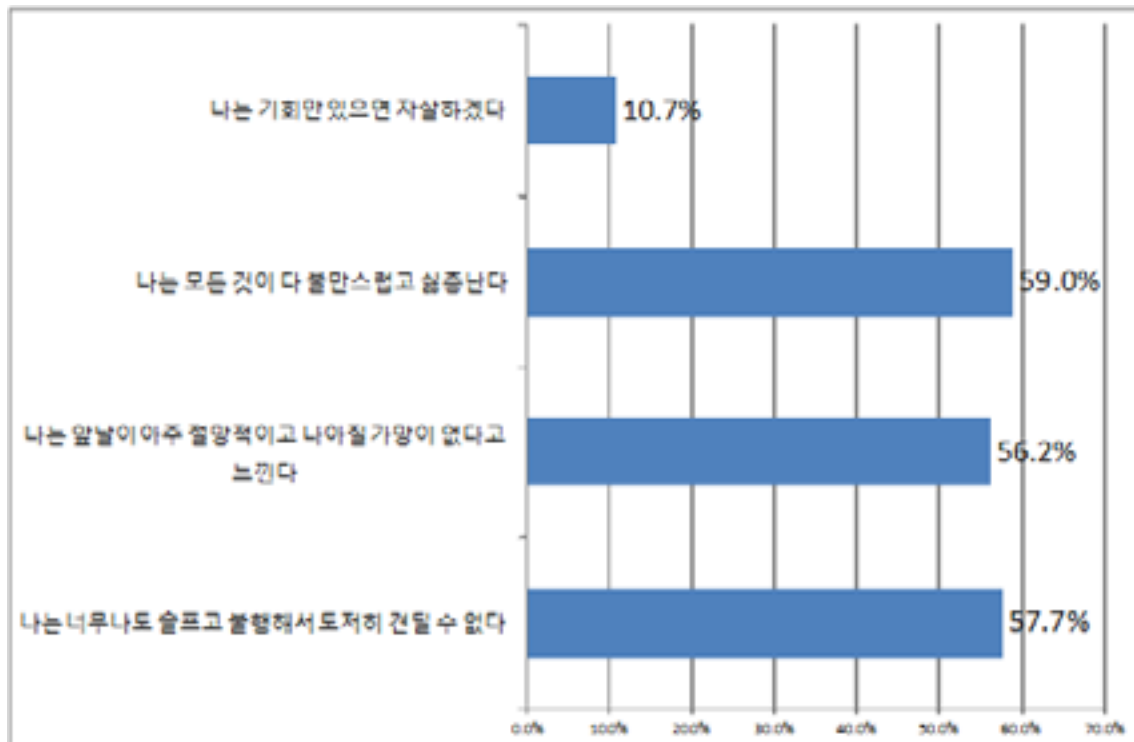


그림 특징적인 우울 증상 호소율

불안 증상 중에서는 ‘편안하게 쉴 수가 없다’는 감정을 심하게 느끼는 이들이 비율이 57.4%에 달했고,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는 감정을 심하게 느끼는 이들의 비율이 53.0%에 달했다.

표 특징적인 불안 증상 호소율 (단위 : %)

질 문 사 항	전혀 느끼지 않았다	조금 느꼈다	상당히 느꼈다	심하게 느꼈다
흥분된 느낌을 받는다.	6.9	19.6	33.8	39.8
편안하게 쉴 수가 없다.	5.4	14.5	22.7	57.4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9.8	12.3	24.9	53.0
신경이 과민 되어 왔다.	8.5	13.3	30.3	48.0
불안한 상태에 있다.	8.2	14.5	24.6	52.7

송전탑 건설에 대한 심리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심리적 고착 또는 회피 증상에 대한 설문을 하였을 때, 회피 증상보다는 고착 증상이 보다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지역주민들이 송전탑 건설 문제에 심리적으로 강하게 고착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증상이 지속될 경우 갈등이 종료되더라도 주민들 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릴 이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표 송전탑 건설 문제에 대한 심리적 상태 평가

설문 내용	전혀 없다	드물게 있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1) 내가 그럴 의도가 없을 때에도 송전탑 건설 문제가 생각난다	2.5	3.5	8.5	85.5
2) 송전탑 건설 문제에 대해 강한 공포감, 불안감 등 고조된 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1.9	3.5	10.1	84.5
3) 송전탑 건설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21.5	12.0	25.6	41.0
4) 내가 지금도 송전탑 건설 문제에 대해 복잡한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감정을 다루고 싶지 않다	20.5	11.4	30.9	37.2

마. 헬기 소음이 주민들의 우울감, 불안감에 미친 영향

헬기 소음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것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헬기 소음을 약간 경험한 군, 상당히 경험한 군, 심하게 경험한 군으로 나누어 우울감 증상 유병률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헬기 소음을 심하게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이들이 약간 경험했다고 응답한 이들에 비해 2.1배나 더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는 헬기 소음이 지역 주민의 우울감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유추하게 하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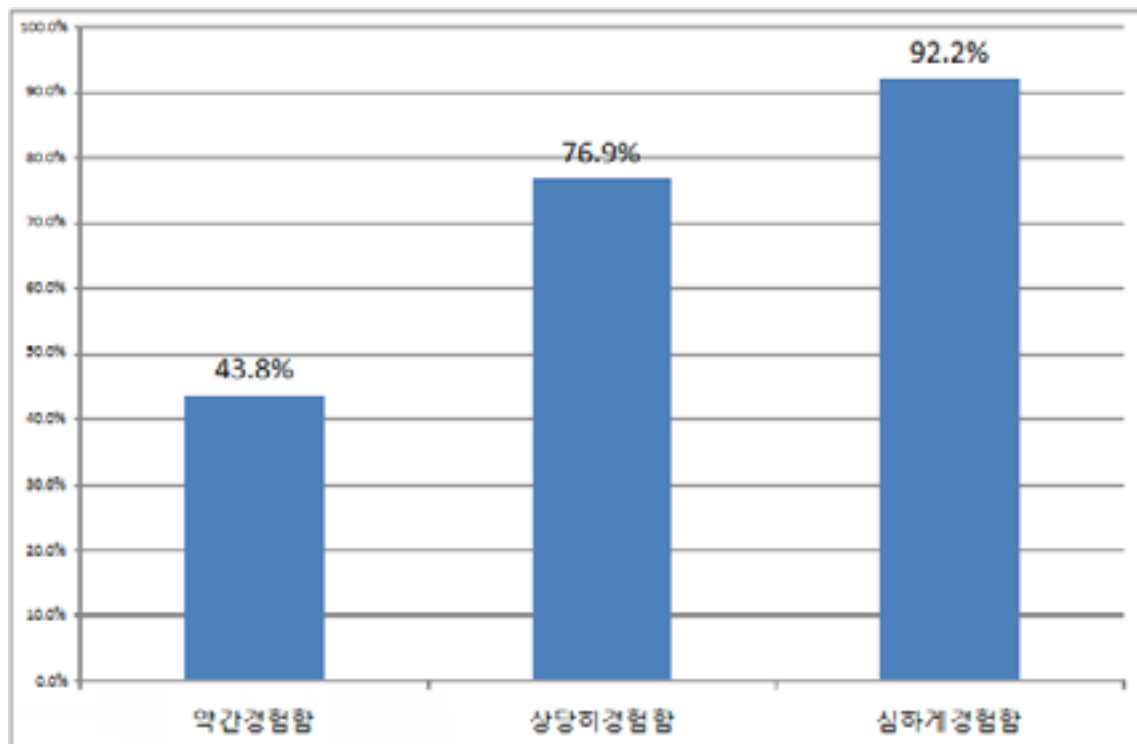


그림 헬기 소음 경험 수준에 따른 우울감 증상 유병률의 차이

마찬가지로 헬기 소음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헬기 소음을 약간 경험한 군, 상당히 경험한 군, 심하게 경험한 군으로 나누어 불안감 증상 유병률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헬기 소음을 심하게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이들이 약간 경험했다고 응답한 이들에 비해 3.7배나 더 불안 증상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는 헬기 소음이 지역 주민의 불안감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유추하게 하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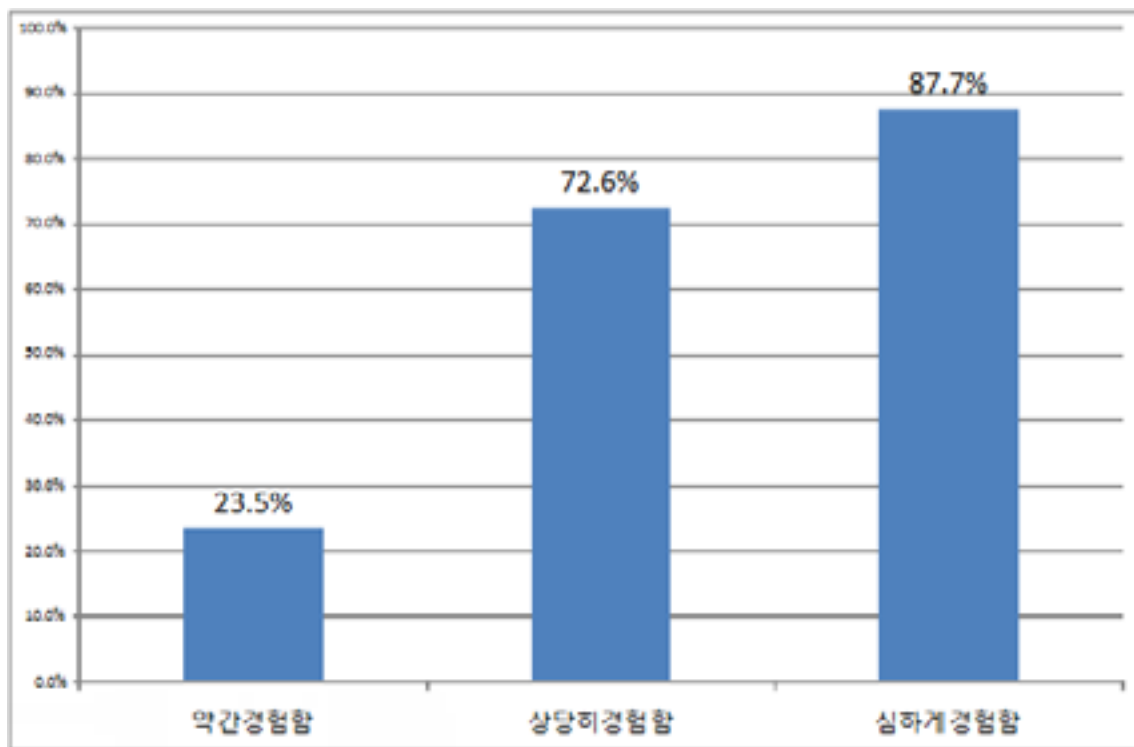


그림 헬기 소음 경험 수준에 따른 불안감 증상 유병률의 차이

4. 요약 및 결론

지난 2013년 6월 조사 결과에 비해 현재 송전탑 건설 저지 과정에서 한전, 시공사, 용역 직원, 경찰 등에게 무형의 학대나 폭력을 경험한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른 정신심리적 피해도 당시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일반인 평균보다 높은 우울 증상을 보인 이들은 87.3%, 일반인 평균보다 높은 불안 증상을 보인 이들은 81.9%였다. 이는 지난 2013년 6월 조사 결과에 비해 2배 정도 증상 유병률이 높아진 결과이다 (2013년 6월 조사 결과 일반인 평균보다 높은 우울 증상을 보인 이들은 40.5%, 일반인 평균보다 높은 불안 증상을 보인 이들은 48.1%였다). 2013년 6월에 비해 우울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특히 더 늘었다. 이는 초기 불안감이 주종이던 감정 상태가 우울감으로 전화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결과이다. 불안감에 비해

우울감은 만성화되고 고착되어 정신심리적 질병으로 전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보다 심각하다.

마을 주변을 날아다니는 헬리콥터 비행으로 인해 소음, 공포, 불안 등 신체적, 정신심리적 불편을 겪었는지 물어보았을 때, 응답자의 77.0%가 심하게 경험했다고 응답하여, 현재 주민들에게 헬기 소음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헬기 소음과 우울감 및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헬기 소음을 약간 경험한 군, 상당히 경험한 군, 심하게 경험한 군으로 나누어 우울감 및 불안감 증상 유병률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헬기 소음을 심하게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이들이 약간 경험했다고 응답한 이들에 비해 2.1배나 더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고, 3.7배나 더 불안 증상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는 헬기 소음이 지역 주민의 우울감 및 불안감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유추하게 하는 결과이다.

현재 헬기 소음은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우울감도 확산시키고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정신심리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당장 이러한 가해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